

월간

재정포럼

2024. May
Vol.335

05



권두칼럼

2025년 국가 예산, 건전재정
가능할까?
| 김용하

현안분석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
| 박정흠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
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장우현

정책연구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외

정책토론포트

2024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캄보디아 회의

2024년도 PEMNA 예산분과
마닐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 - IRA에 따라 시행한
신고지원서비스 성과 발표 외

Kipf

재정포럼

2024.05. Vol.335

월간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통권 제335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044) 414-2137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02 2025년 국가 예산, 건전재정 가능할까? | 김용하

현안분석

08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 | 박정흠

38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 장우현

정책연구

68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 전병목·김평식

72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최인혁·조희평

75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이은경·김평식

정책토론포트

78 2024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캄보디아 회의

88 2024년도 PEMNA 예산분과 마닐라 회의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102 미국 - IRA에 따라 시행한 신고지원서비스 성과 발표

『재정포럼』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포럼』은 환경부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ESG경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 예산, 건전재정 가능할까?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들어가며

5월이면 2025년 국가예산안 수립이 본격 시작된다. 8월 말에 다음 연도 국가예산안이 발표되지만, 국가 재정전략이 처음부터 잘 잡혀야 국가 예산안도 순항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재정 기조는 건전재정이다. 확장기조의 문재인 정부와는 확연히 다른 재정정책 방향이지만 구체적 실현 과정에서의 차별화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2025년 국가예산안의 의미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할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전적 정의로는, 재정수지가 평균적으로 균형 또는 흑자상태에 있거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상승하지 않고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어야 건전재정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당초 재정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4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2.8%로 잡은 것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한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1%, 2021년 8.9%, 2022년 8.9%로 5년 평균 8.7% 증가시켰다. 박근혜 정부 4년간 평균증가율 4.0%와 비교할 때 증가율이 2배가 되는 슈퍼예산 편성으로 일관했다. 현 정부는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동 기

간 증 평균 증가율을 3.6%로 억제하여 동 기간 경상 GDP 연평균 성장률 4.4%보다 낮게 계획함으로써 건전재정 의지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재정수지뿐만 아니라 통합재정수지도 적자 계획을 편성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놓은 구조적 재정 불균형의 여파로 볼 수 있다. 특히 2022년 예산 수립 시 문재인 정부는 국가채무를 2025년까지 GDP의 58.8%까지 늘릴 계획을 수립한 것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3%로 묶을 계획을 잡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가 GDP 대비 -3.9%인 92조원의 적자가 발생하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재정 기조를 전면 전환했다고 자평했지만 이를 건전재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기재정계획상의 최종연도에 건전재정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역대 정부가 해왔던 잘못된 관행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5년도 국가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는가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도 국가예산안이 어떻게 편성되는가는 윤석열 정부의 재정정책 성공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나라 재정: 전망과 과제

2025년의 나라 재정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것은 2023년 8월 말 국회에 제출된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이다. 2025년의 국가재정은 재정지출 684.4조원, 재정수입 661.5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22.9조원의 적자로 계획되어 있다.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험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72.2조원(GDP 대비 -2.9%)으로 적자는 다소 축소되고, 국가채무는 1,273.3조원(GDP의 51.9%)으로 늘어나게 편성됐다. 실제 2025년 예산안에서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 미만으로 편성 가능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금년과 동일하게 3.2%로 전망하고 있으나, 미국 경제는 2024년 2.7%에서 1.9%로 하향 전망하고, 중국 경제 역시 동 기간에 4.6%에서 4.1%로 하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로존은 0.8%에서 1.5%로, 일본은 0.9%에서 1%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제전망이 쾌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의 한국경제 성장률은 금년과 동일 수준인 2.3%로 전망했다. 국내외 경제전망 기관들이 2025년 성장률 전망을 내놓겠지만, IMF의 2.3%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건전재정이 되려면
재정지출을 충당 가능한
충분한 재정수입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고 가정할 때,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2.3% 내외, 물가상승률은 2.5% 내외로 예상하면, 경상 GDP 성장률은 4.5~5%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자체는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체감경기가 낮은 상황에서 정부 재정지출 증가율을 2024년과 같이 경상 GDP 성장률 이하로 내려 잡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5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 GDP 성장률 수준에서 잡으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는 2025년의 재정지출 증가율을 4.2%, 재정수입 증가율은 8.1%로 잡고 있다. 이 계획에서 0.5%p 정도 높은 수준이, 2025년도 경상 GDP 성장률에 상응한 재정지출 증가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2025년 재정지출을 부문별로 보면,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52.2조원으로 전년 대비 3.9%, 교육 예산은 95.7조원으로 6.7% 증가한다. R&D 예산이 27.6조원으로 6.4% 증가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SOC 예산은 2024년 대비 각각 1.1%, 0.1%로 잡았다. 국방 예산은 61.6조원으로 3.3%, 일반 지방행정 예산은 120.1조원으로 전년 대비 7.9% 높게 계획하고 있다. 2025년도 전체 재정지출 증가율을 4.2%로 계획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보건복지고용은 평균 증가율보다 낮게, 교육·R&D는 높게 계획하고 있다. 보건복지고용은 전체 재정지출의 평균보다 낮게 책정하기가 쉽지 않고, R&D는 금년도에 예산 감축에 따른 파동을 감안할 때 2023년도 예산 이상으로 복원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부문별로 보아도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 이하로 재정지출을 억제할 여력은 없어 보인다.

나가며: 건전재정의 확립과 감세정책의 재고

건전재정이 되려면 재정지출을 충당 가능한 충분한 재정수입이 확보되어야 한다.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상으로는 2025년 661.5조원의 재정수입을 401.3조원의 국세수입과, 30.9조원의 세외수입, 226.6조원의 기금 수입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세수입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2024년 1~3월 국세수입은 84.9조원으로 전년 대비 2.2조원이 적다. 부가가치세는 더 건졌지만, 법인세 수입이 전년 대비 5.6조원이 덜 걷혔고, 소득세도 0.7조원이 줄었다. 특

히, 2023년의 주요 기업별 영업손실로 누적된 적자액에 따른 이연 법인세가 삼성전자가 11.5조원, 하이닉스가 4.7조원이다. 2024년 세수도 걱정이지만, 2025년의 국세 수입을 계획대로 확보할 가능성도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윤석열 정부가 감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이대로라면 관리재정수지를 GDP 대비 3.0% 이하로 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는 지난 정부의 적자 확대재정 기조를 정상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적 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재정수입 확보가 필요하다. 2025년 국가예산안 수립 시 감세정책 방향을 여하히 수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균형재정을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의무적 지출의 급속한
증가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재정수입
확보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

박정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장우현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01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¹⁾



+ 박정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chpark@kipf.re.kr

1. 서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과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을 비롯하여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국제적 인기가 전례 없는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 소비는 관련 제품의 수출뿐만 아니라 방한 관광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2023년 4분기 조사 결과²⁾에 따르면 외국인관광객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에 대한 응답으로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를 선택한 응답자가 31.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6.7%의 응답자가 ‘한국 전통문화를 접하고 나서’를 선택하였다. 2018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방탄소년단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효과를 연평균 79.6만명으로 추정하기도 하였다.³⁾

실제로 ‘방한 외국인관광객(이하, 외국인관광객)’ 수는 2000년 532만명에서 2019년 1,750만명으로 20년간 약 3배 규모로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국제수지 상의 관광수입은 2000년 GDP의 1% 수준인 68.1억달러에서 2019년 GDP의 1.25% 수준인 207.5억달러로 증가하였다.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외국인관광객 수는 코로나19 위기 기간 급감하여 2021년 97만명으로 줄었으나 2023년에는 1,103만명을 기록하여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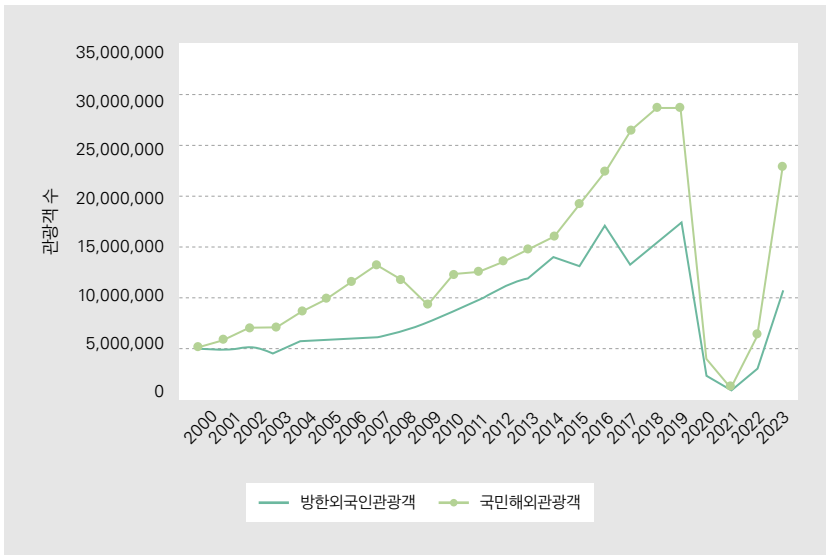
1) 본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노지영 선임연구원의 도움으로 작성함
2)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4분기 결과(잠정치)」, <https://datalab.visitkorea.or.kr/site/portal/ex/bbs/View.do?cbldx=1127&bclcdx=306889&pageIndex=1&cateCont=spt05>, 검색일자: 2024. 4. 8.
3) 정민·오준범·신유란·류승희,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8.
4) e-나라지표, 「관광수지 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57, 검색일자: 2024. 4. 8.

외국인관광객의 증가는 내국인의 해외관광 증가와 그 궤를 같이해왔으나 2015년 증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및 2017년 한·중 사드배치 갈등 등으로 인하여 그 상대적인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성장한 내국인의 해외관광에 비하여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그림 1] 참조). 이원희 외(2019)에 따르면 내국인 해외관광 증가의 주된 요인은 저비용 항공사 노선 확대이다. 이는 외국인의 국내관광 결정에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관광객 증가세가 내국인 해외관광객 증가를 따라잡지 못한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는 등 외국인의 한국관광이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한 요인 중에는 국가별 방한관광객 구성이 다변화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그림 1] 방한 외국인관광객 및 내국인 해외관광객 추이

(단위: 명)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한류 콘텐츠가 확산되는 등 외국인의 한국관광이 활성화되는 조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 증가세가 뚜렷하지 못한 요인 중에는 국가별 방한관광객 구성이 다변화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있다. 국가별 방한관광객 구성을 살펴보면 중국인과 일본인에 의존한 외국인관광 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50~60% 수준을 유지였으며, 2017년 한중 사드배치 갈등과 이후 코로나19 위기의 여파로 하락하였으나 2023년 40%대로 다시 상승하였다. 특히 2019년까지의 외국인관광객의 양적 증가는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세에 절대적으로 기대어 왔다.

외국인관광의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으면 사드배치 갈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동시에 코로나19 위기 이후 국제관광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 시점은 외국인관광 수요를 다변화하고 다소 정체되어 있는 방한 관광의 장기 추세를 회복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외국인관광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적기로 판단된다.

듯이 관광수입의 불안정성이 커지며 이는 관광산업의 꾸준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실제로 방한 외국인관광객 추이를 주변 국가들의 외래관광객 추이와 비교하면 지난 수십 년간 관광지로서 한국의 인기가 주변 국가들에 비하여 더 높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00년대 초반 외래관광객 수가 500만 명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하였으나 2010년대에 빠르게 성장하여 2019년에는 외래관광객 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외래관광객이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던 베트남과 인도는 2019년 한국의 외래관광객 수를 앞질렀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한국의 외국인관광객 증가세가 주변국보다 가팔랐으나 2010년대 일본인 관광객 감소, 2015년 메르스 및 2017년 사드배치 갈등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 등을 거치며 이와 같은 추세가 꺾인 것이 주변국의 관광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게 된 요인으로 보인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외국인관광 생태계가 장기적인 관광 발달을 저해한 측면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외국인관광객 증가세가 일본인관광객 감소, 중국인관광객 수요의 불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유지되지 못하는 동안 내국인의 외국관광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1년 이후 관광수지는 매년 적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중국인관광객이 급감한 2017년에는 관광수지 적자가 147억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였다(그림 2 참조). 이와 같이 외국인관광객의 꾸준한 증가 및 한류 콘텐츠의 확산 이면에는 주변국에 비하여 느린 관광객 증가세 및 관광수지 적자 등 정책적 고려를 필요로 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GDP에서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 2.5%로, 주요 관광국 중 하나인 일본의 2%보다 높을 정도로 적지 않은 만큼 효과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⁵⁾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높아지는 동시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이후 국제관광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현시점은 외국인관광 수요를 다변화하고 다소 정체되어 있는 방한관광의 장기 추세를 회복하여 정부에서 제시한 외국인관광 활성화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적기로 판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2023년을 “관광대국의 원년으로”⁶⁾ 삼을 것을 천명하며 외국인관광 활성화에 주력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학계 및 관련 정부 부처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분석 결과는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증감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하여 증거에 기반한 관광정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5) OECD Data, “Tourism GDP,” <https://data.oecd.org/industry/tourism-gdp.htm>, 검색일자: 2023. 11. 3.

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관광대국 원년으로”... 관광예산 1조2295억 투입」,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48910670#top50>, 검색일자: 2024. 4.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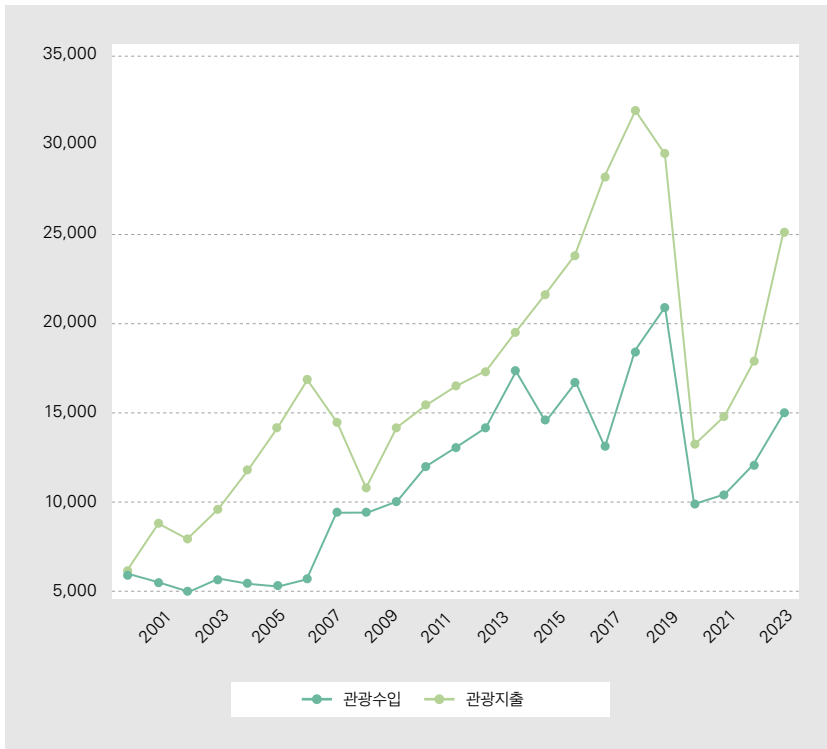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무역이론 및 관광수요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분석 결과 한국의 음반과 방송프로그램 수출은 모두 수입국가의 한국관광 증가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관광 활성화 정책의 타당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관광 부문 정책 중 콘텐츠 소비를 관광 수요로 연계하는 정책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관광 활성화의 골든타임을 살릴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 또한 부각되었다.

이어지는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한국의 외국인관광객 관련 현황 및 정책적 배경과 선행연구 등의 연구배경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제Ⅲ장에서는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논의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살펴보며 글을 마무리한다.

본고에서는 무역이론 및 관광수요 연구에서 흔히 쓰이는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그림 2] 2001~2022년 관광수지 추이

(단위: 백만달러)



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국제수지의 여행수지 중 일반여행수지를 따름
출처: 한국관광데이터랩, 「관광통계/실태조사>관광통계>관광수지」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getKorTursmBalcForm.do>, 검색일자: 2024. 4. 8.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2000년 500만명 수준에서 2019년 1,750만명 수준까지, 메르스와 사드배치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기간 급감하였으나 2023년에는 1,100만명 수준을 회복하였다.

II. 외국인관광 관련 정책 배경 및 선행연구

본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을 살펴 보기에 앞서 한국의 외국인관광 추이 및 관련 정책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살펴 본다. 관광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본고의 주된 내용이 아니지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서 수행한 정책들을 소개함으로써 이후 이루어질 분석과 더불어 관광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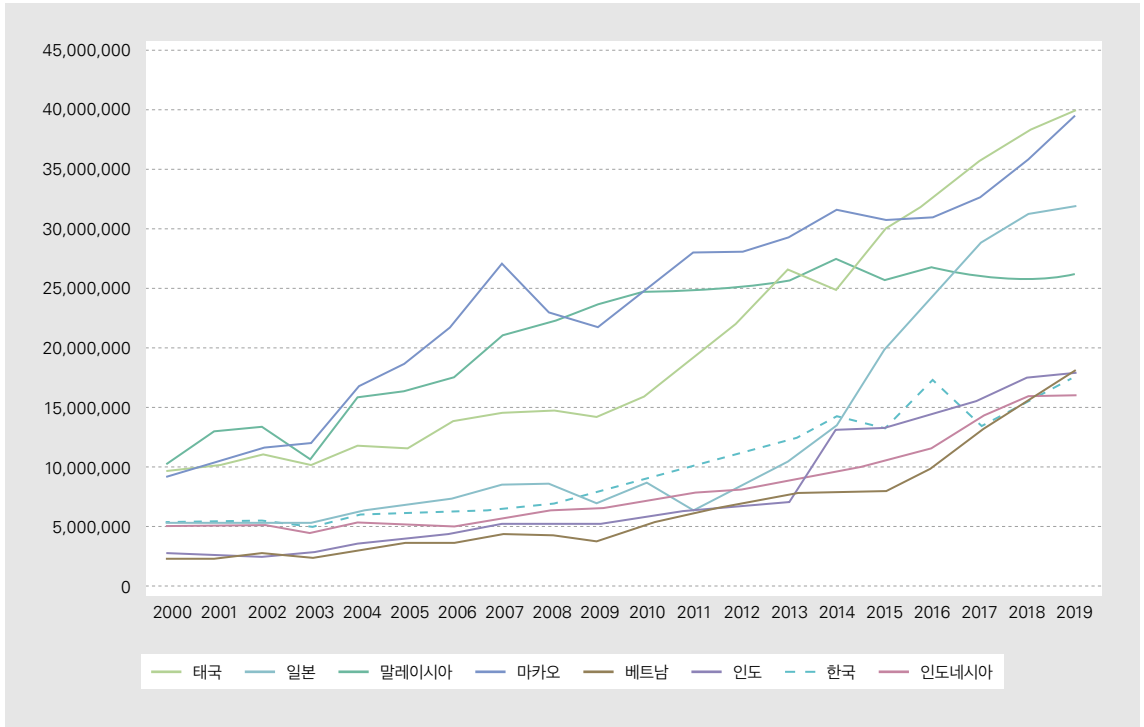
1. 외국인관광 현황 및 정책 배경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 500만명 수준에서 2019년 1,750만명 수준까지, 메르스와 사드배치 위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코로나19 위기 기간 급감하였으나 2023년에는 1,100만명 수준을 회복하였다. 이와 같은 국내 외국인관광 추이를 보다 넓은 시야에서 이해하기 위하여 아시아 주변국의 외래관광 추이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그림 3]은 아시아 국가 중 외래관광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중국과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 외래관광객 수 상위 10개국(2019년 기준)의 2000~2019년 외래관광객 추이를 제시한다. 그림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00만명 수준으로 한국과 비슷한 외국인관광객 수를 보였던 일본은 2010년대에 국제관광이 활성화되어 2019년에는 외래관광객 수가 한국의 2배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외래관광객이 한국의 절반 수준이었던 베트남과 인도는 2019년 한국의 외래관광객 수를 앞질렀다. 전통적 관광 강국이었던 태국 역시 2010년대에 외래관광객이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외국인관광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일본인 관광객 감소, 메르스 및 사드배치 위기를 거치며 주변국의 외래관광 성장에 못 미치게 되었다.

방한 외국인관광의 증가세가 둔화된 요인으로는 중국과 일본 관광객에 의존하는 외국인관광객 구성을 들 수 있다. 2005~2023년 국가별 방한관광객 구성을 자세히 살펴본 [그림 4]에 따르면 2013년 이전까지는 일본인, 그 이후에는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두 나라의 관광객이 전체 외국인관광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52%에서 2016년 60% 수준까지 상승한 이후 2017년 한·중 사드배치 갈등의 여파로 50%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코로

[그림 3] 아시아 주요국 인바운드 관광객 추이(중국, 홍콩 제외)

(단위: 명)



출처: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ternational tourism, number of arrivals,"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series=ST.INT.ARVL&country=#>, 검색일자: 2024. 4. 8.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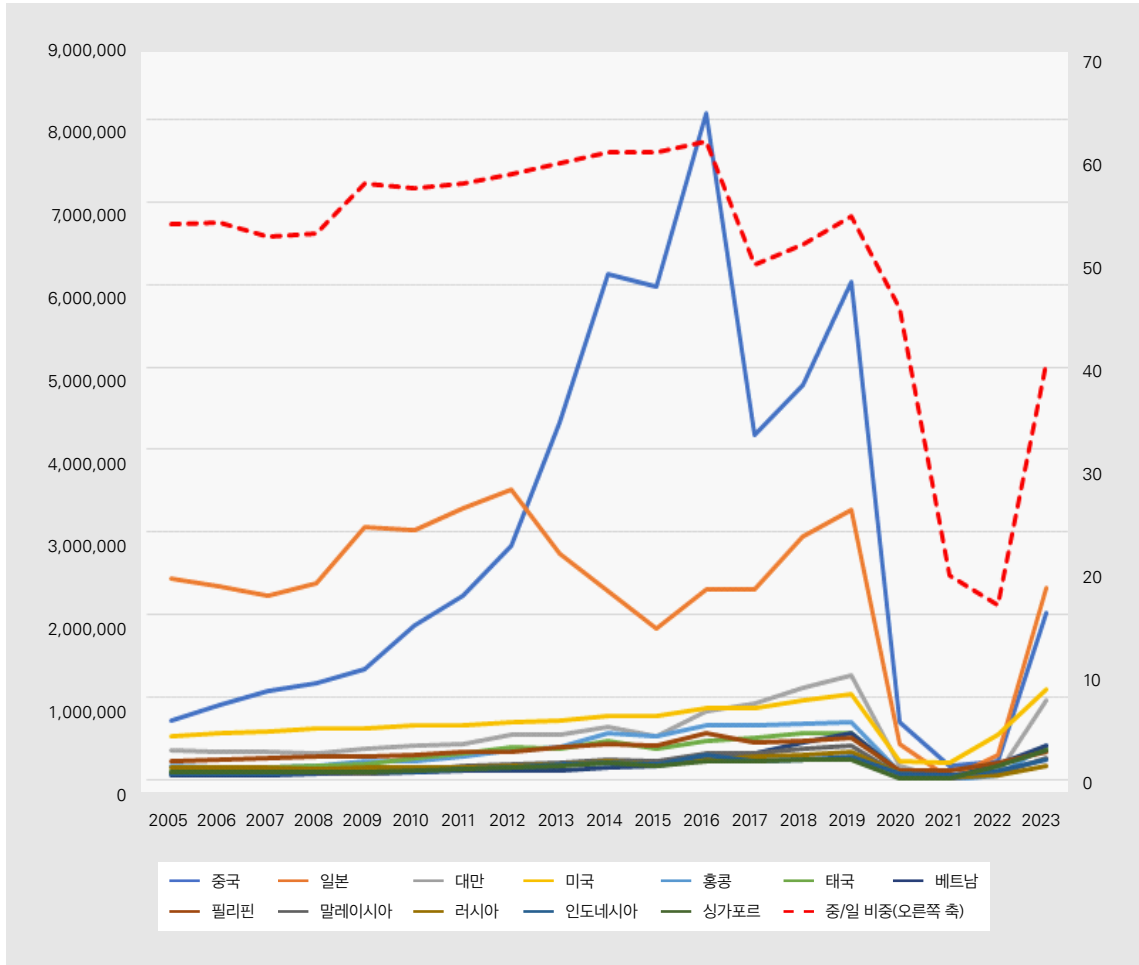
나19 위기 기간에는 10%대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3년에는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만과 미국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여 중국과 일본 관광객의 비중이 위기 이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후 관광객 구성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외국인관광객의 국적 편중 현상의 정도를 가늠해보고자 외국인관광객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보고자 한다. <표 1>에 따르면 일본 또한 중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비율은 26.5%로 한국의 절반 수준이며 그 뒤를 잇는 한국과 대만 관광객이 각각 21.2%와 17.3%를 차지하고 있다. 방한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중국이 50%를 상회하고 그 뒤를 일본과 대만이 각각 20%, 10% 수준에서 따르고 있다. 일본과 비교할 때 한국의 중국인관광객 의존도가 극도로 높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외국인관광은 2010년대 중반까지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일본인 관광객 감소, 메르스 및 사드배치 위기를 거치며 주변국의 외래관광 성장에 못 미치게 되었다.

[그림 4] 주요국별 방한 외국인관광객 추이

(단위: 명, %)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know.tour.go.kr/stat/tourStatSearchDis19Re.do>, 검색일자: 2024. 4. 8.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1> 일본의 주요국별 외래관광객 현황(2016년)

국적	여행객 수(명)	구성비(%)
중국	6,373,000	26.5
한국	5,090,300	21.2
대만	4,167,400	17.3
홍콩	1,839,200	7.7
미국	1,242,700	5.2
태국	901,400	3.7
호주	445,200	1.9
말레이시아	394,200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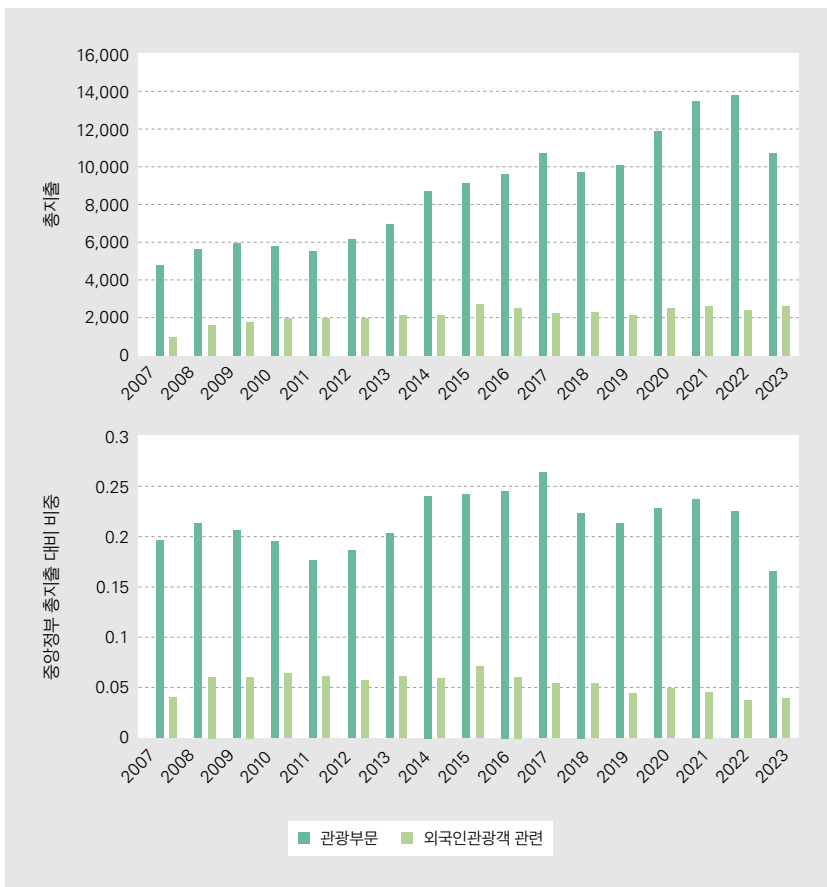
출처: JNTO, 『統計発表』, 2016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조아라(2018), p. 102, 표 5를 재구성

다음으로 외국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역대 정부는 꾸준히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를 성과지표로 하여 관광 활성화를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해왔다. 이명박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1천만명, 박근혜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1,600만명 달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2017년 사드배치와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제한을 거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을 제외한 방한관광객 850만명 달성을 제시하며 외국인관광객 다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역대 정부는 대체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꾸준한 외국인관광객 증가 추세에 힘입어 정부 출범 초기에 설정한 외국인관광객 목표를 달성하였다.

역대 정부는 꾸준히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를 성과지표로 하여 관광 활성화를 주요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해왔으며, 대체로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한 외국인관광객 수를 달성해왔다.

[그림 5] 관광부문 및 외국인관광객 관련 재정지출 추이

(단위: 억원, %)



주: 총지출 금액은 국회확정금액 기준

출처: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3. 11.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코로나19 위기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여
2027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천만명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여 2027년까지 외국인관광객 3천만명을 달성할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감염병 위기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외국인관광 활성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국제적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를 적극 활용하여 외국인관광객 추세를 끌어올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내었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감염병 위기로 피해를 입은 관광 업계 지원 및 인바운드 관광 생태계 회복,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등의 관광진흥정책을 계획하였다.

정부의 외국인관광객 증가 목표에 맞추어 관광부문 재정 투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였다. 정부의 관광부문 재정지출 추이를 제시한 [그림 5]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관광부문 총지출은 2007년 4,66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2년 1조 3,659억원에 달하였다. 다만 같은 기간 관광부문 지출이 총지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0.2~0.25% 수준을 유지하여 관광부문 재정투입이 타 부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관광부문 중 외국인관광 관련 지출은 2007년 946억원에서 2010년 2천억원 수준으로 상승한 이후 2022년까지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여, 외국인관광객 증가를 목표로 한 별도의 재정투입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 관광 부문 재정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은 1조 2,334억원 규모이며 4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표 2> 참조). 회계별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이 1조 574억원으로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은 각각 1,697억원, 68억원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주된 재원은 해외 여행객의 출국납부금과 카지노 사업자의 납부금으로, 내국인 해외여행객 증가 및 강원랜드 등 카지노 사업 활성화로 인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1972년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목적으로 기금이 도입된 당시와 달리, 현재는 관광지 개발 등 지역 개발의 성격을 가지는 사업이 기금사업의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소액다건식 일회성 사업이 많고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예산이 과다하며 성과평가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김희수, 2014).

관광부문 예산 중 외국인관광 관련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3,194억원 규모로 파악된다. 단위사업명을 기준으로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관광객

한국문화원 운영 등을 포함한다.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은 공예, 영화 등 문화콘텐츠 육성을 통한 교류 및 관광 확대를 지원하며, 홍보 사업은 해외 마케팅 및 광고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관광부문 중앙정부 사업 중 한류 콘텐츠와 직접적으로 관련한 사업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단위사업 내의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사업이다. 그 외 공예관광산업 육성 산업의 경우 공예와 한류 콘텐츠의 연관성이 높지 않고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사업은 오히려 해외 콘텐츠의 국내 촬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사업의 경우 그 내역사업으로 한류 콘텐츠를 이용한 한류관광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총예산 183억원 중 가장 많은 80억원이 한류관광 활성화에 배정되어 있다.

그 외 한류 콘텐츠와 관련한 사업의 대부분은 관광부문이 아닌 문화예술부

구체적으로 2023년 관광 부문 재정사업을 살펴보면 예산은 1조 2,334억원 규모이며 46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2> 2023년 중앙정부 관광부문 재정사업 목록

(단위: 천원)

회계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국회확정금액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MICE산업육성지원	32,8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의료 및 웰니스 관광 육성	13,23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육성	한국관광콘텐츠 활성화	18,34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사업 창업 지원 및 벤처 육성	61,904,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산업 인재발굴 및 전문역량강화	17,443,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26,156,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활성화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국민여가캠핑장조성(보조)	4,212,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자원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자원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사업 융자지원 (신용보증기관 출연)	10,0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관광산업 융자지원(융자)	449,1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전통문화체험 지원	35,048,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15,70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공간정보기반 실감형콘텐츠 융복합 및 혼합현실 제공 기술개발(R&D)	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R&D)	6,65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7,582,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0

<표 2>의 계속

회계명	프로그램명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국회확정금액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국내관광 역량 강화	47,693,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문화관광촉제지원(보조)	3,747,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국내관광육성지원	스마트관광 활성화	33,63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제주관광진흥기금 전출	580,000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내관광활성화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0,948,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공예관광산업 육성	4,975,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 션 시범지원	324,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2,247,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문화예술 해외교류	2,311,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5,568,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12,195,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협력을 통한 외래 관광객 유치	한스타일 육성지원	11,314,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고품질 관광기반 조성	40,564,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51,419,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한국관광 해외광고	31,733,000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89,953,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자원활성화	관광자원 기반조성	56,658,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기반확충	관광자원활성화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	2,750,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기반확충	광역관광자원개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5,500,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기반확충	광역관광자원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21,307,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기반확충	광역관광자원개발	지역관광 다양성 사업	5,150,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광진흥기반확충	광역관광자원개발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지역지원)	34,03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내관광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4,301,000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불법온라인도박 감시시스템 구축(정보화)	433,000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4,031,000
일반회계	외래관광객유치	국제관광교류	개발도상국 관광지도자 벤처마킹 사업연수(ODA)	1,234,000
일반회계	외래관광객유치	국제관광교류	관광외교역량강화(ODA)	346,000
일반회계	외래관광객유치	국제관광교류	지속가능관광 발전지원 사업(ODA)	805,000

주: 외국인관광 관련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은 굵은글꼴로 표기함

출처: 열린재정 상세재정통계(<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자료를 기준으로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23. 11. 2.

문 콘텐츠산업육성 프로그램하에 분류되어 있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재정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국정과제 중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의 정책목표 '한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와 'K-콘텐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탄탄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3>에서 콘텐츠정책국의 2024년 단위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에 5,081억원, 콘텐츠 전략산업육성에 3,185억원, 콘텐츠산업 기술지원(R&D)에 775억원 등이 배정되어 있다. 콘텐츠산업 진흥 관련 사업은 대체로 한류콘텐츠를 통한 외래관광 증가와 직간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K-콘텐츠 펀드 출자,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등은 한류 콘텐츠를 통한 외국인 관광 증가와 보다 높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을 통한 수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또한 외국인 관광과 연관성이 높다.

한류 콘텐츠와 관련한 사업의 대부분은 관광부문이 아닌 문화예술부문 콘텐츠 산업육성 프로그램하에 분류되어 있다.

<표 3>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세부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024년 예산
콘텐츠산업 진흥 환경 조성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2,555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74,233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	34,520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56,018
	K-콘텐츠 펀드 출자	340,000
	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ODA)	760
콘텐츠 전략산업 육성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86,342
	음악산업 및 대중문화산업 육성	47,069
	게임산업 육성	67,915
	신기술 융합콘텐츠산업 육성	30,131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육성	7,061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38,661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4,85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7,289
	게임물관리위원회 지원	14,400
이야기산업 활성화	4,800	
콘텐츠산업 기술 지원(R&D)	콘텐츠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450
	CT기반조성(R&D)	4,662
	문화기술 연구개발(R&D)	61,390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개발(R&D)	1,740
	문화체육관광 R&D기획평가관리(R&D)	4,950
	K-culture 글로벌스타트업 육성기술개발(R&D)	2,000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환경 구축핵심기술 개발(R&D)	2,300

주: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국 소관 세부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콘텐츠정책국 재정 집행계획(요약)」, 2024, <https://www.mcst.go.kr/>, p. 2

한류 콘텐츠와 관련된
관광부문 사업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내의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관광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처럼 한류 콘텐츠의 제작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존재하며 이는 직간접적으로 외국인관광에도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콘텐츠 사업의 직접적인 목표는 콘텐츠 수출 확대 및 양질의 콘텐츠 육성 등 콘텐츠 산업 진흥 지원으로, 관광객 증가 및 관광산업 진흥을 목표로 하는 관광부문 사업과는 그 목표와 수단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콘텐츠 산업 진흥과 구분되면서도 연계되는 콘텐츠 활용 관광 정책이 필수적인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관련된 관광부문 사업은 소규모로 운영되는 한국관광콘텐츠활성화 사업 내의 한류관광 활성화 사업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콘텐츠-관광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외국인관광 관련 조세정책의 경우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는 숙박비에 대한 세금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은 존재하지 않으며 반대로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등 관광객 대상 조세특례가 존재한다. 조세지출 예산서상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조세특례는 구체적으로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등이 있다.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2014년 신설 당시 2015년 3월 일몰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일몰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어 시행 중이며,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는 2015년 신설 당시 2017년 3월 일몰로 도입되었으나 이후 일몰이 2025년까지로 연장되어 시행 중이다.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는 2002년에 신설되어 현재로 일몰 없이 운용 중이다.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23억원과 48억원에 달하였으며 미용성형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에 대한 조세지출금액은 2016년 91억원에서 2020년 16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관련 조세지출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기간 급감하였으며 숙박용역 관련 조세지출은 더디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미용성형 의료용역 관련 조세지출은 2023년 216억원, 2024년 223억원 규모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의 조세지출 금액은 2011년 315억원에서 2016년 2,740억원까지 증가한 이후 다시 매년 감소하여 2020년 지출금액은 1,130억원이었고,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 2,268억원을 기록하였다. 해당 조세지출은 국내 여행객이 면세점에서 소비하여 받는 면세금액을 포함하므로 다른 두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표 4> 외국인 관광객 관련 조세지출 항목 개요

조세지출 항목	개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도입목적: 관광객 유치 지원 · 수혜자: 특례적용관광호텔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 관광객 · 수혜내용: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제출 시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본조신설: 2014. 1. 1. · 적용기한: 2025. 12. 31.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 도입목적: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기관 과세표준 양성화 · 수혜자: 특례적용의료기관에서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은 외국인 관광객 · 수혜내용: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제출 시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 본조신설: 2015. 12. 15. · 적용기한: 2025. 12. 31.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3 · 도입목적: 제주도 접근비용을 인하여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 도모 · 수혜자: 제주도 여행객 및 지정면세점 · 수혜내용: 제주도 내 지정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제주도 밖으로 휴대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개별소비세 주세 등 면제 · 본조신설: 2002. 4. 20. · 적용기한: 없음

출처: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내용 일부 수정

<표 5>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항목 연도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억원)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망)	2024년 (전망)
조특 제107조의2	신설	15.0	15.0	-	신설	23.0	48.0	28.0	1.0	2.0	5.0	5.0
조특 제107조의3				91.0	109.0	137.0	155.0	167.0	6.0	25.0	216.0	223.0

주: 1. 2011년도 조세지출 금액은 201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 실적치로 이후 금액도 해당연도의 실적치를 포함하는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됨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는 2014년 신설 당시 2015년 3월 31일을 일몰으로 도입되어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다가, 2017년 12월 19일 개정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었고 이후 일몰이 계속 연장되어 현재 2025년 12월 31을 일몰로 시행 중임

출처: 각 연도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 저자 작성

<표 6>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 특례 항목 연도별 조세지출 금액

(단위: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부가가치세	92.00	384.00	398.00	440.00	764.00	663.00	675.00
개별소비세	7.00	10.00	6.00	7.00	99.00	253.00	265.00
주세	165.00	228.00	300.00	315.00	378.00	1,345.00	862.00
교육세	51.00	71.00	92.00	96.00	143.00	479.00	338.00
합계	315.00	693.00	796.00	858.00	1,384.00	2,740.00	2,140.00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부가가치세	674.00	507.00	426.00	579.00	685.00	548.00	567.00
개별소비세	234.00	213.00	168.00	179.00	212.00	183.00	190.00
주세	361.00	355.00	412.00	882.00	1,054.00	956.00	988.00
교육세	178.00	107.00	124.00	265.00	316.00	287.00	294.00
합계	1,447.00	1,182.00	1,130.00	1,905.00	2,268.00	1,974.00	2,039.00

주: 2011년도 조세지출 금액은 2013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 실적치로, 이후 금액도 해당연도의 실적치를 포함하는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됨
 출처: 각 연도 조세지출 예산서 기준 저자 작성

콘텐츠산업육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콘텐츠 관련 기타 정부 정책 및 민간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의 콘텐츠 소비가 방한관광으로 연계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의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보이며, 지출규모의 등락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요인은 주세 특례금액의 변화이다. 이상의 내용은 <표 4>~<표 6>에 정리하였다.

이상으로 정부의 외국인관광 관련 정책을 총량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수의 재정사업이 다년간 안정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나 K-컬처를 활용한 관광대국 원년을 제시할 만큼의 뚜렷한 한류 콘텐츠 및 외국인관광 관련 재정투입이 드러나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사업내용도 역대 정부에서 이어져 온 MICE산업 및 의료관광 관련 지원사업, 인적교류사업, 홍보사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에서 크게 변화한 모습은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관광부문 사업 중에서 한류 콘텐츠를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콘텐츠산업육성 프로그램을 비롯한 콘텐츠 관련 기타 정부 정책 및 민간의 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여 해외의 콘텐츠 소비가 방한관광으로 연계되기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외국인관광 관련 선행연구

정부의 외국인관광 관련 정책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우선 관광 재정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김성윤·이충훈(2022)은 출국납부금 조정, 관광세 준조세 신설 등 관광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김희수(2021; 2014)는 정부의 관광부문 재정운용체계를 분석하여 융자사업 확대 및 기금사업의 관광사업 집중 재편 등을 제안하였다. 윤소영 외(2021), 한국재정학회(2020) 등은 보다 넓은 문화예술분야 기금 관리 방안을 분석한 바 있다. 김영준·박종웅(2018), 박종웅·김영준(2019), 윤주(2019), 김동현(2020) 등은 효과적인 관광 정책 성과평가를 통한 재정운용체계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외국인관광객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분석한 연구는 정다운 외(2020), 송민경 외(2023) 등이 있다. 미용성형 의료용역 특례를 연구한 정다운 외(2020)는 조세특례 도입의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분석하였으며 숙박용역 특례를 분석한 송민경 외(2023)는 해당 제도가 관광객의 만족도 및 재방문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분석과 보다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선행연구는 외국인관광수요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이다. 관광수요 결정요인 분석방법론 중 양적분석방법론은 크게 시계열분석 방법론과 중력모형을 포함한 인과적 회귀분석 모형으로 나누어

지며 최근에는 기계학습 방법론도 대두되고 있다. 시계열분석 방법론은 주로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하여 미래 관광수요를 예측하며 인과적 회귀분석 모형에 비하여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과적 회귀분석 모형은 특정한 요인이 관광객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시계열분석 방법론으로 방한 관광 수요를 예측한 연구로는 김태구·송두석(2006), 이충기·송학준(2007), 김혁수(2009), 윤설민·황순애·이충기(2009), 박득희·이계희·이민정(2015) 등이 있다. 시계열분석 방법론은 과거 관광객 추이를 바탕으로 미래 관광객 수를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본고의 관심인 콘텐츠 수출이 관광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처럼 특정 요인이 관광에 인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인과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인과적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이러한 인과적 모형을 도입한 국내연구는 보다 적은데, 모수원(2009)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내국인의 해외관광을 분석하였으며 김상혁·신지음(2022)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아시아 주요국의 방한 관광 추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김상혁·신지음(2022)은 한국 화장품, 음반 및 농식품 수출액을 종합한 한류 콘텐츠의 국가별 수출액 이용하여 아시아 주요국 관광수요를 예측한 결과 한류 콘텐츠가 관광객 증가에 양의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해당 연구의 경우 화장품, 음반 및 농식품 수출액의 영향을 각각 분석하기보다는 이를 모두 종합한 하나의 한류 콘텐츠 수출 지표를 계산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각 한류 콘텐츠 분야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알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고의 분석에서는 음반 수출과 영상물 수출에 집중하여 각각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 관광객 증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이를 두었다. 또한 아시아 주요국에 더하여 북미와 유럽, 호주의 주요 한류 콘텐츠 수입국을 분석에 포함하여 총 19개국의 관광객 추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하여 콘텐츠 수출을 통한 외국인관광 증대 효과가 다양한 지역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와 관련한 함의를 도출한다. 선행연구와의 또 다른 차이점은 콘텐츠 수출의 효과가 2~3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을 포함하며 또한 국가별 선행추세를 통제하는 등 계량 분석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도입했다는 데에 있다.

시계열분석 방법론은 주로 과거 추세 분석을 통하여 미래 관광수요를 예측하며 인과적 회귀분석 모형에 비하여 높은 예측력을 가지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인과적 회귀분석 모형은 특정한 요인이 관광객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장점이 있다.

본장에서는 중력모형에
기반한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이 방한 외국인
관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Ⅲ.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

1. 연구자료 및 방법론

본장에서는 중력모형에 기반한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이 방한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중력모형은 경제학에서 국제무역을 분석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론으로, 국가 간 교역량이 마치 고전물리학에서 설명하는 중력과 유사하게 각 국가의 인구, GDP 등 '질량'에 비례하고 국가 간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Anderson(1979), Bergstrand(1985; 1989), Helpman and Krugman(1985) 등 국제무역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정립되었다. Morley et al.(2014)은 중력모형을 통하여 무역이 아닌 관광의 흐름을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정립하였다. 그 결과 최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국제관광을 설명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관광분야 학술연구를 대상으로 메타연구를 진행한 Rossello Nadal and Gallego(2022)에 따르면 분석대상 연구의 52%는 단순선형회귀모형을, 20%는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하며 연구자들은 그 외에도 확률효과모형, 동적패널모형, 공간모형 등을 사용하여 중력모형을 분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순선형회귀모형과 패널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이 국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과 가장 밀접한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음악, 화장품, 음식 등 한류 콘텐츠 수출이 아시아 주요국 관광객 유입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김상혁·신지음(2022)의 연구이다. 해당 연구와 본 분석의 주된 차이는 아시아 주요국에 더하여 한류 콘텐츠 주요 수출국 19개국의 외국인관광객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는 점과 한류 콘텐츠 중 한국 방송프로그램의 국가별 수출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한다는 점, 총수출액 및 국가 간 거리 등 일반적으로 중력모형에 사용되는 변수를 보다 풍성하게 통제하였다는 점, 강건성을 위하여 국가별 관광트렌드를 통제하였다는 점 등이다.

기본적인 회귀모형은 아래의 수식을 이용한다.

$$\ln(y_{i,t}) = \alpha + \beta_1 \ln(TV_{i,t-1}) + \beta_2 \ln(K - Pop_{i,t-1}) + \gamma \ln(X_{i,t}) + \epsilon_{i,t} \quad \text{식(1)}$$

이때 $y_{i,t}$ 는 i 국가의 t 년도 방한관광객 수, $TV_{i,t-1}$ 은 한국의 i 국에 대한 $t-1$ 년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K-Pop_{i,t-1}$ 은 음반 수출액, $X_{i,t}$ 는 i 국의 인구, GDP, 한국과의 거리, 총수출액을 포함하며, 이 외에 2015년 더미(메르스), 2017년 중국 더미(사드), 2020~2021년 더미(코로나19)를 추가로 통제하였고, $\epsilon_{i,t}$ 는 국가 단위에서 균집한 표준오차를 뜻한다. 본 모형은 Rossello Nadal and Gallego(2022)이 제시한 중력모형의 주요 설명변수 중 한국 관광 분석에서 유효한 대부분의 변수를 포함하며, 일반적인 중력모형이 설명하는 관광객 유입 외에 한류 콘텐츠 수출이 추가적으로 해당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하지만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경제학 모형의 특성상 주어진 설명변수만으로는 고전물리학의 중력이론만큼의 정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분석에 누락한 변수에 기인한 추정 편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가별 선형추세를 통제한 모형을 분석한다. 다만 해당 모형의 경우 한류 콘텐츠 수출액의 국가별 증감이 해당 국가 외국인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콘텐츠 수출액의 국가 간 차이를 설명변수에 포함하는 기본모형에 비하여 설명범위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다. 국가별 선형추세를 포함한 모형의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ln(y_{i,t}) = \alpha + \beta_1 \ln(TV_{i,t-1}) + \beta_2 \ln(K-Pop_{i,t-1}) + \gamma \ln(X_{i,t}) + \lambda_i t + \epsilon_{i,t} \quad \text{식(2)}$$

식(1)과의 차이점은 국가별 선형추세인 $\lambda_i t$ 가 포함되었으며 국가별 통제변수에서 시간에 따른 변화가 적은 인구 및 한국과의 거리가 제외되었다.

분석에 사용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의 「입국관광 통계」 2005~2022년 자료를 통하여 국가별 방한관광객 수를 파악한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에서 주요 국가별 연도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 자료를 구축한다. 해당 자료의 경우 모든 국가에 대한 수출액이 상세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본 분석에서는 분석기간 대부분에 대하여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19개국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19개국 중에도 분석기간 중 수출액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어, 해당 하는 관측은 추후 회귀분석에서 탈락하였다. 분석 대상국은 대만,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미국,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호주, 이탈리아, 인도

본 모형은 일반적인 중력모형이 설명하는 관광객 유입 외에 한류 콘텐츠 수출이 추가적으로 해당 국가로부터의 관광객 유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음반수출과 온라인을 통한 음악 소비의 증감이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하여 음반 수출액 증감을 K-팝 소비 증감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해당 가정이 위배될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프랑스, 필리핀, 홍콩 이상 19개국이다. 방송산업실태 조사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자료는 지상파방송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 프로그램의 국가별 수출입 편수 및 금액을 구분하여 제공하는데, 본고의 분석에서는 지상파방송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프로그램 수출금액을 합하여 국가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을 계산한다. 물론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곧 방송프로그램의 실제 소비량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한계가 있지만 소비가 뒷받침 되지 않는 경우 수출액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므로 수출액이 소비량을 신뢰성 있게 근사한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한다. 실제로 국가별 수출액의 연도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음반 수출액 자료는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의 음반 수출액 자료를 활용하였다. 다만 해당 통계의 경우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실적은 포함하고 있지 않아 국가별 K-팝 소비량을 과소추정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본고의 분석에서는 음반수출과 온라인을 통한 음악 소비의 증감이 유사한 추세를 보인다고 가정하여 음반 수출액 증감을 K-팝 소비 증감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해당 가정이 위배될 수 있어 결과 해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 외 국가별 통제변수는 국가통계포털에서 제공하는 월드뱅크 국가별 통계의 인구 및 GDP 자료를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중력모형을 구성하는 국가별 총수출액 및 한국과의 거리 자료는 CEPII의 「Gravity」 자료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2. 기초자료 분석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본 연구를 위하여 구축한 관광 및 중력모형 자료의 기초통계량을 살펴본다. 우선 [그림 6]의 대륙별 외국인관광객을 살펴보면 아시아 출신 관광객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북미, 유럽, 호주, 중남미, 아프리카 순으로 이어진다. 2019년 기준 방한 외국인관광객 중 아시아 국가에서 온 관광객은 전체 외국인관광객의 83%를 차지한다. 관광객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대륙에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아시아 관광객은 2005~2008년 500만명 수준에서 유지되다가 2009년부터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1천만명을 돌파한 뒤, 메르스와 사드 위기를 거치며 1,000만~1,500만명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급감한다.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 또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북미와 유럽 관광객은

2005~2019년 기간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각각 60명, 50만명 수준에서 110명, 100만명 수준으로 2배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같은 기간 오세아니아 관광객은 6만명에서 17만명으로, 중남미 관광객은 2만명에서 10만명으로, 아프리카 관광객은 2만명에서 6만명으로 증가하며 골고루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그림 7]의 국가별 관광객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시아에서는 2012년까지 일본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으나 2013년부터 중국인 관광객이 앞선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 다음으로는 대만, 홍콩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의 성장세가 2015년과 2017년 메르스와 사드 여파로 꺾인 후 반등하였

대륙별 외국인관광객을 살펴 보면 아시아 출신 관광객이 절대적으로 많으며 북미, 유럽, 호주, 중남미, 아프리카 순으로 이어진다.

[그림 6] 대륙별 외국인관광객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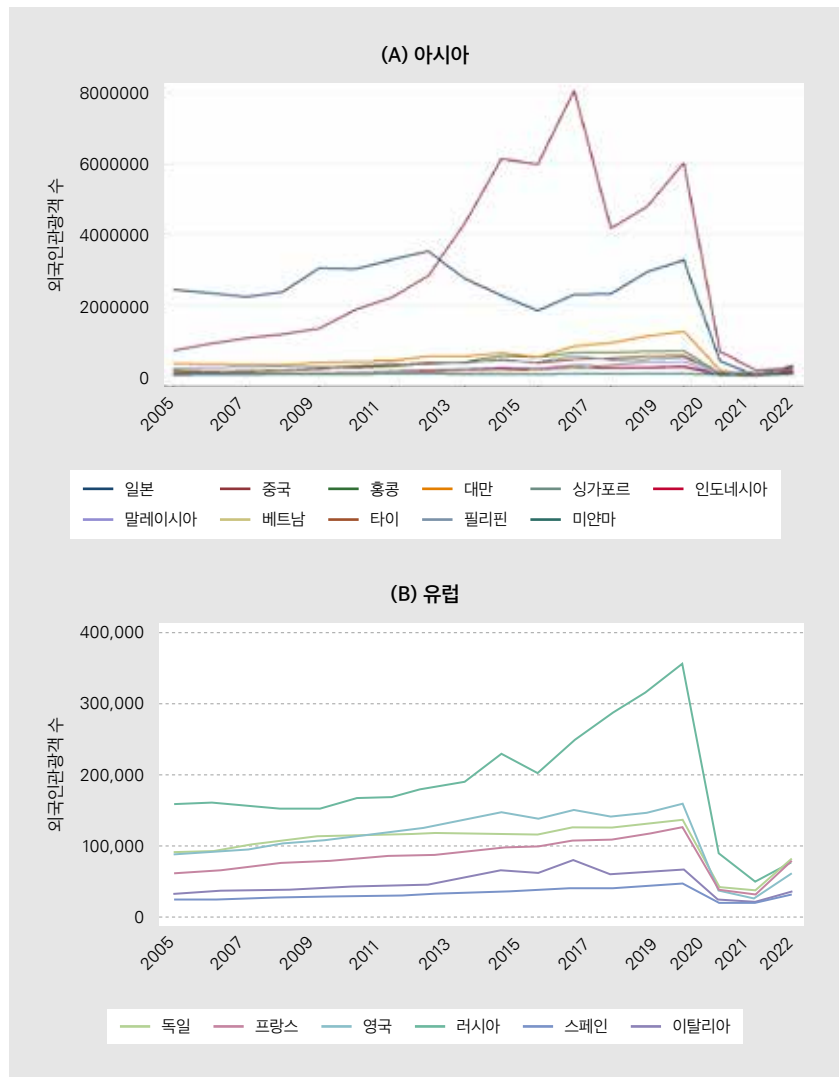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유럽 주요국 관광객의 경우, 대체로 2019년 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후 2020~2021년 급감하였으나 2022년 반등세는 아시아 국가들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으나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급감한 후 2022년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은 2013~2015년 감소하였으나 이후 코로나19 위기 전까지 상승하였다. 대만과 기타 국가들의 경우 대체로 메르스 시기인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19년까지 꾸준히 방한관광객 수가 증가하였다. 유럽 주요국 관광객의 경우 러시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후 2020~2021년 급감하였으나 2022년 반등세는 아시아 국가들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 주요 국가별 외국인관광객 추이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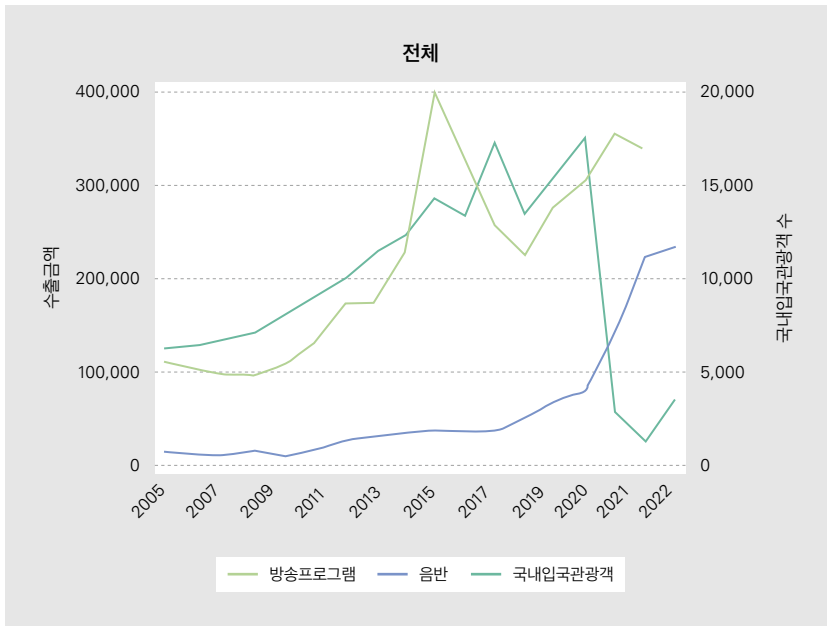
출처: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다음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 추이와 외국인관광객 추이를 비교하여 제시한 [그림 8]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수출금액과 방한 외국인관광객 수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음반 수출금액 역시 관광객 증가세와 유사한 추이를 보이거나 사드 갈등으로 인한 중국의 제재의 여파가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콘텐츠 수출금액과 관광객 추이를 대륙별로 비교한 [그림 9]의 경우에도 유사한 패턴이 드러난다. 다만 북미의 경우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방송 수입 급증이 포착되어 순수한 지역 내 한국 방송 콘텐츠 소비 패턴 파악이 어렵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17년 이후 본격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한류 콘텐츠 소비 확산의 영향이 아직 관광객 유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한편 한류 콘텐츠 소비 증가 시기와 코로나19 위기 기간이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콘텐츠 소비의 관광객 증가 효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회귀분석 진행 시 이 같은 한계로 인한 편의 발생 가능성 검증을 위하여 코로나19 위기 기간인 2020년 이후를 제외한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

다음으로 한류 콘텐츠 수출 추이와 외국인 관광객 추이를 비교하여 제시한 [그림 8]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국내 방송프로그램의 수출금액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8] 콘텐츠 수출과 외국인관광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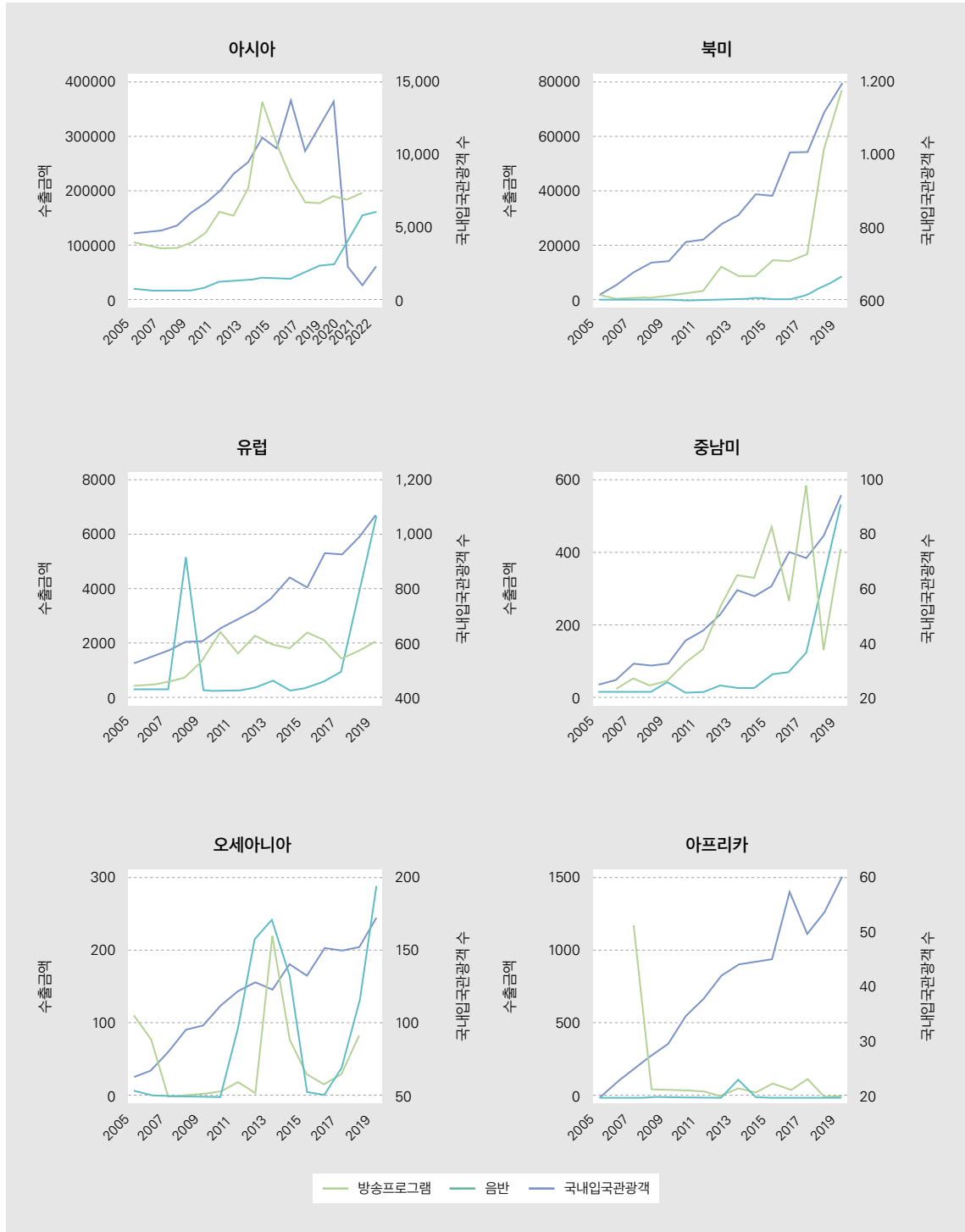
(단위: USD 1,000, 천명)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9] 대륙별 콘텐츠 수출과 외국인관광객 추이

(단위: USD 1,000, 천명)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각 연도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각 연도 자료,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3. 분석 결과

<표 7>은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1~4열은 국가별 선형추세 통계가 없는 모형, 5~8열은 국가별 선형추세를 통계한 모형의 분석 결과를 뜻한다. 그중 1·2·5·6열은 전체 연도 분석, 3·4·7·8열은 2020년 이전 표본 분석 결과를 나타내며, 또한 2·4·6·8열은 2년 전과 3년 전 콘텐츠 수출금액이 포함된 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체로 방송프로그램 수출금액과 음반 수출금액 모두 관광객 수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1열의 기본모형 추정 결과에 따르면 특정 국가의 전년도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외국인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에 대한 회귀계수는 0.176으로 추정되었다.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모두 자연로그를 취하였으므로 해당 계수는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1% 증가할 때 외국인 관광객 수는 0.176%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수출액 1% 증가의 의미를 가늠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출액과 관광객 수를 표준화하면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이 1표준편차(2.54%) 증가할 때 해당 국가의 방한관광객이 0.3표준편차($0.45\% = 2.54\% \times 0.176$)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음반 수출액의 경우 회귀계수가 0.074로 방송프로그램에 비하여 작게 나타났으며, 이는 음반 수출액이 1표준편차(2.78%) 증가할 때 외국인관광객은 0.14표준편차(0.21%)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프로그램 및 음반수출액이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음반 수출액의 경우 앞서 언급하였듯이 최근 음악 소비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등 온라인 실적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실제 국가별 K-팝 소비 증감을 포착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표 7>의 2·4·6·8열에서는 한류 콘텐츠 소비가 관광으로 이어지는 데에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도록 허용한 모형의 추정 결과를 제시한다. 해당 모형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직전연도 콘텐츠 소비에 비하여 그 효과는 작지만 2~3년 전 콘텐츠 소비 역시 관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중력모형을 구성하는 GDP, 인구, 총수출액의 추정계수는 모두 모형에서 예상하는 방향의 추정 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포함 여부 및 국가별 선형추세 포함 여부에 상관없이 강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통적 한국관광객 유입국이 아닌 비아시아 국가의 경우, 아시아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방송프로그램
수출금액과 음반
수출금액 모두 관광객
수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아시아 국가의 경우 방송프로그램 수출액만 관광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의 관광객과 다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아시아 국가를 제외한 회귀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별 선형추세를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 모두 방송프로그램 수출액만 관광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와 달리 음반 수출액은 비아시아 국가 관광객 증가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표 7>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

구분	1	2	3	4	5	6	7	8
L1.TV	0.176***	0.061**	0.162***	0.047*	0.107***	0.053*	0.073***	0.034
L2.TV		0.048		0.040		0.026		0.009
L3.TV		0.049		0.063***		0.051		0.027
L1.K-POP	0.074**	0.086***	0.069**	0.076***	0.045	0.055*	0.045**	0.042***
L2.K-POP		0.048**		0.035*		0.038*		0.016
L3.K-POP		0.038		0.048**		0.002		0.007
GDP	0.137	-0.052	0.200*	0.032	0.713***	0.412	1.057***	1.313***
인구	0.341***	0.301***	0.287***	0.240***				
거리	-0.381***	-0.176*	-0.463***	-0.274**				
L1.수출액	0.176**	0.126	0.272***	0.212***	0.473***	0.572***	0.206*	0.213
메르스	-0.037	-0.130	-0.046	-0.066	-0.074	-0.177	-0.047	-0.070
사드	-0.296**	-0.342***	-0.354**	-0.308***	-0.214*	-0.261**	-0.392***	-0.396***
코로나19	-2.434***	-2.891***			-2.537***	-2.838***		
분석표본	전체	전체	<2020	<2020	전체	전체	<2020	<2020
표본크기	217	146	185	119	217	146	185	119
국가별 선형추세	X	X	X	X	O	O	O	O

출처: 저자 작성

<표 8>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에 미친 영향(아시아 제외)

구분	1	2	3	4
L1.TV	0.132***	0.063**	0.096***	0.051**
L2.TV		0.024		0.039**
L3.TV		0.006		0.032*
L1.K-POP	0.016	0.039	-0.008	-0.004
L2.K-POP		-0.014		-0.011
L3.K-POP		0.002		-0.039
GDP	0.024	0.518	-0.080	0.154
인구	0.247	0.026		
거리	-1.165	1.604		
L1.수출액	0.609***	0.483**	0.395	0.221
메르스	-0.076	-0.034	0.026	-0.046
코로나19	-1.842***	-1.898***	-1.867***	-1.688***
분석표본	전체	전체	전체	전체
표본크기	71	42	71	41
국가별 선형추세	X	X	O	O

출처: 저자 작성

IV. 결론

최근 K-팝과 K-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가 전례 없는 규모로 국제사회에서 소비되고 있다. 자연스럽게 한류 콘텐츠에 영향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일본 등 주변국에 비하여 더디게 발전하고 있는 외국인관광 활성화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정부의 외국인관광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음반 및 방송프로그램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국가별 방송프로그램과 음반 수출액이 해당 국가로부터의 방한 관광객 수에 미친 영향을 분석결과 한류 콘텐츠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통계적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방송프로그램과 음반 수출액이 각각 1% 증가할 때 외국인관광객은 각각 0.176%와 0.074% 증가하였으며, 이를 표준화하면 방송프로그램과 음반 수출이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외국인관광객은 각각 0.3표준편차, 0.14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대상국을 비아시아 국가로 제한할 경우에는 방송프로그램 수출만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관광 활성화 정책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비아시아권 국가에서도 한류 콘텐츠에 따른 한국 관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국인관광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에도 한류 콘텐츠를 이용한 마케팅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아시아권 국가로의 콘텐츠 수출액 증가세가 2017년 이후 뚜렷하게 높아진 점과 코로나19 이후 관광 회복세가 중국·일본을 제외한 국가에서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외국인관광객의 국적 분포가 다변화되어 한국의 외래관광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관광부문 정책 중 해외의 콘텐츠 소비를 관광 수요로 연계하는 정책은 다소 제한적이다. 콘텐츠 관련 정책은 콘텐츠 제작 및 수출, 마케팅 지원 등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 개발은 간접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영향을 주지만, 콘텐츠산업 관련 정책에 더하여 해외의 콘텐츠 소비를 관광으로 유도하는 관광산업 관련 정책이 연계성 있게 개발된다면 콘텐츠 소비를 통한 관광객 증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본고에서는 정부의 외국인관광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음반 및 방송 프로그램 수출이 외국인관광객 증가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외국인관광 활성화 가능성을 가늠해보았다.

외국인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의
국적 다변화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지역적 다변화
또한 필수적이므로
시의성 있는 콘텐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되 각 지역별 외
국인관광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
이다.

방한 외국인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콘텐츠 정책과 관광 정책이 분리된 구조에서 벗어나 콘텐츠와 관광을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고의 분석은 한류 콘텐츠 수출의 영향을 확인하였을 뿐, 콘텐츠 및 관광 관련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추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개별 정책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모색해야 한다.

한편 콘텐츠에 치중한 외국인관광 정책은 서울에 집중된 한류 콘텐츠의 특성상 외국인 관광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저가항공사의 지방공항 출항 확산과 양질의 숙박업소 확대, 지역 간 교통연결성 강화 등 효과적인 지역관광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방공항을 통한 외국인관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관광객이 편하게 지방을 여행할 수 있는 교통, 숙박 및 기타 여행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수도권에 외국인관광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관광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행객의 국적 다변화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지역적 다변화 또한 필수적이므로 시의성 있는 콘텐츠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되 각 지역별 외국인관광객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현, 『코로나19 대응 관광분야 재정지원 정책 효과 분석 모형 개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 김상혁·신지음, 「중력모형을 이용한 한류 콘텐츠가 방한 외래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제37권 제4호, 2022, pp. 113~130.
- 김성윤·이충훈, 『관광재정 확충 및 효율성 제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 김태구·송두석, 「ARIMA 모형을 적용한 외국인 이용객 호텔객]실 수요예측모형 선정: 서울 특1급 호텔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제15권 제5호, 2006, pp. 97~118.
- 김영준·박종웅, 『문화 관광 재정사업 평가체계 개선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김혁수, 「국제회의의 방문자 수요예측 사례연구」, 『호텔경영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9, pp. 325~336.
- 김희수, 『관광부문 재정운용체계 개편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 _____, 『관광활동의 소비 및 세수 증대 기여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모수원, 「중력모형을 이용한 아웃바운드 관광수요의 추정」, 『호텔관광연구』, 제11권 제2호, 2009, pp. 137~144.
- 박득희·이계희·이민정, 「방한 중국 관광객 수요 예측모델의 비교 연구」, 『관광연구저널』, 제29권 제3호, 2015, pp. 29~40.
- 박종웅·김영준, 『문화체육관광부 재정사업 자체평가 체계화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송민경·박상곤·김현환, 「호텔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의 비경제적 효과 분석」, 『관광진흥연구』, 제11권 제3호, 2023, pp. 119~143.
- 윤소영·정보람·김정훈·정원희·황아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문화재정 대응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1.
- 윤설민·황순애·이충기, 「호텔산업의 합리적 수요예측 방법에 관한 연구: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 간 예측치의 정확도 비교」, 『호텔경영학연구』, 제18권 제1호, 2009, pp. 1~16.
- 윤주, 『지역관광개발사업 평가 모니터링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이원희·박주영·조아라, 『관광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0-202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이충기·송학준, 「최적 시계열 수요예측 모델선정에 관한 연구」, 『관광학연구』, 제31권 제6호,

2007, pp. 289~311.

조아라, 『일본 관광정책 분석과 시사점 - 아베정권의 정책 추진을 중심으로 -』, 『문화역사지리』, 제30권 제1호, 2018, pp. 97~110.

정다운, 『2019 조세특례 하반기 임의심층평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세 환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정민·오준범·신유란·류승희, 『방탄소년단(BTS)의 경제적 효과』, 현대경제연구원, 2018.

한국재정학회, 『문화예술진흥기금 신규재원 마련 방안 연구』, https://e-archive.bscf.or.kr/27_policy/02_policy.php?idx=985&pmode=view&path=MjAkJCQkJCQ%3D, 2020.

Anderson, James 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9(1), 1979, pp. 106~116.

Bergstrand, Jeffrey H., "The Gravity Equation in International Trade: Some Microeconomic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67(3), 1985, pp. 474~481.

Bergstrand, Jeffrey H., "The Generalized Gravity Equati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Factor-proportions Theory in International Trad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71(1), 1989, pp. 143~153.

Helpman, Elhanan, and Paul Krugman, *Market Structure and Foreign Trade*, MIT Press, 1985.

Morley, Clive, Jaume Rosselló, and Maria Santana-Gallego, "Gravity Models for Tourism Demand: Theory and Use," *Annals of Tourism Research*, 48, 2014, pp. 1~10.

Rossello Nadal, Jaume, and María Santana Gallego, "Gravity Models for Tourism Demand Modeling: Empirical Review and Outlook,"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6(5), 2022, pp. 1358~1409.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2005~2022, https://tradedata.go.kr/cts/index_eng.do, 검색일자: 2023. 11. 2.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입국관광통계」, <https://know.tour.go.kr/stat/entryTourStatDis19Re.do>, 2005~2022. , 검색일자: 2024. 4. 8.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2013~20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올해 관광대국 원년으로”…관광예산 1조2295억 투입」, <https://www.korea.kr/news/estNewsView.do?newsId=148910670#top50>, 검색일자: 2024. 4. 8.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콘텐츠정책국 재정 집행계획(요약)」, 2024, https://www.mcst.go.kr/kor/s_data/budget/budgetView.jsp?pSeq=941&pMenuCD=0413000000&pCurrentPage=1&pTypeDept=&pType=&pSearchType=01&pSearchWord, 검색일자: 2024. 5. 9.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산업실태조사」, 2005~2022, <https://kcc.go.kr/user.do?page=A02060100&dc=K02060100&boardId=1027&searchKey=ALL&searchVal=%EB%B0%A9%EC%86%A1%EC%82%B0%EC%97%85%20%EC%8B%A4%ED%83%9C%EC%A1%B0%EC%82%AC>, 검색일자: 2023. 11. 2.
- 열린재정, 「재정분석통계」, <https://www.openfiscaldata.go.kr/op/ko/sd/UOPKOSDA01>, 검색일자: 2023. 11. 2.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2000~2023,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getEntcnyFrngCust2Form.do>, 검색일자: 2023. 11. 2.
- 한국관광데이터랩, 「관광통계/실태조사>관광통계>관광수지」, <https://datalab.visitkorea.or.kr/datalab/portal/ts/getKorTursmBalcForm.do>, 검색일자: 2024. 4. 8.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3년 외래관광객 조사 4분기 결과(잠정치)」, <https://datalab.visitkorea.or.kr/site/portal/ex/bbs/View.do?cbIdx=1127&bcIdx=306889&pageIdx=1&cateCont=spt05>, 검색일자: 2024. 4. 8.
- e-나라지표, 「관광수지 실적」,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1657, 검색일자: 2024. 4. 8.
- JNTO, 「統計発表」, 2016.
- OECD Data, “Tourism GDP,” <https://data.oecd.org/industry/tourism-gdp.htm>, 검색일자: 2023. 11. 3.
-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International tourism, number of arrivals,” <https://databank.worldbank.org/reports.aspx?source=2&series=ST.INT.ARVL&country=#>, 검색일자: 2024. 4. 8.

02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¹⁾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wchang@kipf.re.kr

I. 서론

대한민국은 지난 기간 저출산 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심각한 인구 고령화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가 고칠 방법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상황을 최대한 현실적,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주어진 조건하에서 최선의 대응을 모색하여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인구 정책,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또한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고령화 문제에 대한 인식 자체가 추상적이고 안이하며,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도 산발적으로 연구되며 고려되고 있음은 우려스럽다 하겠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도 많은 정책들은 인구 증가를 전제 한 기존의 관성에 따라 편성되고 계획되고 있음이 발견되는 점도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와 같이 접근한다면 저출산 문제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듯이 인구 고령화 문제의 대응도 실패할 가능성도 높을 수 있다. 이하 현황에서 살펴보겠지만 지금 인구 고령화 문제의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가의 존속 자체가 위협에 놓이게 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이제는 정책연구계의 모든 연구자들이 역량을 집중하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면한 인구문제, 저출산과 고령

1) 본 현안분석에는 Chang, Woo Hyun, "Can population density adjust populations via fertility rates?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population density on total fertility rates using the System GMM Model", Working paper, 2024. 의 내용을 재정포럼의 목적에 맞게 편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화 대응에 관하여 문제를 명확화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정책 조합을 위한 제언 도출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로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밝히고, 그동안 개별적·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대응 정책들을 하나의 체계하에서 포함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분류하며 현재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에 있어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는 정책분야, 관성적 대응이 우려되는 분야들을 발굴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서론과 이어지는 제Ⅱ장에서는 현재의 인구 문제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대응으로 명확화할 필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하나의 체계 하에서 정리해 본다. 이를 통해 정책들을 누락 없이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을 보이고, 또한 기존의 정책들을 하나의 체계에 정리함으로써 정책 간 효과성을 비교하거나 조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는 유용성에 대해서도 예시로 논하고자 한다. 모든 정책들을 포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예시를 제시하되, 중요성이 높은 저출산 정책은 보다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제Ⅳ장에서는 현재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던 과거의 정책을 관성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사례를 일자리 정책과 소상공인 정책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며, 제Ⅴ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는다.

본고에서는 당면한 인구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대응에 있어 문제를 명확화하는 한편 필요한 정책 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정책 조합을 위한 제언 도출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현재 인구문제의 명확화: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

본 장에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한 인구문제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모든 현상의 변화가 반드시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문제는 ‘대한민국의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물론 북한 지역에 적대세력이 존재하며 중심이 짧은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이 있는 국방의 문제와 같이 절대적인 군인의 수가 중요할 수도 있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²⁾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궤적도가 증가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존립이나 정책 대응에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2) 참고로 이 또한 구조적인 개혁은 필요하겠지만 질적인 전력 차로 극복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으므로 반드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 1제곱킬로미터당 531명으로 OECD 국가 기준 1위이며, 산지 지형이 많은 지형적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극도로 밀집된 나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도 영국 수준의 인구밀도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의 절대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우리나라의 인구현황은 세계 각국의 통계와 비교를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현재 OECD 국가 기준 1위의 인구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인구가 극도로 밀집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거주 불가능한 산지 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까지 고려한다면, 현재의 대한민국 인구밀도는 인류 기준으로 정상에서 벗어난 수치에 가깝다고 보아도 큰 문제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식량 자급도까지 고려한다면, 지금의 인구밀도가 지속가능한 인구밀도였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1>에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2020년 기준 1제곱킬로미터당 531명으로 OECD 국가 중 1등에 해당하며 미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도 현재 영국 수준(1제곱킬로미터당 277명)의 인구밀도를 나타낸다. 영국이 소멸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지어 현재의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소멸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할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 본다면 지나치게 밀집해 있던 삶에서 오히려 쾌적도가 높은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기회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인구밀도, 2020년

(단위: 명)

국가	1제곱킬로미터당 인구
OECD평균	39
대한민국(OECD 1위)	531
프랑스	123
영국	277

출처: World Bank, "Population density(people per sq/km),"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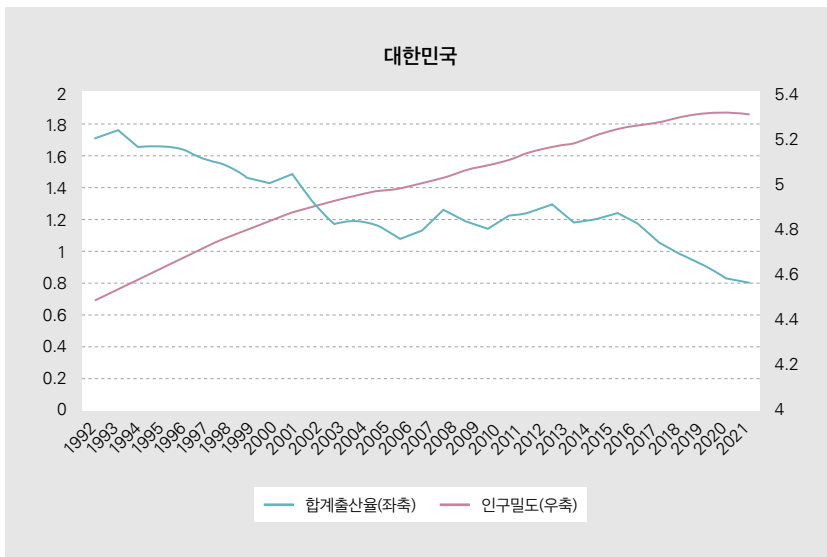
관련하여, Chang(2024)에서 살펴 본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의 관계 분석 결과를 소개해 보기로 한다. 해당 연구에서는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자료에서 추출한 1991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각국의 패널자료를 기반으로 내생성을 체계적으로 통제한 System-GMM 방법론을 활용하여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경제학 연구에서는 상세히 다뤄진 경우가 드물었지만, 해당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득, 여성 노동 공급, 도시화율과 같은 전통적으로 인정받은 요인들이 고려되어도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추정 결과는 인구밀도

와 출산율 간의 강력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밀도가 감소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인구 자가 조절 메커니즘의 존재를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그림 1]~[그림 4]는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벨라루스의 인구밀도와 출산율 변화를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다. 먼저 [그림 1]의 한국 사례를 보면 지난 기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했음에도,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인구와 인구밀도는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2021년에 이르러서야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밀도 변화, 1991~2021년

(단위: 명, 100명/Km²)



출처: Chang(2024)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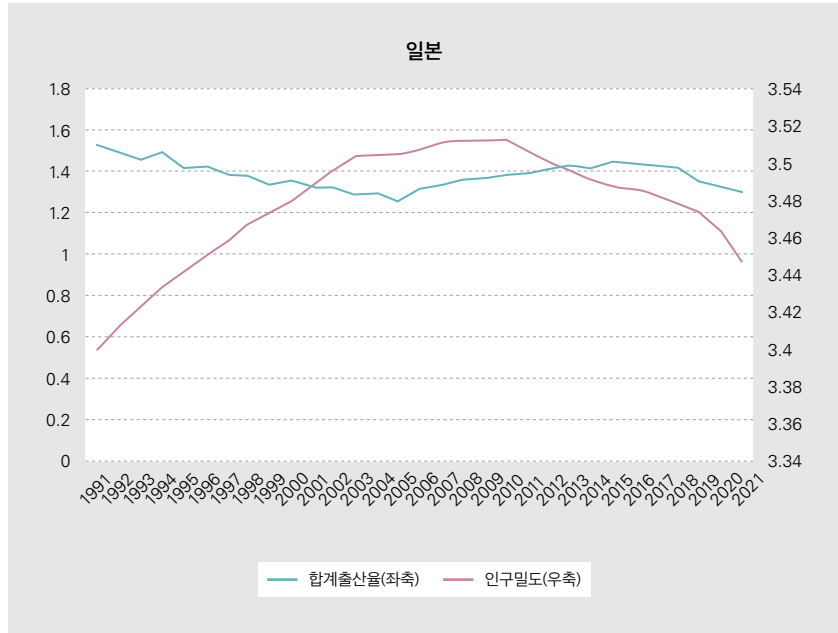
[그림 2]는 일본의 사례를 보여준다. 일본의 추세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인구가 최정점에 이르러 감소하는 구간에서 출산율의 감소 추세가 정지, 반전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밀집도와 낮은 출산율 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인구문제에 있어 일본은 우리나라의 참고 사례로 많이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 추세도 인구밀도 감소에 따라 완화 또는 반전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Chang(2024)에서는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의 강력한 역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밀도가 감소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인구 자가 조절 메커니즘의 존재를 시사한다.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격적인 분석 결과 소개에 앞서 인구밀도와 출산율 간의 관계를 간단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국, 일본, 중국, 벨라루스의 인구밀도와 출산율 변화를 1991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래프로 표시해 보았다.

[그림 2] 일본의 합계출산율과 인구밀도 변화, 1991~2021년

(단위: 명, 100명/Km²)



출처: Chang(2024)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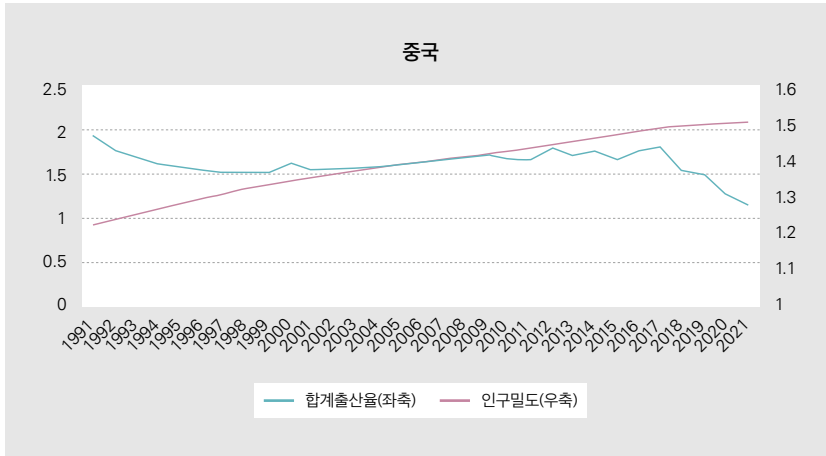
[그림 3]은 중국의 사례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인구밀도와 출산율에는 역시 역의 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의 출산율 감소는 한국의 사례보다도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또 다른 인구 대국인 인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구 증가와 출산율 감소가 함께 확인되고 있는 바, 한국의 사례는 그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는 예외적이지만 출산율 감소는 현재 지구 전체에서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림 4]는 벨라루스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구밀도가 실제로 감소하는 상황을 겪은 나라의 사례로 제시하였다. 인구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은 증가 및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류의 인구 자가 조정 메커니즘이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밀도가 총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내생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로, 출산율이 미래의 인구밀도 값에 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종속 변수인 출산율을 고려하는 동적 구조가 반영되어

[그림 3] 중국의 합계출산율과 인구밀도 변화, 1991~2021년

(단위: 명, 100명/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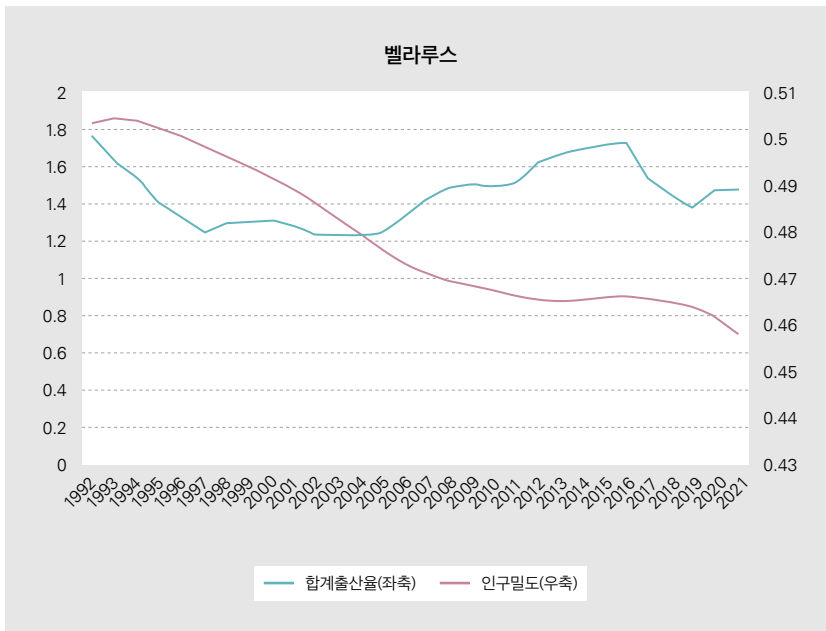


출처: Chang(2024)에 의함

각국의 사례를 보면 인구밀도가 높아지면 출산율은 감소하며 인구밀도가 낮아짐에 따라 출산율은 증가 또는 안정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인류의 인구 자가 조정 메커니즘이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림 4] 벨라루스의 합계출산율과 인구밀도 변화, 1991~2021년

(단위: 명, 100명/Km²)



출처: Chang(2024)에 의함

야 할 것이다. 또한, 한 나라의 출산율은 그 이전 출산율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모델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전 기간의 출산율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당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Blundell

System-GMM 모형에 따른 실증분석 결과 국가의 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당 100명이 증가하면 합계 출산율은 0.366명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인구밀도는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밀도 100명 증가 기준 1.06명 감소하였으므로 감소 폭은 급한 편이나, 추정 모형에 따라서는 예측 범위 안에 있는 결과로도 볼 수 있다.

과 Bond(1998)의 System-GMM 추정 방법이 주 모델로 선택되었다. 종속 변수(Y)는 한 나라의 합계 출산율이며, 설명 변수는 인구 밀도(PD), 구매력평가(PPP)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로그), 도시 인구 비율, 면적(로그), 그리고 종속 변수 연도의 1년 전 여성 고용 비율 등을 활용하였으며 상호 작용 항목도 포함하였다. 내부 도구변수들을 활용한 투 스텝 System-GMM 추정을 수행했으며, 강건 표준 오차를 사용했고, 시간 추세와 국가 고정 효과도 포함하였다. 관련하여 <표 2>는 패널자료의 주요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을 요약한 내용이고, 식(1)은 기본적인 System-GMM 추정 설정을 보여주며, 식(2)는 비교를 위해 사용되는 고정 효과 패널 추정의 공식을 나타낸다. 또한, 해당 연구에서는 인구밀도가 1제곱킬로미터에 2천명이 넘는 도시국가들³⁾은 이상치로서 제외하였으며 인구 자체의 크기가 큰 중국, 인도, 러시아 등은 이상치로 제외하거나 포함해도 추정의 질적인 결과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

$$Y_{i,t} = pY_{i,t-1} + \beta_1 \cdot PD_{i,t-1} + X'_{i,t-1}\beta_2 + \delta_t + \mu_i + \epsilon_{i,t} \quad \text{식(1)}$$

$$Y_{i,t} = \beta_1 \cdot PD_{i,t-1} + X'_{i,t-1}\beta_2 + \delta_t + \mu_i + \epsilon_{i,t} \quad \text{식(2)}$$

<표 2> 국가패널데이터 기초통계량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관측치 수
합계출산율(명)	overall	3.100	1.618	0.808	8.459	N = 6,199
	between		1.538	1.226	7.492	n = 208
	within		0.505	1.193	6.060	T-bar = 29.80
인구밀도 (명/100제곱킬로 미터)	overall	153.79	225.45	0.14	1,915.63	N = 6,387
	between		228.47	0.14	1,326.69	n = 211
	within		43.73	-396.94	742.73	T-bar = 30.27
1인당 GDP, Constant PPP International dollars	overall	17,432.96	19,358.3	436.3764	120,647.8	N = 5,577
	between		19,545.56	856.8757	111,617.7	n = 190
	within		4,126.58	-10,668.9	64,974.7	T-bar = 29.35
국토면적 (제곱킬로미터)	overall	625,964.4	1,774,468	20	16,376,870	N = 6387
	between		1,770,388	20	16,376,870	n = 211
	within		17,502.37	281,835.4	789,835.4	T-bar = 30.27
도시 인구비율(%)	overall	56.12	23.70	5.49	100	N = 6,376
	between		23.59	9.84	100	n = 210
	within		3.90	34.33	74.44	T-bar = 30.36
여성고용 인구비율(%)	overall	45.28	15.92	4.36	87.96	N = 5,608
	between		15.51	9.40	81.64	n = 184
	within		3.45	27.70	64.21	T-bar = 30.48

3) 마카오, 싱가포르, 홍콩, 지브롤터 등이 해당된다.

출처: Chang(2024)에 의함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 기 전에 인구밀도 차원에서 1제곱킬로미터당 100명이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은 0.366 감소한다는 추정치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전기 출산율을 고려하지 않은 고정효과 패널모형에서는 이 크기가 더 크게 나타나서, 인구밀도 1제곱킬로미터당 100명 증가에 대해 합계출산율이 1.6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실제 수치와 비교해 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밀도는 1제곱킬로미터당 82.3명이 증가한 반면 합계출산율은 0.87이 감소하였으므로 인구밀

인구밀도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해 온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실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다소 안정화된 점은 이제 인구 감소를 처음 맞이하게 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표3> System-GMM 모형과 고정효과 모형 추정 결과

종속변수: 합계출산율	모형 (1)	모형 (2)
설명변수	Two-Step System GMM 모형	고정효과모형
전년도 합계출산율	0.911*** (0.012)	
전년도 인구밀도, 100명/1제곱킬로미터	-0.366** (0.171)	-1.629*** (0.380)
전년도 인구밀도 X 전년도 로그 소득	0.046** (0.023)	0.099* (0.052)
전년도 인구밀도 X 전년도 도시화율	-0.000 (0.001)	0.005 (0.003)
전년도 인구밀도 X	-0.002*** (0.001)	0.001 (0.002)
전년도 여성고용인구비율	-0.001 (0.017)	0.100*** (0.035)
전년도 로그소득 X 전년도 로그 국토면적	0.105 (0.218)	-1.092** (0.441)
전년도 도시화율	-0.004** (0.002)	-0.033*** (0.008)
전년도 로그 국토면적	-0.274 (0.381)	-0.552 (1.968)
전년도 여성고용인구비율	0.003** (0.001)	0.009 (0.006)
상수	2.675 (4.548)	11.358 (23.327)
관측치 수	4,951	4,951
결정계수		0.629
국가 수	172	172
AR (1)	2.47e-06	
AR (2)	0.835	
Hansen P-Value	1	
도구변수 수	474	

주: 1. 괄호 안 숫자는 표준오차임

2.*** p<0.01, ** p<0.05, * p<0.1

출처: Chang(2024)에 의함

현재 인구문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 감소의 이행 과정에서 생산을 해서 경제 전체를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지나치게 많아져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 인구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도 100명 증가에 따라 합계출산율은 1.06명 감소한 것인데, 기준 모형의 추정 결과인 0.366명에 비한다면 상당히 급하게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정 모형에 따라서는 예측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도 볼 수 있다.

요컨대, 인구밀도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감소해 온 것은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으며 특히 일본의 경우 실제 인구가 줄어들면서 출산율이 다소 안정화된 점은 이제 인구 감소를 처음 맞이하게 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본고에서 결과를 인용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앞선 그래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과 일본 등 이웃 국가들의 인구도 중장기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아시아 지역 세력 균형 유지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뒤에서 국방 문제는 다시 다루겠지만 북한의 이슈는 확실히 정리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반드시 국가적 위기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하고, 현재 인구문제의 문제점은 그 이행 과정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인구 감소는 전 연령층의 균등한 인구 감소가 아닌, 새로운 세대의 급격한 감소인 저출산 과정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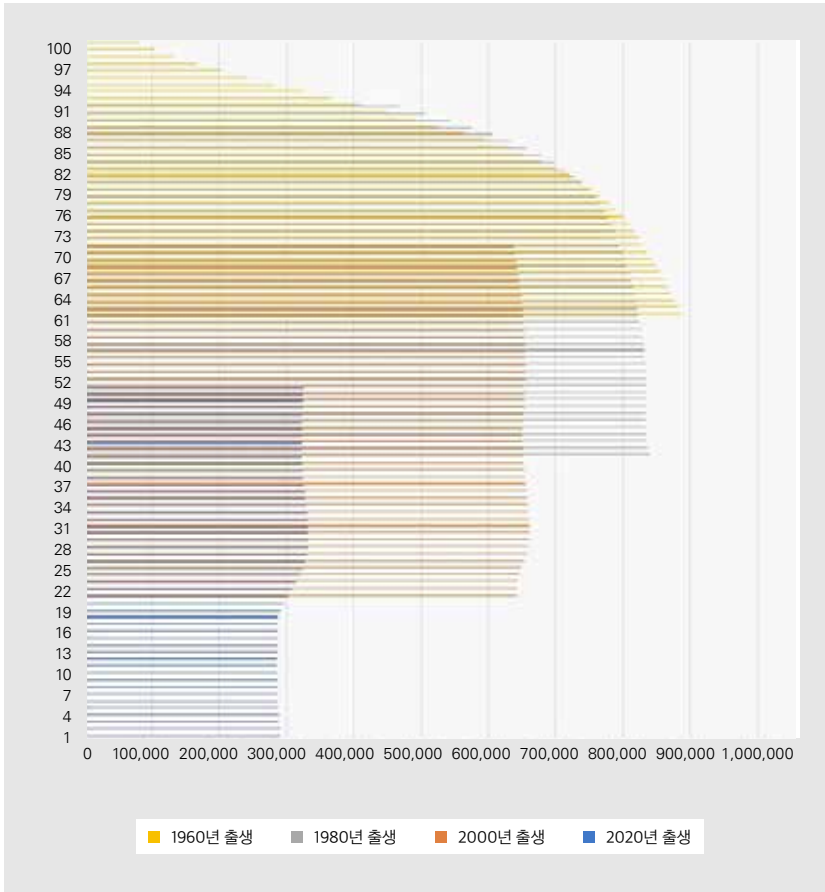
인구 조정 과정에서 생산을 해서 경제 전체를 부양할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생산적이지 않은, 부양해야 할 고령층은 지나치게 많아지는 유지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 인구문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는 통계청이 제시한 2020년부터 2070년까지의 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 자료를 기반으로, 각각 2020년생(2020년 0세), 2000년생(2020년 20세), 1980년생(2020년 40세), 1960년생(2020년 60세)이 향후 2070년까지 연령별로 어느 정도 수준의 인구 수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표시한 것이다.

[그림 5] 기준으로 검토해 보아도 향후 50년간의 인구구조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추계는 외국으로부터의 젊은 인구 유입에 대한 기대도 이미 반영되어 있어 2020년생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탄생 시의 10%까지도 더 늘어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음에도, 전세대의 압도적인 숫자와 비교해 보면 의미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심지어 2020년생의 출생 수만큼 이민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1980년생, 2000년생의 인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70년 기준으로 1980년생은 90세가 되는데, 현재 인구의 절반 가량이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

[그림 5] 중위인구예측기준 출생연도별 연령인구 변화(2020~2070년)

(단위: 세, 명)



출처: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향후 5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이나 경제성장에서 대응해야 할 심각한 사실로 볼 수 있다.

리 노인 개념을 상향한다고 해도 현재의 의학과 과학 기술 기준으로 90세 노인이 일을 하거나 최소한적 돌봄 없이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피부양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큰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사실은 이 예측 기준으로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그림 5]는 인구 피라미드의 시간별 변화를 한 장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인데, 그림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출생그룹별로 세로축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해당 그룹의 인구 수를 가로축에서 읽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향후 50년 동안 생산가능인구 대비 피부양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실은 국가의 지속

참고로 그 어떤 인구정책 대응도 단기나 중기, 장기까지는 몰라도 초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대체할 수 없으므로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가능성이나 경제성장 측면에서 대응해야 할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인구 문제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 문제로 확실히 정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처럼 현재의 인구문제가 인구 절대 수치의 문제가 아니고 조정 과정에서의 인구 구조의 문제, 특히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 문제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인구 자체의 변화에 관련한 정책적 혼선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표적으로 선정적인 표현에 기반한 ‘지역소멸’, ‘인구소멸’ 등의 접근은 현재의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책 역량을 분산시키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낳게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절대 인구 기준으로 인구 문제를 접근하여 향후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노년층을 지역에 거주시키자는 정책 제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접근이 본 장에서 살펴 본 현재 대한민국이 봉착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어떤 도움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예로 인구 구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인구 자체의 문제로만 접근한다면 청년층 이민이나 중장년층 이민이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중장년층 이민은 오히려 현재의 인구구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본 장에서는 마지막으로 인구문제 대응에 있어 당연한 사실임에도 일반인들에게 자주 간과되는 사실 하나를 명확히 해 두고자 한다. 초장기적으로는 합계 출산율은 2.0 이상이 되어야 사회가 소멸하지 않는다.⁴⁾ 두 명이 두 명을 낳지 않으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궁극적으로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어떤 인구정책 대응도 단기나 중기, 장기까지는 몰라도 초장기적으로 출산율을 대체할 수는 없으며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는 점은 강조해 두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하나의 틀에서 분류하여 접근해 보기로 한다.

Ⅲ.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 수단체계 구축과 분류

본고를 작성하게 된 가장 큰 동기 중 하나는 현재 생산가능인구 대응 정책과

4) 자연감소분을 생각하면 2.0 이상의 값을 실질적인 인구 유지 출산율로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2.0으로 제시하였다.

관련한 연구들이나 정책제언들이 산발적, 비체계적, 각개약진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현 정부 초기에 초등학교 5세 입학에 대한 정책이 제안되었다가 철회된 바 있다. 국민들이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 인구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분명히 현재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유효한 검토 대상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정책은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갑작스럽게 제기되어 큰 호응을 받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물의 수준의 상황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해당 정책은 체계적으로 고려해 보았다면 국민적 관심사인 생산가능인구 감소 대응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정책이었다는 점에서 정책 자체가 희화화되고 다시 논의될 수 없을 수준의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일부 연구자들은 노인들이 은퇴하고 사망할 때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노인 기준을 10년마다 1년씩 올려서 사람들을 더 늦게까지 생산활동에 참여시켜 보자는 이태석(2022)의 예를 들 수 있다. 참고로 해당 연구에서는 노인 개념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상태가 향상되어 기대여명이 늘어나는 등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일 여건이 충분하다고 설명하면서 2025년 이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 기준을 1세씩 올리는 시나리오를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기대은퇴기간과 성별·지역별·소득별 격차를 고려할 때 향후 노인 연령을 기대여명 20년 기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2100년에 노인 연령은 74세가 되고, 노인 부양률은 60%가 돼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인 65세로 유지할 때보다 36%포인트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하면 연금, 노인복지 수급기간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국가의 재정 부담 또한 감소된다고 주장한다. 이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노인들이 보다 높은 연령에 이르러서야 생산가능 인구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인 틀에 포함하여 볼 수 있는, 보아야만 하는 정책 제안이지만 역시 각개약진 식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현실이다.

또 일각에서는 이민을 통한 인구 유입이 인구문제 해결의 답이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 효과적이며 가능한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또한 다른 정책들과 함께 하나의 틀 안에서 확인되고 있지 못하며 역시 개별적인 분석과 개별적인 제안으로 진행되고 있음은 분명한 현실이다.

요컨대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가 인구문제의 요체이고, 해당 문제에 대응할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가 인구문제의 요체이고, 해당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정책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은 충실히 구축되어 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본고에서는 정책
대분류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양적 증가 관련
정책,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향상 정책, 생산
가능인구 부양효율성
향상 정책으로 정책들을
나누고 각각 세부적인
정책들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수 있고 인구문제 해결을 공통 목적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존재하지만 해당 정책들을 하나의 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체계는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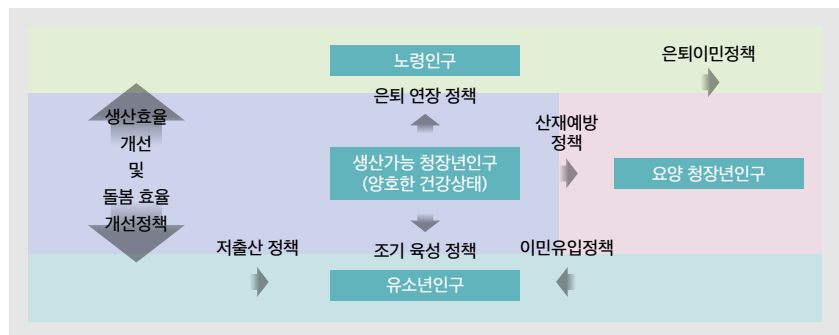
이에 앞서, 본고에서 활용할 생산가능인구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OECD는 생산가능인구를 연령 기준으로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현역군인, 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 및 치료 감호소 수감자 등은 생산가능인구에서 제외하고 있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해당 사항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생산가능인구 비중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분류를 위해 먼저 인구는 둘 또는 네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산가능인구와 비생산인구(또는 피부양인구)로 나누고, 이를 보다 세분화하면 비생산인구는 노령층인구와 유소년인구, 요양청장년인구로 나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양적인 부분과 질적인 부분을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양적인 부분은 생산가능인구와 피부양인구의 숫자 측면으로 볼 수 있고, 질적인 부분은 생산가능인구의 생산효율성, 생산가능인구가 피부양인구를 부양하는 부양효율성(돌봄효율성)의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아래 각 절에서는 대분류로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양적 증가 관련 정책,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향상 정책, 생산가능인구 부양효율성 향상 정책으로 정책들을 나누고 세부 정책들을 분류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그림은 이와 같은 분류체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그림 6] 생산인구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분류 체계도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생산가능 청장년인구로, 해당 인구비중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모두 포함하여 함께 살펴 보아야 입체적인 인구정책을 설계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분류도를 그려봄으로써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 예컨대 저출산 정책은 유소년 인구를 늘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부양비율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 생산가능 인구 기준으로도 적어도 15년의 시간이 지나야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본고의 분류에서는 외부의 직업을 갖는 것은 물론 생산적인 가사(home production)업무를 수행하는 인구는 성별에 무관하게 모두 생산가능 청장년인구에 포함되며, 가사노동이 비생산적이라는 비합리적인 가정은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개별정책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생산가능인구 비중 양적 증가 관련 정책

첫번째 정책 분류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인 확보이다. 이 정책 분류에는 앞서 다룬 정책들이 세부 분류로 포함되어 들어갈 수 있다.

첫 세부 분류로는 보다 어린 나이에 생산가능 인구에 진입하게 하는 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기 교육을 통해 빠르게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으로, 앞서 예로 들었던 5세 초등학교 입학, 대학교·대학원 과정 통합을 통한 졸업연령 낮추기 등의 정책이 이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부 분류로는 더 높은 연령까지 생산가능인구에 포함하도록 하는 정책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연령을 높여서 은퇴 시점과 연금수급 시점을 늦추려는 각종의 정책들이 해당 세부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참고로 이와 같은 정책들의 경우는 건강 수명이 늘어나야 하며, 건강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그 이후의 수명은 늘어나지 않거나 조금 늘어나야 한다는 점을 가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의학계의 의견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추가적인 세부 분류로는 산재와 업무상 질병의 감소를 통한 생산가능인구 이탈 예방 정책을 들 수 있다. 보다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특히 향후 희소해질 청년층의 심각한 산재나 업무상 질병의 빈도를 낮출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의 양적 유지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첫번째 정책 분류는 생산가능인구의 양적인 확보이다. 이 분류의 세부 정책 분류로는 유소년인구가 생산가능인구로 빠르게 진입하게 하는 조기육성 정책과 생산가능인구의 연령을 상향하는 은퇴 연장 정책, 생산가능인구의 건강을 지키는 산재예방 정책, 이민유입 정책, 그리고 저출산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민유입 정책의 경우 유입 인구의 연령이 낮아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완벽히 적응하면 현재 문제가 오히려 증폭되고, 적응하지 못하면 사회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이민의 딜레마가 존재함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노령층의 은퇴 이민 정책의 경우도 충분히 선택가능한 옵션임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정책은 15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효과가 나타나지만, 건강한 일터를 구현하여 요양청장년인구를 줄일 수 있다면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책은 보다 많은 주목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이민을 통한 생산가능인구층의 인구 유입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노령층의 인구 유입은 정책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생산인구비중 감소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도 유입하는 인구의 연령은 더 낮을수록 정책 목적에 더 적합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볼 때에, 이민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젊은 층을 경쟁하여 영입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민 유입의 경우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한국인들과 동일한 선호를 가지게 될 경우 현재의 한국의 문제(예: 수도권 선호, 3D 업종 비선호)가 이민자의 수만큼 오히려 증폭되게 되며, 만일 한국 사회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선호를 가지게 된다면 국가 내에 이질적인 집단을 형성하게 되어 사회 불안정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필자는 이를 이민의 딜레마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민 정책을 생산가능인구에 대응한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딜레마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참고로 이처럼 분류를 하면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누락된 정책 분류 영역을 찾을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 바로 피부양인구층의 인구 유출 정책도 분류상 가능한 영역으로 확인된다는 점이다.

다른 정책들과 다른 없이 여러 여건의 사전적 준비가 전제조건이지만, 노령층이 상대적으로 물가가 저렴하고 기후가 온화한 국가로 이주하여 은퇴 이민 차원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생산가능인구 비중을 양적으로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비록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지만 독일인들의 폴란드 은퇴 이민 사례나 유럽인들의 태국 은퇴 이민 사례 등을 고려해보면 지금의 노년층이 아닌 국제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노년층에게는 은퇴 이민도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출산율 제고 정책 또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양적 증가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저출산 정책은 그 중요도를 고려하여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1. 저출산 정책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출산율은 인구 감소 시 일시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부분들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합계출산율은 2, 외부 유입을 고려하더라도 영국이나 독일 등의 출산율과 유사한 수준인 1.5 이상으로 회복이 되어야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다. 따라서 생산가능인구 비중 양적 증가 정책들 중 저출산 정책은 보다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본고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저출산 정책의 정의와 분류는 출산의사결정 단계에 따른 것이다. 사람들은 다양한 출산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해당 단계의 병목과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7]은 출산의사결정 단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각 분기점은 의지와 성패로 구성되며 괄호 안의 숫자는 연령대를 표현한 것이다. 즉, 분기점<1(20): 결혼의지>는 20대에 결혼의지가 있으면 왼쪽으로, 없으면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분류해 보면 결혼루트 쪽은 1)결혼 의지가 있고, 2)교제에 성공하고, 3)결혼에 성공하고, 4)첫째 출산의지를 갖고, 5)첫째 출산에 성공하고, 6)둘째 출산의지를 갖고, 7)둘째 출산에 성공하는 7단계를 성공해야 최종 목적인 두 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른쪽은 비혼루트인데, 결혼의지는 없지만 1)교제의지를 갖고, 2)교제에 성공하고, 3)출산의지를 갖고 4)출산에 성공하는 식의 진행을 하게 된다.

우선 이와 같은 논리구조만으로도 다양한 사실들을 정리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제일 먼저 출산은 쉬운 결정이 아님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다. 두 명의 성인이 두 명의 자녀를 가지는 의사결정 과정은 7단계를 거쳐야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무시하고 아이의 출산을 자연발생처럼 ‘저출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선 첫 단계부터 안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첫 결정, 결혼의지 여부 측면에서 왼쪽 트리에 들어가는 정책들이 많을수록 왼쪽으로 진행할 유인이 많아진다. 오른쪽 트리에 들어가는 정책은, 당연하게도 왼쪽 트리의 유인을 줄여 ‘구축효과’를 야기한다. 결혼하지 않는 교제를 지원하거나, 동거를 조장하거나, 동거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결혼과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을 저해한다는 것을 논리 구조 자체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출산의사결정 순서에 따라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데, 해당 단계의 병목과 애로를 해결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저출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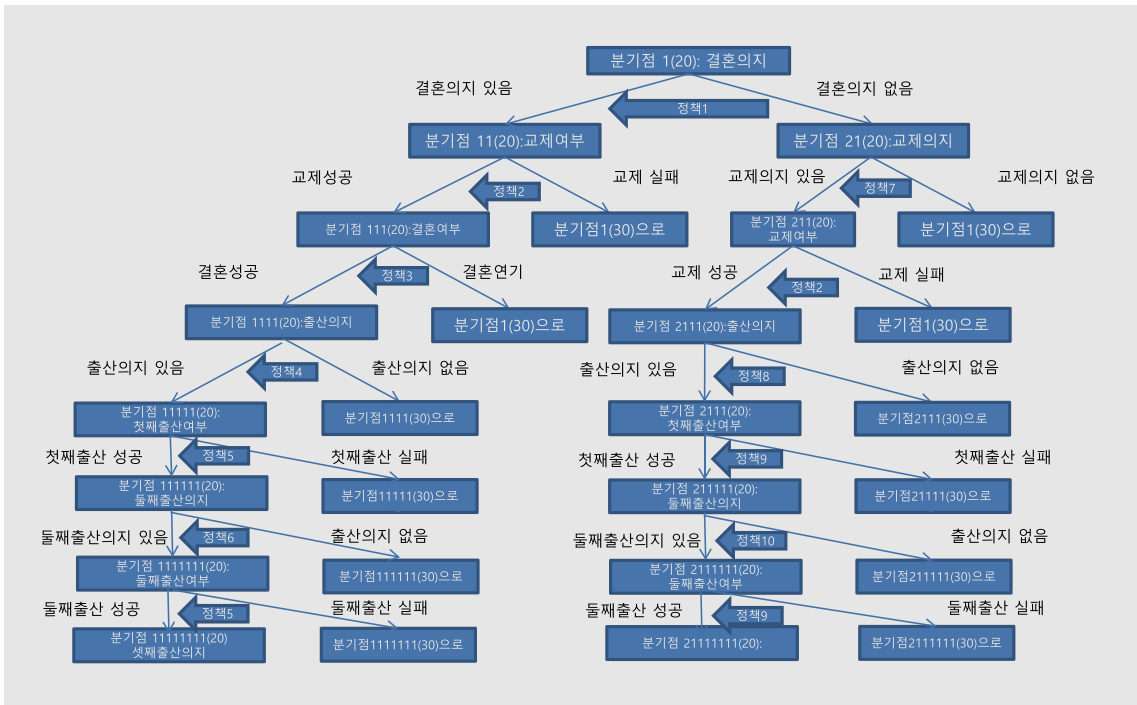
저출산 정책이란 출산의사결정의 각 단계별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향의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직·간접적인 정책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책들은 그 효과는 거리가 있어 다소 작겠지만 누적적으로 앞 단계에 있는 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결혼을 전제한 출산지원 정책은 결혼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기준으로 본고에서는 저출산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자 한다. 저출산 정책이란 출산의사결정의 각 단계별로 출산율을 제고하는 방향의 의사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직·간접적인 정책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접적인 정책은 해당 정책의 직접적인 목적이 해당 단계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정책으로, 간접적인 정책은 해당 정책의 부수적인 목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체계와 정의를 기반으로 하면, 기존의 정책들을 단계별로 분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다. 그림에서 제시된 각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7] 출산의사결정 트리



출처: 저자 작성

정책 1. 결혼의지 제고 정책

결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후 단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혼인 페널티를 줄이고 혼인 인센티브를 높이는 정책들을 고려할 수 있다. 결혼으로 인해 세제, 재정, 규제적으로 부부들이 받는 혼인 페널티들을 집대성하고, 해당 불이익을 조정하는 한편, 오히려 결혼을 할 경우 안 하는 경우보다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높여주는 방안이 해당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이며 성과지표는 혼인 페널티 정책의 수(낮을수록 높은 성과), 혼인 인센티브 정책의 수(높을수록 높은 성과), 국민 인식 변화(혼인 페널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청년 인구의 비중)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성끼리 결혼을 해야 출산이 가능하므로, 성 갈등의 해소도 해당 정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결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후 단계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혼인 페널티를 줄이고 혼인 인센티브를 높이는 정책들을 고려할 수 있다.

정책 2. 교제성공 지원 정책

우선 결혼의지가 있다면 교제의지는 당연히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지가 있다고 해서 교제에 성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만남을 추천한다든지, 사교성을 개선해 준다든지, 자기개발을 지원해 이성에 대한 매력을 제고해 준다든지 하는 정책들이 바로 정책 2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예컨대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정책은 본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분류의 정책들에 관한 성과지표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싱글들의 비율 등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주의할 점은 정책 2는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비혼 루트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제가 결혼을 대체하는 효과, 구축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결혼을 전제한 만남과 전제하지 않은 만남을 사전적으로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정책 3. 결혼지원 정책

다음으로는 의지가 있고 교제도 성공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결혼지원 정책을 도식 화살

결혼의지가 있는
국민들의 교제를
성공시키고, 빠른
결혼결정을 할 수 있게
돕는 한편 출산의지를
제고하고 빠르게
첫째와 둘째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정책을 분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표 정책 3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결혼비용 지원, 신혼부부 주거 지원, 신혼부부 일자리 지원 등의 정책들이 해당 정책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연령별 혼인을 등이 해당 정책의 정책성과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4. 첫째 출산의지 제고 정책

다음으로는 결혼하였으나 아직 자녀가 없는 적령기 국민을 대상으로, 첫째 아이를 출산할 의지를 가지도록 돕는 정책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육아휴직 지원, 출산 보조금, 출산가구 주거 지원 등의 정책들이 해당할 수 있다. 연령별 첫째 출산가구 비중 등이 해당 정책의 성과지표로 관리될 수 있다.

정책 5. 난임해결 지원 정책

출산의지가 있으나 출산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는 난임해결 지원 등의 정책들이 필요하다. 해당 정책들은 5번 화살표에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며 지원받은 난임부부의 첫째 아이 출산 성공률 성과를 성과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6. 다둥이 정책

첫째를 출산한 가구가 둘째를 출산할 의지를 가지도록 하기 위해 설계되는 모든 정책들이 정책 6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다둥이 지원 정책으로 볼 수 있는데 해당 정책의 성과지표는 연령별 둘째 출산가구 비중 등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둘째 난임의 경우는 정책 5에 포함되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 7. 교제의지 제고정책

정책 7부터 10까지는 비혼 동거 루트에 해당한다. 정책 7은 결혼의지가 없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교제의지를 제고해보고자 하는 정책들에 해당할 것이다. 결혼하지 않아도 교제를 장려하는 정책들에 해당하므로 앞서 밝힌 것처럼 구축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서 비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분류에 대한 예시는 제시하지 않는다.

정책 8. 비혼가구 출산지원 정책

정책 8은 항상 인구 문제에 있어 프랑스 등 일부 국가의 예를 제시하면서 제

기되는 비혼인가구 자녀 출산지원에 관한 정책이다. 앞서 밝힌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지만 해당 정책은 결혼 출산의 유인을 낮추고 결혼·출산 혼인가구를 줄여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이다. 원래 정책이 의도한 것은 결혼의지가 없던 사람들이 동거라도 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겠지만, 해당 정책을 활성화할 경우, 결혼해서 출산했을 사람들이 오히려 동거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로 전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논리 구조를 검토해 보면 본 정책들은 명확한 실증 증거 없이 채택할 수 있는 정책방향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향상 관련 정책

다음으로는 질적인 측면의 하나로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향상 정책들을 하나의 대분류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류에는 일반적인 R&D, 생산성 향상 정책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며 보다 미래적으로 본다면 AI, 생산 관련 로봇의 발전 등과 관련된 정책들이 주된 정책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구 고령화 상황에서는 특히 고령자 친화형 장비들이 주목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산업 현장에서 이미 충실히 활용되고 있는 파워 슈트 등 보조 장치들을 비롯한 산업보조 로봇장치들, 로봇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 공장의 도입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생산가능인구 생산성 향상 정책은 민간에서도 충분히 인센티브와 문 제의식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이므로 정부 정책 차원에서는 지금까지의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시장실패 차원에서 보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3. 부양 효율성 향상 정책

다음으로 다룰 분류는 부양 효율성 향상 정책이다. 노령층을 보다 효율적으로 부양할 수 있도록 돕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질적으로 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정책 분류에 속할 대표적 사례로는 돌봄 로봇 기술의 개발 지원 및 도입을 꼽을 수 있다.

돌봄은 현재 대표적으로 공공의 영역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술의 개

생산가능인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생산 가능인구의 생산성 향상과 함께 부양 효율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이 중 돌봄은 대표적인 공공의 영역으로, 해당 기술의 개발이나 활용 또한 재정정책적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으로 함께 살펴본다면 돌봄 효율성을 37.5% 추가 개선하는 것은 노인의 연령 정의를 75세까지 높이는 정책이나 생산가능인구의 60%를 이민 유입으로 받는 비현실적인 정책과 동등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이나 활용 또한 정책적 영역에서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중요한 정부의 재정정책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돌봄 로봇 기술은 생산가능인구 비중 증가는 물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멀티플레이어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을 돌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를 돌보는 기술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부담을 낮추고 국가의 육아 함수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 핵심 기술이 될 수 있다.

4. 정책분류의 의의와 활용 예시: 정책 효과성 비교와 조합 시뮬레이션

이처럼 정책을 전체적으로 분류하고 보면,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하거나 정책조합의 효과성을 검토해 볼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이태석(2022)에서는 100년간 노인 연령 기준 정의를 10년에 1년씩 올려서 75세까지 올리는 제안을 했던 바 있다. 이 효과를 돌봄 기술 개선으로 비교해 본다면, 해당 정책은 96%의 노인 부양비를 60%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므로, 만일 향후 100년간 돌봄 로봇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사회의 돌봄 생산성을 현재 추세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37.5%만 개선할 수 있다면 동등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현재 기준 100년 전의 기술을 고려하여 본다면 100년 후의 기술 수준으로는 크게 무리 없는 목표로 볼 수 있으며, 만일 100년이 아니라 보다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 10~30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면 굳이 어려운 노인 개념 정의 변경을 하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누리기에 충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들과 동등한 정책효과를 간단하게 이민정책과 비교해보자. 역시 96%의 노인 부양비를 60%로 낮추기 위해서는 생산가능인구가 60% 더 높아야 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산가능 인구의 60%를 외부 이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상당히 비현실적인 결론이 도출된다. 특히, 나이가 많은 외국인의 이주는 오히려 인구문제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젊은 외국인들만을 선별하여 받아야 하는데 이는 더욱 비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이처럼 정책들을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이와 동등한 효과를 상식적인 수준의 돌봄 기술 개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위에서는 단순한 가정에 따른 예시 사례만 들었지만, 이미 통계청의 인구 예

측은 상위·중위·저위별, 연령별로 모두 존재하므로 보다 복잡한 가정을 적용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비교하고 조합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료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본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정·조세·규제 정책 믹스를 가져갈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틀을 구축하게 된다면, 노인 개념을 바꾸는 게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 이민, 이민이 어렵다는 반론이 나오면 생산로봇 기술을 향상하자, 생산 로봇 기술 향상이 어렵다면 취학연령을 완화하자 등 기준 없는 무한의 정책 순환 고리를 차단하고 체계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굳이 본고에서 제시한 틀이 아니더라도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기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이라는 동일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존의 자료 기준으로 시뮬레이션해본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정·조세·규제정책 믹스를 가져갈 수 있다.

IV. 생산가능인구 감소 상황에서의 관성적 재정정책 개선 필요성

앞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해 충분히 언급했지만, 현재의 인구구조와 현재 0~4세 인구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 인구피라미드와 인구 자체는 남한이 북한의 두 배 수준인 점을 고려하여 북한과 남한의 0~4세 인구를 비교한 표를 제시해 보기로 한다.

<표 4> 북한과 남한의 0~4세 인구 비교, 2021년

(단위: 명)

연령별	총인구	남자	여자
북한, 계	25,484,093	12,463,133	13,020,960
북한, 0~4세	1,763,235	899,110	864,125
남한, 계	51,744,876	25,857,805	25,887,071
남한, 0~4세	1,611,527	824,125	787,402

출처: 통계청 북한인구추계(2023),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조로 보는 대한민국(2023)을 이용하여 직접작성

이처럼 생산인구 감소

상황은 이미 닥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정정책들은

기존의 인구 증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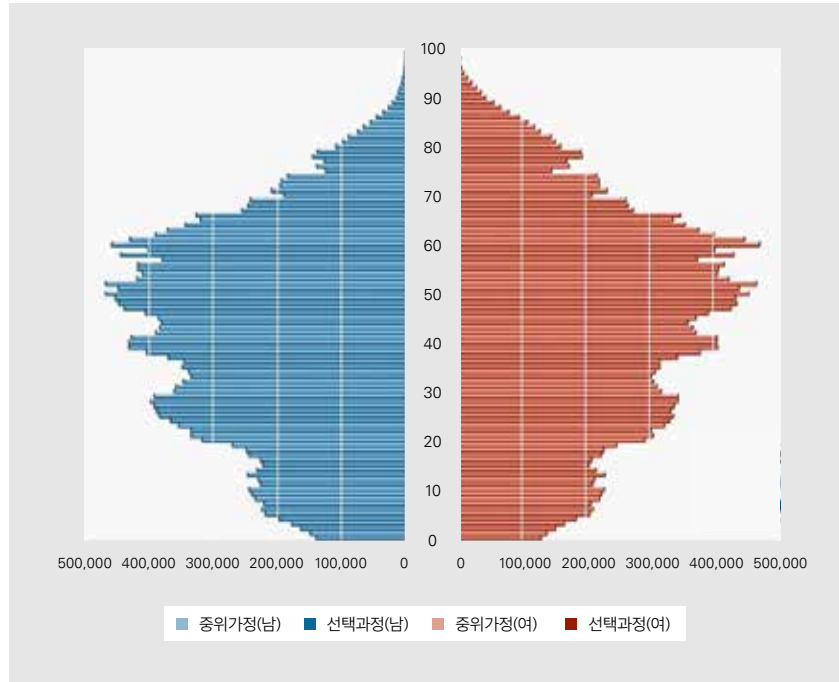
경험하던 시기에 설계된

관성적 성격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림 8] 대한민국 인구피라미드, 2021년

(단위: 명)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2023)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남한 지역 0~4세 인구는 북한 지역의 0~4세 인구보다 절대 수가 적는데, 이는 해방 이후 최초의 상황일 정도로 심각함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국방 정책이 이전과 같이 남한 측의 인구가 북한 측의 인구보다 많을 것을 관성적으로 가정하고 계획되고 수립된다면, 국가의 안보 자체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처럼 생산인구 감소 상황은 이미 닥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재정정책들은 기존의 인구 증가를 경험하던 시기에 설계된 관성적 성격을 답습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와 같은 정책들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생산인구 감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사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참고로 저출산 고령화의 복지정책, 보건정책, 교육예산 관련 연구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성과도 확인되고 있다. 다만, 해당 정책들은 결과적인 지표들

로서 정책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은 아닌 경우도 많다. 예컨대 복지지출은 급증할 것이고 보건지출도 우려스럽게 증가되었지만 그 자체를 축소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은 물론 반드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 위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인구 증가 시대 특히 에코붐 세대의 등장에 따른 일시적인 청년 취업 문제에 따라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일자리 정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일손 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

먼저 살펴볼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다. 이미 절벽에 가까운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들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금액과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

고용노동부의 2022년 6월 28일 보도자료인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정부는 228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규모는 본 예산 30.5조원에 달한다. 특히 고용장려금(8.4조원), 직접일자리(3.2조원) 사업은 직접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공급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이며, 실업소득유지 지원(12.5조원)도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노동 공급에 우려스러운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현재 대학교에서 정원을 채울 수 없을 수준으로 고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향후 5년 안에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

이미 절벽에 가까운 인구 감소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정책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들을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그 금액과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 기존의 일자리 정책들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전면적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5년 중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을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표 5> 2021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현황

(단위: 억원, 천명, %)

사업 유형(사업명)	2020년(A)		2021년(B)		증감(B-A)		전체 대비 비중
	예산	인원	예산	인원	금액	증가율 (B-A)/(A)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254,998		305,131		50,133	19.7	-
직접 일자리	28,587	945	31,599	1,042	3,012	10.5	10.4
직업훈련	22,434		22,648		214	1.0	7.4
고용서비스	11,994		17,330		5,336	44.5	5.7
고용장려금	64,950		84,106		19,156	29.5	27.6
창업지원	23,585		24,071		486	2.1	7.9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103,447		125,377		21,930	21.2	41.1

출처: 고용노동부(2022) 중 발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또한 기존의 정책
방향이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성은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자리 창출과 유지보다는 일손 확보와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고용노동부가 현재 정책을 지속적으로 고수한다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할 때 꺼져가는 불에 오히려 물을 붓는 우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와 같이 불 때에,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일자리 정책들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전면적 개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5년 중기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해당 사항을 시급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전환 필요성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또한 기존의 정책 방향이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된 대표적인 정책이다. 소상공인 영역은 전통적으로 ‘고용의 저수지’라고 불리며 초과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이지만 소화해 주는 영역으로서 활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국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섹터는 2018년 기준 경제 내에서 30~40%에 달하는 높은 고용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나, 개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평균 규모는 비정상적으로 영세하여 소상공인 1개 업체당 고용은 1.5명을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18년 통계청 자료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897만명과, 201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취업자 2,682만명을 적용하여 계산하면 대한민국 경제에서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비중은 약 33%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에 의한 추정이므로, 일관성을 위해 2018년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의 전수 조사 기준 일자리 수 2,342만개를 적용하면 38%까지 비중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발표 기준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897만명과 소상공인 기업 620만개를 적용하면, 소상공인 1인당 소상공인 본인을 포함한 고용은 1.45명에 불과하기도 하다. 그 결과, KDI 이진국(2020)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 비중은 OECD 주요 33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2등에 달하는 특이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18년 기준 인구 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는 10.9%로, 11.6%인 멕시코에 이어 2등이며, OECD 33개국 단순 평균값은 6%이다. 대한민국은 취업자 2,682만명 중 21%가 자영업자 사장으로,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사장 수는 그리스, 멕시코에 이어 3등임을 확

인할 수 있다. 노인·어린이를 전부 포함한 인구 전체의 10%가 사장님인 국가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판단한다.

이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은퇴자 또는 저학력자로 다수 구성되었다면, 최근 경제활동조사를 확인해 보면 청년층과 고학력자들도 다수 자영업에 진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선택 측면에서는 인정될 수 있지만, 균

대한민국 소상공인
섹터의 고용 비중은
세계적으로 높은
33%에 달하는데, 이는
그간 소상공인 영역을
고용의 저수지로
간주하여 인구증가에
따른 초과 노동 공급을
비생산적으로 소화해
주는 영역으로 활용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표 6> 국가별 자영업자 비중: 전산업(2018년 기준)

국가	취업자 (천명)	임금 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인구 대비 자영업자 수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소계	고용주	자영자		
Greece	3,751	67.4%	29.1%	7.5%	21.6%	3.5%	10.2%
Mexico	53,721	68.4%	27.1%	4.8%	22.3%	4.5%	11.6%
Korea	26,822	74.9%	21.0%	6.2%	14.9%	4.1%	10.9%
Italy	22,586	78.3%	20.6%	5.7%	14.9%	1.1%	7.7%
Turkey	27,882	69.5%	20.3%	4.4%	15.8%	10.2%	6.9%
Poland	16,133	80.3%	17.4%	3.9%	13.5%	2.3%	7.3%
Spain	19,136	84.4%	15.2%	4.8%	10.4%	0.4%	6.2%
Portugal	4,615	86.6%	13.1%	4.5%	8.6%	0.4%	5.9%
Ireland	2,180	86.7%	12.9%	4.1%	8.8%	0.4%	5.8%
Belgium	4,699	86.6%	12.7%	3.7%	8.9%	0.7%	5.2%
Switzerland	4,489	87.0%	11.6%	5.4%	6.2%	1.4%	6.1%
Finland	2,465	88.1%	11.6%	3.4%	8.1%	0.3%	5.2%
Iceland	188	88.8%	11.1%	3.9%	7.2%	0.1%	5.9%
France	26,686	88.8%	10.9%	4.1%	6.8%	0.3%	4.4%
Lithuania	1,324	88.5%	10.8%	2.4%	8.4%	0.7%	5.1%
Hungary	4,411	90.1%	9.7%	4.1%	5.6%	0.2%	4.4%
Australia	12,584	90.4%	9.5%	9.5%	0.0%	0.2%	4.8%
Sweden	4,910	91.3%	8.6%	3.5%	5.1%	0.1%	4.1%
Japan	66,640	89.1%	8.0%	8.0%	0.0%	2.3%	4.2%
Luxembourg	278	91.4%	7.5%	2.9%	4.6%	1.1%	3.4%
Denmark	2,739	92.5%	7.2%	3.1%	4.0%	0.3%	3.4%
Norway	2,545	93.6%	6.2%	1.8%	4.5%	0.2%	3.0%
United States	155,761	93.7%	6.2%	6.2%	0.0%	0.1%	3.0%
Czechia	5,147	83.5%	16.0%	3.0%	13.0%	0.5%	7.7%
Netherlands	8,543	84.3%	15.4%	3.9%	11.5%	0.3%	7.6%
Canada	18,658	84.7%	15.2%	4.6%	10.6%	0.1%	7.7%
Slovakia	2,533	85.4%	14.6%	2.8%	11.8%	0.0%	6.8%
United Kingdom	31,112	85.9%	13.8%	1.9%	11.9%	0.3%	6.5%
Latvia	873	88.6%	11.0%	4.4%	6.6%	0.4%	5.0%
Estonia	630	89.5%	10.4%	4.5%	6.0%	0.1%	5.0%
Slovenia	962	86.0%	12.1%	3.7%	8.4%	1.9%	5.6%
Austria	4,241	88.9%	10.4%	4.5%	5.9%	0.7%	5.0%
Germany	40,636	91.0%	8.8%	4.0%	4.8%	0.2%	4.3%

주: Norway는 2016년 기준

출처: EuroStat, ILO, OECD, Canada Stat, 경제활동인구조사 MDIS를 바탕으로 작성; 이진국(2020)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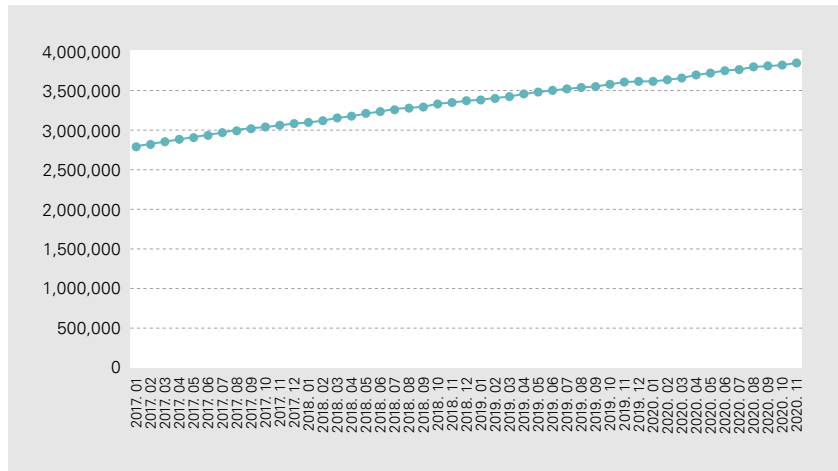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문제의 인식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명확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대한민국이 처한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자립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그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의존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 비자영업 섹터 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생산영역에서 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시급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KCB 기준 매달 2만개 가량 자영업자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정책 전환은 빠르게 이뤄질수록 바람직할 것임을 강력하게 제언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창업은 준비된 창업 중심으로만 관리하고, 폐업은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환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무리 없이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9] 자영업 사업체 수(KCB SOHO, 2017년 1월~2020년 11월)

(단위: 개)



출처: KCB(2021) 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V. 정책제언 및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한 재정정책을 비롯한 각종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문제의 인식을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명확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단순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등 무관한 정책 목표가 현재의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구 감소 자체는 과정은 어렵더라도 인구 밀도나 식량 안보 측면에서 정상화 측면의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것처럼 한 나라의 인구밀도는 출산율과 밀접한 역의 관계가 있다. 인구밀도가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인구 규모를 줄이는 가장 평화롭고 정상적인 해법은 출산율 감소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출산율이 일시적으로 낮아진 데 대해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물론, 몇 번이고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그 중간 조정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는 점은 우리에게 주어진 난제임은 분명하다. 난제 대응을 위한 제언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일관적인 틀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정책들이므로 어떤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정책 조합은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모든 정책들을 함께 고려하여 인구 시뮬레이션을 통해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에서는 향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 기술의 개선이 인구문제, 생산인구비중 감소 문제의 최종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민의 수용이나 노인 개념 재정의에 못지 않은, 또는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음을 제시했다. 이처럼 모든 가능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보다 나은 정책을 고르고 설계하며 조합할 수 있다면 당면한 생산인구 감소 문제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재정정책 중 인구 증가를 전제하고 대응으로 설계한 정책들은 신속하게 전면적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고용정책은 일자리 정책 중심에서 일손 정책 중심, 소상공인 정책은 창업과 유지 지원으로부터 전환 지원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방의 경우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게 되므로 비대칭적 전력 문제의 해결을 포함한 압도적인 전력 확보 등의 숙제가 남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은 복합위기이며 난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일 옥석혼호(玉石混淆)되어 있는 인구 정책들 중에서 적절한 정책들을 골라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과학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본고 가 이와 같은 정책 대응 과정에 조금이나마 참고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 상황은 복합위기이며 난제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일 옥석혼호되어 있는 인구 정책들 중에서 적절한 정책들을 골라내고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과학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는 인구 구조의 변화 과정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발표 - 2021년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2.6.28.
- 이진국, 「자영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정책제언 - 자영업자 비중의 결정 요인과 과잉 수준 분석: OECD 국가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시리즈, 한국개발연구원, 2021.
- 이태석,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KDI 포커스』 통권 115호, 한국개발연구원, 2022.
- 장우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역량 강화: 소상공인을 위한 생애주기지원체계 구축』, 2021~2025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코리아크레딧뷰로(KCB), 「KCB SOHO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데이터베이스 2021」, 2021.
- 통계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1세별 전국자료」, 2023.
- Blundell, R., Bond, S., "Initial conditions and moment restrictions in dynamic panel data models," J. Econometrics 87, pp.115-143.
- Chang, Woo Hyun, 「Can population density adjust populations via fertility rates?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population density on total fertility rates using the System GMM Model」, Working paper, 2024.
- World Bank, "Population density(people per sq/km)," 2023

정책연구

+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전병목·김평식

+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최인혁·조희평

+ 코로나19가 보건 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은경·김평식

01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 + 전병목 기업은행 상임감사
- +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향후 예상되는 급속하고 높은 수준의 고령화는 보건지출 부담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차적으로 전 국민 대상 단일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으로,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필수적 사항인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응이 중요하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미래에 필요한 지출수준을 적절한 부담수준 내에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장기지출전망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향 도출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비용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면 지속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서비스의 가치가 소득에 따라 높아지고 고령화로 절대적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속가능한 제도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출관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의료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제약이 낮고, 높은 고령화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현

실적인 건강보험 지출추계를 바탕으로 미래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 지출관리를 위한 재정관리제도의 개선을 바탕으로 장기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수입전망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의료서비스가 필수재이고 이를 비용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목표이므로 향후 늘어나는 재원규모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필요한 재원규모가 부담 가능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장기지출전망은 조성법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향 요인들 중 인구, 소득, 건강한 고령화 등의 영향을 중점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졌다. 인구요인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고, 소득요인은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의료서비스 수요구조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한 고령화는 향후 예상되는 기대수명의 증가가 의료서비스 수요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주기를 기존 5년에서 더 짧게 축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므로 최신의 인구추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여

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소득탄력성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의료수요에 대한 소득탄력성을 새롭게 추정하여 우리나라 의료수요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강한 고령화 효과는 평균수명이 1세 연장된다면 연령대별 의료지출구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반영이다. 평균수명만큼 건강수명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세밀한 분석 또는 현실적 가정을 바탕으로 장기지출전망을 시행하였다.

다양한 추계가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70년까지 중장기 지출을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 저출산 현상이 심화될수록, 소득탄력성이 낮을수록, 노령층이 과거에 비해 건강할수록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수준이 낮게 전망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GDP 대비 건강보험 지출이 2040년 6.5%, 2070년 7.8% 증가했지만,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2040년 8.1%, 2070년 11.6%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는 인구 변화, 소득효과, 잔차요인 등에 따라 건강보험 전망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전망 결과는 유사한 전망기법인 조성법을 사용한 다른 연구자들의 건강보험 지출전망치와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되었다. 추가적으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정부/강제보험의 비율¹⁾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의 지출수준은 동일한 총 보건지출 수준에서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추계 결과는 향후 보건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의료지출(사회보험) 관리 시스템을 분석해 본 결과 우리나라 재정관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적 재정관리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경우, 의료지출 증가를 제어하는 제도적 장치를 일정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제도로 운영하는 국가로 다수의 보험자가 존재하는 일본, 독일의 경우 지출수준에 따른 보험자 간 보험료율 차등을 허용하여 수요 조정의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다수의 보험자가 존재함에도 지출예산에 피보험자의 선행 질병요건, 성, 연령 등의 위험도를 반영하여 배분하고, 실제 지출이 이러한 예산배분액을 초과할 경우 개별 보험자가 부가기여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고정된 연방보험료율하에서 설정된 위험기반 예산수준을 초과하는 지출의 경우, 개별 보험료율 차등을 통한 수요 조정이라는 재정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재정관리의 사례는 프랑스로, 의료지출의 상한을 사전에 결정하고 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시스템 운용과 함께 지출상한 준수를 유도하는 제도를 함께 운용하고 있다. 재정당국과 복지당국의 협의를 바탕으로 지출상한을 설정하여 의회 승인을 얻고, 실제 지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당해 지출상한을 지키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 지출 상황에 따라 지불시스템의 조정 등 제도적 대응이 이루어진다. 또한 포괄수가제(DRG)과 같은 정액보상을 받는 분야 수가의 99.7%만 지급하고 0.3%에 해당하는 금액은 별

1) 건강보험의 보장률과도 유사한 개념이다.

도 관리하면서 지출상한 준수기제로 활용하고 있다. 동 금액은 지출상한을 준수하였을 때에 지불함으로써 의료공급자들이 외래진료 등에서 공급증가 유인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관리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재정관리에 중점을 두기 어려운 구조이다. 즉 재정관리보다는 이전의 불충분한 의료공급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위의 정책목표로 설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건지출 수준이 2022년 기준 GDP 대비 9.7%로 이미 OECD 평균수준(9.3%)을 초과하고 있어 공급 확대와 재정관리의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급속한 고령화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고령화율이 예상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재정관리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먼저 재정관리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재정당국과 국회의 역할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재정당국과 국회의 역할은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원분(예상수입의 20%)에 그치며, 지출수준에 대한 영향력도 제한적이다. 현재 강제보험인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은 2022년 76.6조 원으로 국세 세목 중에서도 소득세(128.7조원), 법인세(103.6조원), 부가가치세(81.6조원)에 이은 큰 수입규모²⁾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세목들에 대한 정부, 국회 등의 참여 정도를 감안할 때, 건강보험에서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재정당국 및 국회의 참여가 제도 운영의 정당성과 지속성 확보에 중요하

므로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건강보험 재정관리 기능은 그 역할을 담당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의 전문성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건강보험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의 구성은 총 25인 중 재정관리와 관련된 전문가로 확정된 위원은 재정당국(기획재정부) 1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 1명, 전문가 4명도 위원 구성에 포함되어 있지만 재정전문가라기보다는 보건전문가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의약업계 단체 대표자 8인, 시민(직역)단체 대표자 4인 등으로 구성되어 건강보험 보장범위 등과 관련된 세밀한 제도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심의회는 건강보험제도의 세밀한 운영, 보장범위 및 수준 결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회가 재정관리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구성 및 전문성에서 한계가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관리를 위한 별도 기구 설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와 같이 재정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출상한을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프랑스의 경우 사회보장 재정조달법(SSFA), 즉 지출수준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무부와 보건부가 참여하는 조직(The Social Security Directorate)을 운영하여 지출상한 도출을 유도하고 있다. 지출상한 결정 방법으로는 단순한 전년 대비 변화보다는 독일에서 의료재정 배분에 적용하는 피보험자의 선행 질병요건, 성, 연령 등 위험도를 반영한 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구구조의 변화, 건강상태의 변화 등을


2) 기획재정부, 「2022년 국세수입 실적(잠정)」, 보도자료, 2023. 1. 30.

반영할 수 있다면 재정당국, 보건복지부, 국회 등이 동의할 수 있는 지출수준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전체 재정규모에 대한 협의를 바탕으로 제도를 운용하게 되면,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상호 역할분담에 대한 논의의 장을 갖게 되어 일반예산 지원 확대라는 현재의 방식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구조로 변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관리를 위한 공동위원회 운용은 OECD(2015)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효과도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정당국과 복지부의 협력과정에서 직면하는 중요한 위험요인(Major challenges)으로 정부의 공유, 협력인센티브의 부족, 제도적 협력시스템의 부재, 재정당국의 보건정책 평가능력의 부족 등 모든 항목이 제시되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운용의 책임을 지는 보건복지부와 재정당국의 부족한 협력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도적인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기존 예산과정과 비슷하지만 세부내역 등에 대한 국회 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기존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반대논리³⁾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건강보험제도 운용의 자율성을 담보하면서 총지출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정치적 외압에 의한 세부적 제도 운용의 왜곡도 방지할 수 있다. 국회에 건강보험 지출상한에 대한 보고 과정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를 준수하기 위한 관리 노력의 책임성도 높일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출수준의

결정과 함께 이의 모니터링, 그리고 예산을 준수하기 위한 메커니즘 마련도 필요하다. 지출원인인 진료행위와 시차를 줄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출수준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디지털화가 상당히 진행된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지출 모니터링의 시차가 크지 않으므로 비교적 용이하게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지출상한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이다.

지출수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전적으로 설정된 예산수준을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중요하다. 민간부문 중심 행위별 수가제 의료시스템 체계 내에서는 사전적으로 설정된 예산수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메커니즘 마련이 전체 재정관리 시스템의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중심 의료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하며 국가의 영향력이 큰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보위원회(Alert Committee)를 통한 예산초과 가능성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그리고 최후의 수단으로 예산의 일정 부분(프랑스 0.3%)을 지급 연기하면서 지출상한 준수 시 지급하고 있다. 즉 의료공급자에 대한 지불시스템을 개편하여 보상액의 일정 부분을 지출예산 준수 여부에 연동시킴으로써 외래진료 등에 대한 공급자의 과다 공급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09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3) 전문성 저하, 대규모 감염병 등 발생 시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에 제한 등(메디칼타임즈, 「건보재정 건전화 방안 '기금화' 전략 놓고 국회 복지부 동상이몽」, 2023. 8. 4.)

02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 **최인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 **조희평**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으며,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복지 사업의 성격을 지닌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2024년에 2023년보다 14만 7천개 많은 총 103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1조 5,400억원에서 2조 26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⁴⁾ 이와 같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에 따라 해당 사업이 노동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복지 사업의 성격이 강조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의 특성상 관련된 분석은 2023년 12월 현재까지 희소한 편으로 확인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고령자의 비공공형 일자리 취업률 및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는 한편, 신중년 및 청년층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 역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타당성 내지 적절성을 간접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고령층의 노동시장 내 동학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Shimer(2012)의 방법론과 김지운(2019)의 방법론을 계절조정된 「경제활동인구조사」 월별 자료에 각각 적용함으로써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 및 변화에 노동시장 이행 경로들이 기여한 정도를 평가해 보고자 하였는데, 분석 결과 55~64세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은 대체로 실직률에 의해 주도됨을, 반면 65~74세 고령층의 실업률 변동은 대체로 구직률에 의해 주도됨을 발견하였다(<표 1> 참조). 나아가 2014년 이후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목격되는 65~74세 고령층의 실업률 상승은 해당 기간 구직률 하락에 의해, 반면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목격되는 실업률 하락은 해당 기간 실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 2023. 11. 2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165&pWise=Letter>, 검색일자: 2023.12.14.

직률 하락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추가로 밝혀내었다. 그에 따라 55~64세 고령층의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유지 지원책이, 65~74세 고령층의 실업률 완화를 위해서는 구직활동 지원책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동시에 현재 65세 이상 고령층을 주 대상으로 삼는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타당성이 일정 수준 이상 인정된다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표 1> 실업률 변동에 대한 구직률과 실직률의 기여도

연령	전체		남성		여성	
	구직률	실직률	구직률	실직률	구직률	실직률
15~74세	0.414	0.566	0.417	0.588	0.361	0.622
15~34세	0.613	0.405	0.571	0.477	0.667	0.364
35~54세	0.060	0.959	0.245	0.836	-0.127	1.107
55~74세	0.454	0.523	0.365	0.581	0.627	0.315
55~64세	0.347	0.630	0.202	0.784	0.540	0.421
65~74세	0.745	0.253	0.801	0.139	0.618	0.302

주: 구직률과 실직률의 기여도를 산출한 방법은 제3장 제2절 참조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고령층의 노동시장 내 동학에 대한 분석에 이어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2>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표는 공공형 일자리가 (2011년 65세 이상 인구 대비) 1%p 증가하였을 때 고령자 노동시장의 고용, 근로시간, 시간당 임금, 월 근로소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공공형 일자리 증가가 고령자 고용률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이어지더라도 민간 부문 비공공형 일자리는 65세 인구 대비 0.4%p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공공형 일자리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으므로 전체 일자리의 평균 근로시간은 1.3% 감소하되, 비공공형 일자리 종사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아가 공공형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므로 전체 고령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감소하지 않는 가운데 비공공형 일자리 종사자의 시간당 임금은(민간 노동시장에서의 노동공급 감소로 인해) 1.4%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만 공공형 일자리의 월 급여 자체는 낮으므로 고령 근로자 전체의 평균 근로소득은 1.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이 타 연령대 노동시장에 미쳤을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역시 본 연구에서 추가로 시도되었으나, 표본 규모 등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 고용보험 DB 등을 활용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이 타 연령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이 보다 상세하고 엄밀히 수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공공형 일자리 1%p 증가가 고령자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추정 결과


구분	전체 일자리 (비공공형 + 공공형)	비공공형 일자리
고용	0.6%p 증가*	0.4%p 감소*
근로시간	1.3% 감소*	0.3% 증가
시간당 임금 (자영업 제외)	0.8% 증가	1.4% 증가*
월 근로소득 (자영업 제외)	1.5% 감소*	1% 증가

주: 1. 표는 65세 인구 대비 공공형 일자리가 1%p 증가했을 때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

2. 95% 수준 이상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로 표기함
출처: 저자 작성

이상의 분석 결과들은, 요컨대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해당 사업 운영으로 인해 민간 노동시장 내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만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 최소화를 정책목표 중 하나로 상정하고자 한다면 현재 65세로 설정되어 있는 공익활동 연령 기준의 상향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공공형 일자리 증가가 비공공형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70세 미만에서 민간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의 궁극적인 목표는 고령층의 후생 증가라 할 수 있으므로, 공익활동 연령 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 시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로 인하여 기대될 수 있는 건강 증진 및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노인 빈곤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됨은 물론 양적·질적 확대까지 동반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장기적 운영방향을 신중히 고민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해당 과정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칠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종합적으로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즉, 노인 일자리 사업의 양적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확대 추진 정책이 고령층 노동시장은 물론 다른 연령대 노동시장에 미칠 간접적 영향까지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아울러 충분한 사전평가를 거쳐 정책이 확대 운영된 이후 실제 발현된 영향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통하여 사업의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가는 과정 역시 안정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10 『노인 일자리 사업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03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

- +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지난 3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가 개인의 의료이용 행태, 그리고 국가의 의료비 지출, 보건의료 시스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코로나19가 개인의 의료이용량을 감소 혹은 증가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모두 존재한다. 우선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은 코로나19 이후 의료 서비스 이용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공급자 측면의 병상 및 인력 부족 등은 비자발적으로 개인의 이동 및 의료이용에 제약을 가했을 수 있다. 한편, 감염 우려로 인한 개인의 자발적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 강화 등은 다른 감염병 유병률을 낮추어 의료서비스 수요가 감소했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역시 의료 수요를 낮출 수 있다. 반면, 감염병 위험을 회피하고자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조차 적시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이로 인한 실내 생활 증가, 스트레스 증가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된다면 중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은 증가할 수 있다.

제Ⅱ장에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기반한 코로

나19 전후 의료이용량 추이를 살펴보면, 발생 직후인 2020년 의료이용량이 감소하였다가 2021년에는 일부 회복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코로나19가 의료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는 소득, 건강, 위험인식 등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Grossman(1972a; 1972b) 모형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제Ⅲ장은 코로나19가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1절은 개인 레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자료(2018~2021년)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월별 자료에 기반하여 이벤트 스테디 형태의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이용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메커니즘을 제외하기 위해 분석대상을 직장가입자에 한정하였으며, 지역가입자와 사망자, 의료급여자를 제외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월 시점 이후 월 평균 외래 방문횟수와 입원횟수, 진료비는 감소하였다가 회복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발생 이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는 못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어 코로나19의

효과가 개인의 특성(연령, 소득) 및 질병 특성(중증, 경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여, 분석대상을 특성별로 구분하여 재분석하였다. 연령대 구분 시, 20세 미만 소아·청소년 그룹에서의 의료이용 감소 폭이 두드러졌으며 65세 이상 노인 그룹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입원 대신 외래진료로 대체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수준(건강보험료)으로 구분 시에는 고소득층이 저소득층보다 의료이용량을 더 크게 감소시켜 탄력성이 큰 것을 확인하였다. 질병의 중증도별로는 경증질환자의 의료이용 감소 폭이 훨씬 컸으며 중증질환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제Ⅲ장의 제2절은 한국재정패널 연간 자료(2017~2021년)를 사용하여 가구 단위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하였다. 건강보험공단 맞춤형 자료가 건강보험 급여에 한정된 정보만을 담고 있는 반면, 한국재정패널은 비록 가구 레벨이긴 하지만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지 않고 가구가 부담한 의료비 총액을 제시하고 있어 보건 의료 지출 관련 실제 가구 부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재정패널 자료는 가구 부담 의료비 지출 전체와 함께 7개 항목의 의료비 지출(입원, 외래, 약제, 건강검진, 한약, 치과, 성형수술)로 구분하고 있어 의료비 지출의 성격에 따른 효과의 이질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가구 부담 의료비 지출은 약 5% 감소하였다. 이 중 입원 의료비 감소가 11%로 가장 컸으며, 외래 6%, 한방은 7% 감소하였으나 약제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제Ⅳ장에서는 코로나19 경험이 보건 의료 시스템에 미치는 효과와 미래 대비 보건 의료 재정의 중장기 과제를 제시하였다. 국제비교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은 전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었으나 건강지표(사망, 초과사망률, 평균수명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통해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며, 이미 원격의료이 존재하던 국가들에서는 이를 보다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제기구 보고서에서 미래 대비 보건 의료 부문에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 의료 인력 양성, 예방적 서비스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각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 왔기 때문에 미래 대비 투자를 위한 재정의 여력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재 운용되는 보건 의료 예산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대상을 직장가입자로 한정된 점, 분석자료를 2021년까지만 사용한 점 등을 연구의 한계로 밝혀두었다. 또한 추후 연구에는 코로나19가 건강 상태 및 세부 질병 유병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세부 그룹에 대한 효과의 이질성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의료이용량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와 연계하여 코로나19 효과의 메커니즘을 유추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이 원고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행한 연구보고서 23-11 『코로나19가 보건 의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으로 필자 개인의 의견입니다.

정책토론키포트

- + 2024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캄보디아 회의
- + 2024년도 PEMNA 예산분과 마닐라 회의



2024년도 PEMNA 국고회계분과 캄보디아 회의

개요

- **주 제** 회계책임성 강화 및 정부 자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Accrual Accounting for Enhanced Accountability and Better Decision Making in the Management of Government resources)
- **일 시** 2024년 3월 12일 (화) ~ 14일 (목)
- **장 소**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 **주 최** 캄보디아 재경부,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유럽연합
- **참 석 자** 92명
 - PEMNA 10개 회원국 재무부 공무원,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전문가
 - 참가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14개 회원국 중 10개국이 참석)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 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의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회의는 2024년 3월 12-14일 3일에 걸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주관, 캄보디아 재정부(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및 세계은행 주최 하에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발생주의 회계 도입이라는 큰 주제 아래 회계책임성 및 정부자원 관리 강화에 대하여 각 회원국 및 국제전문가들의 경험과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재정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DAY 1

3월 12일(화)

Opening Session

Welcome Remarks

• Bansovannatichasila Ming (Cambodia)

- 캄보디아 재정부 심의관 Bansovannatichasila Ming은 개회사에서 2024년 PEMNA의 첫 번째 국고회계분과 회의 개최를 축하하며 캄보디아의 회계 제도 개혁의 현주소와 PEMNA 활동이 개혁에 기여한 바를 소개하고, 본 국고회계분과회의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회원국에게 배움의 장이자 교류의 장이 되길 기원함
 - 캄보디아 정부는 발생주의회계로 전환하기 위해 단계적 접근법(piecemeal approach)을 채택함
 - 캄보디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4단계에 걸쳐 다단계로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는 전략을 세웠으나 발생주의회계 처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전문 인력 강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캄보디아는 PEMNA 현장 방문 프로그램과 관련 회의에 참가하여 주변국의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PEMNA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PEMNA 회원국들과의 지속적인 교류의지를 표명함

Opening Remarks 1

• Alma Kanani (The World Bank)

■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인 Alma Kanani는 캄보디아 재정부와 주요 참석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본 회의 주제의 의의와 시기적절성을 설명하였고, PEMNA 회원국이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정보 교류의 중요성을 역설함

- 최근 투명한 국가 재정 운용과 재정 정보 공개에 대한 시민 요구가 증가하면서,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거나 채택을 고려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발생주의회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지원, △인적 자원 증가, △법적 제도 마련, △모니터링 제도 구축 등을 권고함
- PEMNA 회원국이 위와 같이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필요한 준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회원국 간 정보 교류를 장려하며 연사를 마침

Opening Remarks 2

• Eduardo Anthony G. Mariño III (The Philippines)

■ PEMNA 국고회계분과 의장대리 Eduardo Anthony G. Mariño III는 본 회의가 2023년 PEMNA 연차총회에서 다룬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이하 IFMIS) 논의를 확장하여 IFMIS와 발생주의회계의 관계를 논한다는 점에서 회의 간 연속성을 강조함

- 특히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을 위해서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발생주의회계의 이점을 이해관계자에게 설명하고, 그 이점을 실제로 구현하여 이해관계자가 발생주의회계를 지지하고 회계 방식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함

- 마지막으로, 국가별 발생주의회계 사례와 적용 분야,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필요한 요소 등 다양한 사항을 다루는 본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발생주의회계와 관련된 정보를 배우는 기회가 되길 소망함

Session 1. Experiences in Implementing Accrual Accounting

Presentation 1

• Ian Carruthers (Chair of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IPSASB)

■ 현재 범세계적으로, 많은 정부들이 현금주의회계에서 발생주의회계로 전환을 하고 있으며, 두 차례 발표된 국제공공부문 재무회계책임성 지표(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에 따라 세계적으로 발생주의회계 시스템 도입이 2030년에는 최대 7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이하 IPSAS) 이행

및 도입은 해당 정부의 금융 신뢰도 및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며, 정부의 공공재정관리 역량 강화도 가능함

- 이행 성공의 주요 요인으로는 △견고한 도입 전략 수립 △IT 시스템 변환 준비 △현실적인 지침 및 가이드라인과 도입 일정 관리 등이 강조됨
- 이외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위한 성공 사례 보고 및 의회와 감사원이 참여하는 전환 프로젝트 운영위원회 설립을 권고함

Presentation 2

• Thomas Müller-Marqués Berger
(MMB Consult)

■ 발생주의회계 방식은 기존 현금주의 회계의 한계점을 보완하였으며, 이와 함께 IPSAS의 도입은 정부 회계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것에 기여함

- 발생주의 방식에 입각한 회계 처리 및 결과 보고는 기존의 현금주의 방식보다 △공공 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비교하는 데 유리 △더 많은 정보 공개를 통한 재정 투명성 강화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을 통해 정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등의 장점이 존재함
- 또한 IPSAS의 채택을 위해서는 관련 법안 개정 및 공무원 지식 및 활용역량 강화, 관련 기술·정보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재정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
 - 성공적인 IPSAS 적용을 위해서는 정부와 함께 정치인, 의회, 회계 감사 기구, 회계 전문기관 등의 지원과 협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제언함

- 또한, IPSAS 적용 이전 단계부터 도입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미디어를 통해 IPSAS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높이는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 간 정기적인 소통도 중요함

Presentation 3

• Samnang Heng (Cambodia)

■ 캄보디아는 현재 현금주의회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아래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2022년에서 2031년까지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을 완성하는 4단계 전략을 계획하였음

- △1단계(2019~2024년)에서는 현금주의회계 방식을 유지하되 명료한 회계 기준을 마련, △2단계(2025~2027년)에서는 수정 현금주의회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결과 보고와 정보 공개에 대한 기준을 추가, △3단계(2028~2030년)는 본격적인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기 이전, 보다 향상된 회계 시스템을 적용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회계 기준을 마련 △4단계 (2031년~)에서는 발생주의회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모든 분야에서 발생주의회계를 기반으로 한 회계 기준을 설립을 목표로함
- 현재 캄보디아 정부는 발생주의회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체계화된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FMIS), 법적 제도 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발생주의회계 도입 준비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발생주의회계 도입이 국가와 국민에게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함
 - 발생주의회계는 정부 활동을 공개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정부 재정, 자산과 부채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함

- 발생주의회계 도입을 통해 재정 투명성·책임성·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창출함
- 발생주의회계 도입으로 다른 국가의 재무제표와 비교함으로써 재무제표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

- 하지만 캄보디아는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의 전환 목표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목표일 내에 전환이 완성될지 미지수임
 - 특히 회계 처리와 데이터 수집 및 공개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이 부재하고 전문인력 부족 및 관련 법률 부재 문제도 있음
- 캄보디아는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한 인근 국가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이것이 캄보디아의 재정 투명성 및 정부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함

상태를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지만, 일반 국민이 재정 상태를 이해하기에 구성이 복잡하고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가 누락되었다는 비판이 있음

- 특히, 한국 정부의 재무제표는 다른 국가에 비해 길고 방대하여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임

- 현 국가결산보고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고서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새로운 형식의 국가결산보고서를 도입할 예정임
 - 새롭게 제안된 국가결산보고서에서는 항목 분류 체계가 개편되어 항목 개수가 감소함
 - 재정운영표에 작성하는 프로그램 순비용은 15개의 분야로 나누어 작성하고 수입·지출 항목을 간소화함
 - 분산되어 있던 상세 설명 자료를 통합하고, 보충 설명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석체계를 개편하고자 함
- 이러한 대대적인 개편으로 한국 정부는 재무제표의 가독성을 높이고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국민 이해가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함

Presentation 4

•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 정부는 현재 국민중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음
 - 국가결산보고서의 주요 구성으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있음
 - 재무제표는 복식주의회계에 입각하여 작성되며, 중앙 부처의 재정 활동만 기록하며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으로 구성됨
 - 국가결산보고서는 각 중앙 부처의 재정 활동과

Presentation 5

• Rahmat Mulyono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발생주의회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국가로, 세분화된 정책과 지속적인 감사로 회계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
 - 인도네시아의 발생주의회계 도입은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도입 및 이행에 요구되는 법률, 위원회, 회계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이라고 평가됨

- 인도네시아가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제정한 금융법과 재무법은 회계 기준의 기초 토대가 됨
- 정부, 전문가, 실무자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회계기준위원회(GASC)를 신설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한 법률의 초석을 마련함
- 정부 회계기준(GAS)을 마련하여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 전환이 초기에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으며, 현재까지 17개의 회계 운영표가 GAS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지방 정부도 동일한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회계 정보를 기록하는 바, 이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공개한 회계 정보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
- 인도네시아는 현 발생주의회계 제도를 더욱 개선 및 보완하는 방안을 구상 중임
- 일례로 △예산 집행 과정만 아니라 집행 결과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회계 결과보고서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재정 정책을 반영 △보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재정정보시스템 강화 노력 등이 있음

Presentation 6

• Desmond Ferguson (EU)

- 현재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일관된 회계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각 국가의 자율성이 존중되

지만, EU는 회원국이 동일한 회계기준에 입각한 회계 처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럽공공부문 회계기준(Europe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EPSAS)이라 불리는 고유한 기준을 고안하였고 이를 곧 이행할 예정임

- EU 27개 회원국 중 16개국이 발생주의회계를 채택하였고, 독일과 네덜란드를 포함한 5개국은 현금주의회계를 유지하고 있음
-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은 회계 처리 결과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표준화된 재정 보고 양식과 회계계정목록(Chart of Account, CoA)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 수준과 무관하게 회계 처리 결과를 비교하기 용이함
- EPSAS 도입은 현재 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이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Session 2. Building Capacity for Accrual Accounting

Presentation 1

• Arman Vatyan (The World Bank)

- 발표자는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발생주의회계를 이해하고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함
- 공공부문화계(이하 PSA) 교육은 크게 세 가지 (△재무부 차원에서 실무자 교육, △Profes-

sional Accounting Organization (PAO)의 자체적 교육, △PSA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교육,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IPSAS 도입으로 공무원들의 회계 처리 역량이 중요해졌으나, 많은 국가에서 발생주의회계와 IPSAS를 온전히 이해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수가 적은 어려움이 존재함
 -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업무 자격요건은 없고 공무원이 고등교육기관에서 PSA 관련 교육을 수료하는 것도 흔하지 않은 실정임
 - 특히 PAO가 실시하는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민간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음
- PSA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고등교육 기관뿐 아니라 교육 기관으로서의 국제기구의 역할도 중요함
 - 일례로 세계은행은 Public Sector Accounting and Reporting Program (PULSAR)을 운영하여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이들이 추후 자국의 PSA 개혁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임

Presentation 2

• Patrice Schumesch
(PricewaterhouseCoopers, PwC)

- 발표자는 PwC가 공무원 대상으로 개발한 온

라인 IPSAS 연수 애플리케이션인 ‘IPSAS in a Box’를 소개하며 해당 콘텐츠가 회원국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

- PwC의 ‘IPSAS in a Box’는 IPSAS e-learning 과 e-assessment 콘텐츠를 모든 언어로 지원함으로써 사용자가 온라인으로 관련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교육을 제공함
 - 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자신의 지식을 자세히 평가할 수 있으며, 학습과 평가를 완료한 학습자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됨
- PwC는 이러한 콘텐츠 및 향후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 및 개선하여 회계 종사자들의 IPSAS 관련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Presentation 3

• Bolormaa Budsuren (Mongolia)

- 몽골은 현재 수정 발생주의회계를 공공부문에 적용 중이며, 2028년까지 발생주의회계와 IPSAS를 전면 도입할 계획임
 - 몽골에서는 민간부문은 1993년부터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것에 반해 정부에서는 아직 수정 발생주의회계를 사용 중임
 - 몽골은 자체 로드맵을 바탕으로 2023년에 재무 및 정부 내 예산 기관은 발생주의회계의 전환을 시작했고, 2028년에 발생주의 회계를 공공부문에 전면 도입할 계획임
 - 로드맵의 첫 번째 단계(2023~2024년)에서는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필요한 법률과 실제 도

- 입 시 고려해야 하는 변수들을 분석할 예정임
- 2단계(2025~2026년)에서는 발생주의회계에 기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감사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 마지막 3단계(2027~2028년)에서는 회계 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정비하고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임
- 몽골 정부는 이러한 발생주의회계의 다단계 도입으로 정부 회계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보고를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함

Presentation 4

• Wakhid Susilo (Indonesia)

- 인도네시아는 발생주의회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사용 중인 국가로, 발생주의회계 도입을 위한 인도네시아의 준비 과정, 현재 직면하고 있는 한계점과 그 극복 방안을 소개함
- 인도네시아는 2010년부터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착수하여 2015년에 발생주의회계를 전면 도입함
 - 발생주의회계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관련 정책과 법안을 제정하였고, IT 시스템 확충 및 종사자들의 시스템 활용 능력을 강화함
- 인도네시아는 발생주의회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국가로 평가받지만, 여전히 여러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 회계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발생주의회계

정책의 세부 사안을 제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발생주의회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종사자들이 현저히 적음

-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적 자원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내부적으로 정부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발생주의회계에 대한 부처의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 외적 해결방안으로, 호주와 협력하여 선진 시스템을 배우고 소셜 미디어와 업무지원센터 등 종사자들이 발생주의회계를 적용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함

Session 3.

Strengthening Fixed Asset Management through Accrual Accounting

Presentation 1

• Ingrida Muckutė (Lithuania)

- 리투아니아는 자산회계부문에서 △회계 및 보고 기능의 중앙 집중화 △공공부문 단체를 위한 IT 시스템 도입 △자산관리 시스템과의 통합 등으로 리투아니아 자산 회계의 발전을 도모함
- 리투아니아는 2004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에는 자산회계 법률을 자국 내 기준으로 제정하여 자산과 부채의 재고 수를 전환일 기준으로 기록 가능케 함
 - 일례로 이전 계정과목표(Chart of Accounts)의

자산과 부채의 금액을 신규 계정과목표에 등록하며 국가공공회계기준(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기준에 맞춰 조정

때문에, 자국 내 관련 제도를 만들 때 IPSAS 45를 참고할 것을 제언함

DAY 2

3월 13일(수)

Session 3. (Cont.)

Presentation 2

• **Andreas Bergmann (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ZHAW)**

- 자산 관리 강화에 있어 발생주의회계의 중요성을 역설, 특히 IPSAS 17에서 IPSAS 45로의 개선으로 인해 자산관리의 효율성이 증진되었다고 강조하며, IPSAS 45가 해당 분야의 평가 및 공개를 위한 핵심 국제 표준임을 설명함
 - IPSAS 45는 IPSAS 17과 비교하여 △공공기관 시설에 대한 인식 및 가치 측정이 개선 △후속 측정의 경우 현재가치 또는 역사적 가치 모두 사용 가능 △현재 영업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 또는 적정가치를 기준으로 현 자산가치를 측정하며, 유산자산은 측정이 가능할 경우 기록을 의무적으로 명시함
- 또한 사회기반시설 자산이 정부 지출과 정부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 정부차원에서 해당 자산을 정확히 측정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IPSAS 45는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인식(recognition)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이드라인 및 표준을 제공하기

Presentation 3

• **Rozita binti Aminuddin (Malaysia)**


- 말레이시아의 현재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사회기반시설 자산의 회계 처리는 말레이시아 공공부문 회계 기준(Malaysian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MPSAS) 17을 따르며 직선법(Straight line method)을 사용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의 고정자산 회계 처리의 한계점으로 △자산별 명확한 정의와 가이드라인 부족 △일관적이지 않은 회계 및 보고 △가치 평가 과정의 어려움 등이 존재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꾸려 해당 자산과 측정값을 파악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여 고정자산의 올바른 정의와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의 방안을 마련 중임

Presentation 4

• **Odelia Lay Verdial (Timor-Leste)**

- 동티모르는 재무부의 자산 등록 시스템을 활용하여 유무형 자산, 사회 시설 기반 자산, 국유재산 등을 등록할 수 있음
 - 정부 자산은 유형고정자산(Property, Plant and Equipment), 무형자산, 재고, 생물 자산 등으로 분류됨

- 추가로 동티모르는 자산 관리의 체계적인 등록 및 가치 평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함
 - 계획으로는 △고정자산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동화된 자료 수집 및 등록 △고정자산과 유동자산의 명확한 보고 체계 확립 △포괄적 자산 보고를 위한 발생주의 회계로의 전환 등이 있음
 - 특히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을 통해 고정자산 관리 강화를 꾀하며, 보다 효과적인 자산 분류 및 고정자산 등록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 조정 등의 효과를 기대함

분과간사, 유럽연합(EU),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회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 준 캄보디아 재경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Wrap-up Session

Closing Remarks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PEMNA 사무국장)은 폐회사를 통해 발생주의 회계 도입이라는 큰 주제 아래 회계책임성 및 정부자원 관리 강화에 중요성을 고려하고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한 본 회의의 주제가 시의적절하고 중요함을 강조함
 - 특히 발생주의회계 도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바, PEMNA 회원국들의 발생주의회계 도입 단계에서의 각기 다른 경험을 공유하고 어떠한 개선점과 노력이 있는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회의였다고 평가함
-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본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해준 발표자, 국제전문가, 분과의장,



2024년도 PEMNA 예산분과 마닐라 회의

개요

- **주 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성 제고(Effective Foundations for Successful Program Budgeting)
- **일 시** 2024년 3월 25일 (월) ~ 27일 (수)
- **장 소** 필리핀 마닐라
- **주 최** 필리핀 예산관리부, 세계은행
- **주 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후 원**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유럽연합
- **참 석 자** 60명
 - PEMNA 11개 회원국 재무부 공무원, 세계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럽연합 및 국제기구 전문가
 - 참가국: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한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14개 회원국 중 11개국 참석)

■ PEMNA(Public Expenditure Management Network in Asia, 아태재정네트워크)는 아태지역 국가의 공공재정관리능력(Public Financial Management) 배양을 목적으로 2012년에 설립된 국가 간 재정협력체임

- PEMNA 사업은 세계은행(World Bank)이 주관하고 기획재정부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이 후원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사무국을 담당함
- 회원국은 한국,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브루나이로 총 14개 국가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계은행, EU, IMF가 개발협력회원으로 참여함
- PEMNA는 국고회계분과와 예산분과 총 2개 분과를 운영 중이며 2012년 1차 총회 이후 매년 연 1회의 총회와 2-4회의 분과회의, 벤치마킹, 연구보고서 발간 등 활발한 교류 및 역량 강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본 회의는 2024년 3월 25~27일 3일에 걸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 필리핀 예산관리부(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DBM) 및 세계은행 주최하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성 제고(Effective Foundations for Successful Program Budgeting)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재정협력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였음

DAY 1

3월 25일(월)

Opening Session

Welcome Remarks

• Joselito R. Basilio (The Philippines)

■ 필리핀 예산관리부 Joselito R. Basilio 차관은 주최 측 대표로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2024년도 PEMNA 예산분과 마닐라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하였으며, PEMNA 네트워크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성과지향적인 예산정책과 높은 수준의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은 정부 자원을 효과적·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음. PEMNA의 지식공유 네트워크는 이해관계자들의 지식을 증진하고, 각국 공공재정 실무자들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척 중요함
- 이번 회의를 통해 △ 성과기반예산 편성을 위한 프로그램 분류 방안, △ 프로그램 예산제도 운영 사례 등에 대해 상호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필리핀 공공재정개혁의 일환인 다부처 프로그램 예산제도(Program Convergence Budgeting, PCB)는 정보 관리의 구조화를 통해 예산 과정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필리핀 예산관리부와 PEMNA 사무국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되고, 활발한 지식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Opening Remarks

• 박준호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 박준호 재정건전성심의관은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으로서 처음으로 PEMNA 회의에 참석하여 이번 회의 참석자 전원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지금까지의 PEMNA 활동을 되돌아보고, PEMNA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공유함
 - 지난 12년간 PEMNA는 총회 12회, 분과회의 35회, 현장방문 13회 등 여러 국제회의를 개최하며 아태지역의 국제재정네트워크로 성장함
 - PEMNA 2기의 마무리를 축하하며, PEMNA 3기에는 EU 및 PEMPAL 지역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를 기원함
 - 마지막으로 본 회의가 참석자 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협력과 교류의 장이 되길 희망함

Introductory Remarks

• Rofyanto Kurniawan (Indonesia)

- PEMNA 예산분과 의장 Rofyanto Kurniawan은 이번 마닐라 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모든 담당자들과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였으며, 공공예산관리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함
 - 공공예산관리는 제한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원 배분의 과정으로, 좋은 예산관리란 국민들의 웰빙 증진을 위해 보건, 교육 등의 주요 분야를 지원하고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일컫음
 -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기획재정부, 재무부 등

일선 부처들의 전략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으며, 공공사업의 성과 및 결과에 집중하여 기획, 재정, 평가에 전방위적으로 접근해야 함. 또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프로그램 목표와 각 프로그램의 편익 및 비용,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함

- 본 회의가 회원국들에게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위한 효과적인 기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하며, 세계은행과 유럽연합 등의 국제 전문가들과 회원국들의 발표를 통해 실용적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기를 기대함

Congratulatory Remarks

• Gonzalo J. Varela (The World Bank)

- 세계은행의 선임 경제학자 Gonzalo J. Varela는 회의를 주최한 필리핀 예산관리부와 PEMNA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온 한국과 EU에 감사를 전하며, 새로 부임한 박준호 공동의장의 취임을 환영함. 또한 세계은행의 활동 및 목표를 공유하는 PEMNA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세계은행은 필리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업은 여러 정부 개혁 정책의 토대가 되고 있음
 - 특히, 성공적인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정부 혁신의 효과적인 기반이 될 수 있고, 이는 필리핀 정부의 개혁 목표이기도 함. 이러한 점에서 PEMNA와 같은 다양한 국가 경험 및 지식 공유의 장이 있다는 것은 무척 중요함
 - 또한, 성과기반 예산제도는 예산 담당자들로 하여금 예산 투입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

나 측정 가능한 결과의 산출 및 효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줌

- 한편, 다양한 국가들의 경험을 비추어봤을 때 프로그램 기반 예산 집행에는 여러 어려움도 존재하는데, 몇몇 국가는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예산이 분산화되고 투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되기도 함. 따라서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접근 방식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 PEMNA가 지속적으로 활발한 상호작용, 다자 협력, 지식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틀 간의 회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함

Session 1. Program Classification for Performance-Based Budgeting: How to Structure Budgets to Enable the Use of Evidence

Presentation 1

• Ivor Beazley (The World Bank)

- Ivor Beazley는 효과적인 예산 프로그램 기획 및 사례에 대해 발표함.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성공 여부는 정부의 주요 전략적 프로세스와 예산 간의 강한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에 달려있음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위해 갖춰야 할 전제조건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특히 △ 투명성 및 책임성 증진, △ 정책결정과 일치하는 자원 배분, △ 성과 데이터를 통한 공공서비스 자원 관리 등이 뒷받침되어야 함. 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명확한 목표를 지정하기 전 주요 정부인사, 입법기관, 부처, 감사기관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칠 것
- 조직예산법, 규제법,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반을 법으로 제정할 것
- 현재 OECD 국가들은 세 가지 유형의 - 형식적(presentational approach), 성과정보 기반(performance-informed) 및 성과 관리적(managerial performance)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채택 중임
- 정부의 전략 기획 프레임워크는 예산 절차와 연결되어 모든 프로그램이 정부 목표 및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설정되어야 함
 - 중기적 관점(medium-term)에서 전국(national) 단위 혹은 분야(sector) 단위의 전략 기획을 예산 절차와 연결해야 함
 - 프로그램 성과를 측정하는 데 활용된 주요성과 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 이하 KPI)는 해당 전략 기획들과 부합해야 함
 - 공공재정개혁과 더불어 중장기 재정·지출 프레임워크를 수립해야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기본은 프로그램이며, 프로그램이 예산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함. 또한 프로그램은 정부 조직의 역할과 부합해야 하며 각 분야에서 공공재화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함
 - 프로그램은 부처마다 5-7개 정도가 적당하며, 필요시 하위 프로그램(sub program)을 추가

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 프로그램 기획은 유연해야 하고 성과에서 산출되는 가치에 집중해야 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위해 IT 기반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이하 IFMIS) 개발이 무척 중요함. IFMIS는 예산 관리를 위한 모듈을 제공하며, KPI 모니터링 및 평가 데이터 관리에도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음

- 한편, 각각의 시스템은 동일한 데이터와 분류법을 채택해야 하며, 전산화된 시스템을 통해 예산절차 중 발생한 변화를 추적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함
- 또한 지속적으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역량훈련을 실시하여 원활한 의사결정능력을 제고해야 함

Presentation 2

• Damien Ruggeri (EU)

■ Damien Ruggeri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의하고, △ 형식적 접근(presentational approach), △ 성과정보기반 예산제도(performance-informed budgeting), △ 성과기반 예산제도(performance-based budgeting), △ 성과관리적 접근(managerial performance approach)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형식적 접근은 성과 정보를 제공하지만 예산 분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성과정보기반 예산제도는 간접적으로, 성과기반 예산제도는

직접적으로 성과정보가 예산 분배에 영향을 미침

- 대다수의 EU 회원국들은 형식적 접근과 성과정보기반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의 성과정보는 투명성 제고, 책무성 강화, 효율성 증대, 재정긴축(austerity), 결과중심적 의사결정 등의 목적으로 활용

■ EU 회원국 중 프랑스, 스웨덴, 독일, 네덜란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6개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소개

- 지난 20년간 프랑스는 △ 주요 정책에 맞춘 예산체계 개편, △ 지표 및 목표 수 축소, △ 중앙 IT 시스템 개발을 통한 전략적 목적 및 각 사업 목표 간 연계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킴
- 스웨덴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음. 재무부와 의회 간 협의를 통해 예산 관련 내각회의를 위한 성과지표를 선정하고, 장기적(10년) 성과지표를 수립하는 것이 특징임
- 독일은 성과지표를 활용하지는 않지만, 지출 검토(spending review)를 통해 지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관리함
-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각 당들의 수많은 개혁안으로 인해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많아져 행정상의 부담이 커지고 해당 지표들이 유용하게 활용되지 않아 2011~2013년의 예산제도 개혁을 통해 지표를 절반 수준으로 축소함
- 아일랜드는 중기재정계획(Medium-Term Ex-

penditure Framework, 이하 MTEF) 및 지출 검토를 도입하였으며, 의회 예산국(Parliamentary Budget Office)과 아일랜드 정부 경제 평가 서비스(Irish Government Economic and Evaluation Service) 설립을 통해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강화함

- 오스트리아는 MTEF 도입, 예산제도 간소화, 연방정부 차원의 새로운 예산국 설립, 주기적인 외부평가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예산 개혁을 진행하고 있음

■ EU 차원에서는 2000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활용하였고, 2014~2020년 다년도 재정운용 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부터 모든 사업에 성과체계를 도입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강화됨. 특히 2015년에 도입한 결과 중심의 예산 계획(Budget Focused on Results Initiative)을 통해 성과에 더욱 초점을 맞춤

- △ 성과 데이터 품질, △ 투입·산출 간 연결성, △ 정부 전략 및 예산의 연계, △ 성과지표 수 축소, △ 결과에 대한 책무성, △ 정보에 대한 시민들과 기타관계자의 접근용이성 등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기대치를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개선해나갈 것을 제언

Presentation 3

• Naida Čaršimamović Vukotić (PEMPAL)

■ 유라시아 재정협력 네트워크(PEMPAL)에서는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예산구조와 연계되어 있

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프로그램 및 성과주의 예산제도(Program and Performance Budgeting, 이하 PPB)로 지칭함

- PPB가 올바르게 도입되면 단순한 규칙·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예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에 대한 책무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음
- PPB는 각 사업부처의 예산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의회 및 감사담당자에게는 감독을 위한 수단을 제공함
- 또한 시민들의 예산 정보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주고, 정부에게는 정책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

■ 더욱 발전된 PPB를 위해 데이터 조작 위험이나 성과 측정의 어려움이 있는 성과기반 예산제도에서 성과정보기반 예산제도로의 전환, 예산구조 및 성과지표 간소화, 인적자원 및 데이터 인프라에 대한 충분한 투자, 각 부처의 적극적인 개입 및 주인의식, 전략적 계획과의 연계 강화 등을 권고함

■ PEMPAL 회원국들 과반수가 정부조직법(organic law)에 관련 조항이 있어 PPB가 법률에 기반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형식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지만 성과정보기반 예산제도로 나아가고 있음

- 또한 성과지표의 수를 줄이고 질을 향상시켰으며, 현재 조지아,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등 회원국 대다수가 PPB 관련 개혁을 진행하거나 계획하고 있음
- 다만, OECD 국가들의 PPB에 비해 재무부 중

심이어서 각 사업 부처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며, 리더십이나 성과중심의 문화 부재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PEMPAL 예산분과 PPB 워킹그룹은 OECD 예산 및 공공지출 부문(OECD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 Division) 및 세계은행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지출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PPB 운영 방안과 지출검토의 설계 및 도입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음

Presentation 4

• Natia Gulua (Georgia)

- 조지아 재무부의 Natia Gulua는 예산과장은 자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사례를 소개함
- 성과주의 예산제도 시행 이전 조지아가 경험했던 주요 예산 정책 관련 어려움은 △ 예산 조정 절차의 부족, △ 결과 지향이 아닌 활동·절차 중심적인 제도, △ 전략기획과 예산 간 연결고리 부족, △ 지출보고의 수준 미흡 등이었음
 - 이에 조지아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투명성과 중기재정계획 역량을 제고하고, 전략기획 및 예산 조정 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도모하였음
- 조지아는 2010년부터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시행함. 이후로 PEFA(Public Expenditure and Financial Accountability), FTE(Fiscal Transparency Evaluation), OBS(Open Budget Survey) 등 예산과 관련된 여러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및 지표에 기반하여 공공재정 개혁을 진행 중임

- 2021년에는 Open Budget Index의 투명성 분야에서 전세계 120개국 중 1위 달성
- 조지아는 공공재정관리 조정위원회를 통해 전략 및 실행계획을 준비함
 - 재무부, 의회 소속 재정예산위원회 및 예산국, 국가감사국, 국가조달청, 국제기구 및 수원국, 시민사회단체 등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함
- 조지아의 정부 프로그램은 4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실행가능 전략 및 활동계획을 설정함. 2011년 정책기획 개혁 후 모든 전략은 각 부처에 의해 조정되며 재무부가 내용을 검토함. 이때 예산 프레임워크와 활동계획 간 연결이 확인되어야 함. 이를 통해 정책과 예산을 더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으며, 예산 투입과 관련된 성과지표 모니터링 및 평가가 용이해짐
 - 조지아는 4년마다 이루어지는 총선 직후, 기본 데이터 및 방향(Basic Data and Direction, BDD)을 수립하는 문서를 작성하여 국가의 주요 재정 프레임워크를 계획함
 - 이전 연도의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주요 부처들에 방향을 부여하고 정부 프로그램을 설정함. 이후 각각 지출 단위에 4년 동안의 상한액을 지정한 후, 프로그램마다 예산을 설정함
 - 프로그램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중심이며, 각 프로그램의 설계는 부처들의 역량에 따라 결정됨. 주요 부처들은 조지아의 예산 수칙에 맞춰 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은 해당 중기활동 계획을 따라야 함

- 정책과 예산을 연결하는 데 있어 재정정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외의 정보들을 기반으로 하는 지표들도 중요함. 이러한 비재무 정보들은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젠더, 기후, 사회복지 등의 영역과 연결됨
- 예산 절차는 초안 작성, 제출, 논의, 허가, 수정, 실행, 조정 등의 절차를 따르며 IFMIS 모듈을 통해 이루어짐
- 또한 전략 기획과 예산 간의 연결고리 확보를 위해 △ 중앙정부의 예산코드 배정, △ 예산문서의 투명성 확보, △ 공공투자관리 개혁, △ 체계적인 정책 분류 등이 중요함

Session 2. Pragmatic Program Budgeting: Overcoming Design Obstacles to Planning, Management, and Control

Presentation 1

● Muhammad Fajar Adipati & Renosa
Tosca Zamaro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보건 분야 정책 기획 및 예산 편성을 주제로, 유아 발육부진 문제 해결 및 지속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함
- 인도네시아의 2024년도 보건 분야 예산은 187.5조 루피아로, 전체 국가 예산의 5.6%를 차지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유아 발육부진 비율을

2013년 37.2%에서 2024년 14%까지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함

-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서비스 전달이 제한되고, 국민들의 구매력이 감소되어 예산이 계획대로 배분되지 못했음
 - 팬데믹 이후 정부는 △ 커뮤니티 케어 및 보건 서비스 정상 운영, △ 보건 지원 정책 고도화(생후 1,000일 이전 유아 거주 가정 집중 지원), △ 정책 통합화 및 고도화를 위한 대통령령 계획 등을 실행함

■ 인도네시아 정부는 통합적 영양 공급을 통한 발육부진 비율 감소를 위해 △ 비전 수립, △ 전국적 캠페인 실행, △ 중앙, 지역, 동 단위 프로그램 통합, △ 식량안보 확보, △ 모니터링과 평가 등을 실시

- 또한 유아 발육부진 정책의 기획 및 예산에 있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주제적(thematic), 전체론적(holistic), 통합적(integrative), 공간적(spatial)으로 접근함
 - 주제적 접근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은 발육부진 감소를 위한 통합적 영양 공급에 집중하고, 영양 이외에도 전체론적 및 통합적 접근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효과적이고 구체적인 개입 필요성을 강조함. 또한, 공간적 접근으로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보이는 구역들을 우선순위 지역으로 지정하였음
 - 발육부진 비율은 2019년 27.7%에서 2022년 21.6%까지 연평균 2%씩 감소하였으나, 본래 목표인 2024년 14%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감소율을 3.8%로 증가시켜야 함. 이를 위

해 재무부는 프로그램 예산 할당 및 조정, 증거 기반 평가, 모니터링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임

■ 한편, 예산 지출에 대한 추적은 부처 성과 평가의 기초가 되며, 인도네시아의 예산 태깅(budget tagging) 및 추적은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과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됨

- 재무부는 2021년 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수를 축소하였으며, 산출물에 대한 기준은 더욱 구체적이고 모니터링에 용이하도록 설정함
- 해당 프로그램들의 성공적인 예산 태깅을 위해서는 규제, 조정 시스템, IT 시스템, 모니터링, 평가·보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인도네시아의 국민건강보험(이하 JKN) 관련, 2023년 기준 2억 8천만명 인구 중 95.7%가 JKN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질적 참여자는 약 2억 1천만명 정도로 파악됨

- 지속 가능한 JKN 제도를 위해서는 실질적 참여자를 늘려야 하고, 보건 서비스 관련 부정 청구를 감소시켜야 함
- 실질적 참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실직자, 자영업자, 비공식 근로자 등을 가입 대상층으로 지정해야 하며, 의료시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정 청구를 감지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계획임

DAY 2

3월 26일(화)

Session 2.

Pragmatic Program Budgeting: Overcoming Design Obstacles to Planning, Management, and Control

Presentation 2

• Pimpan Wuthipongprasert & Thitipong Srimongkol (Thailand)

■ 태국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에서 현재의 전략적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strategic performance based budgeting)로 발전하였음

- 품목별 예산제도는 1959년에 도입되었으며 예산 투입과 지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성과를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였음
- 현재의 전략적 성과 중심의 예산제도는 결과 중심적인 제도로, 정부 전략과 일관되고 시민들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 태국의 프로그램 예산 구조는 △ 국가 전략, △ 마스터 플랜, △ 예산 분배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그램은 △ 근본 프로그램(fundamental program), △ 전략적 프로그램(strategic program), △ 통합 프로그램(integrated program), △ 공공부문 인력에 관한 프로그램(program on public sector personnel)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예산 분배를 하는 데 있어 정부는 △ 아동지

원수당과 같은 사회복지 등에 대해서는 자격(entitlements), △ 공공부채에 대해서는 의무지출(obligations),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사업이나 유지보수는 기존 지출(baseline), △ 새로운 투자 프로젝트나 정책 등에 대해서는 재정여력(fiscal space)을 고려함

-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세금 납부액을 추적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 정책에 따른 지출 우선순위를 통해 세금 징수 및 정부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임
- 또한, 통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분산된 프로그램의 문제를 극복할 계획임

■ 태국의 사회복지제도(social protection program)에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 사회복지(social assistance), 적립 기금(provident fund) 및 사회적 서비스(social service)가 포함되어 있으며, △ 현금 지급, △ 조건부 현금 지급, △ 보조금, △ 의료혜택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전체 예산의 23%를 차지하며, 전 국민의료보장제도, 노인수당, 공무원의료제도가 전체 사회복지제도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함
- 현금 지급에는 아동지원수당, 노인 수당, 장애인 수당 등이 있으며, 조건부 현금 지급에는 국가복지카드나 공평교육기금이 있음
- 보조금에는 15년 무상 교육과 급식 및 우유 비용 보조가 있고, 의료혜택으로는 사회보장제도, 전국민의료보장제도, 공무원의료제도 등이 있음

■ 한편,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와 노인수당 등의 증가로 재정여력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여러 부처사업 간 분산된 예산으로 인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목표로 하거나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또한, 마스터 플랜과 프로그램 산출물 간의 연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Presentation 3

· 박노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한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에 프로그램 예산제도, 중기재정계획(이하 MTEF), 하향식 예산제도(top-down budgeting), 재정정보시스템(FMIS), 성과관리제도 및 발생주의회계 시스템이 공공재정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일괄 도입됨

- 이론적으로는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MTEF와 성과관리제도보다 먼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한국의 경우 동시다발적으로 개혁이 추진되었음
- 해당 재정 개혁은 행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법부의 개입이 거의 없었음

■ 2004년 5월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Budget & Accounting Reinvention Office, 이하 BARO)은 △ 국제 기준에 맞는 공공재정범위 재설정, △ 프로그램 예산제도 개발, △ 복식부회계 및 발생주의회계 도입, △ IFMIS 구축 등을 위해 기획예산처 산하로 발족되었음

- BARO는 당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감사원에서 파견된 공무원, 회계전문가 및 IT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33명으로 구성되었음

- 개혁 초기에는 각 사업 부처와의 조율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예산제도 개혁이 받아들여졌음
 - 기존의 조직 구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개발하였으며, 간접비의 경우 각 프로그램에 배부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행정 지원 경비 프로그램을 만들었음
 - 개혁의 성공 요인으로는 △ 고위 의사결정자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 기획단의 문제해결 역량, △ 관계자들과의 전략적 소통, △ 현실 여건에 맞춘 계획 조정 등이 있음
- 한편, 성과관리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동시에 개발된 탓에 제도 간의 불일치 문제가 생겼으나, 2010년 국가재정법 개정에서 성과관리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구조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더 나아가 2021년에는 성과관리제도가 시민 중심의 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정됨
- 또한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를 위해 같은 목표의 프로그램들은 하나로 통합하고, 하위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분리하는 방안이 2021년 가이드라인에 포함됨

Presentation 4

• Mary Joy O. De Leon (The Philippines)

- 필리핀 예산관리부(이하 DBM)는 가용자산을 극대화하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개혁 진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였음
-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정부기관의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가 상호보완되지 않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배분을 위해 전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되었으며, 서비스 중복 제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각 기관들이 고유 역할 범위 내에서만 프로젝트를 제안하도록 요구됨

- 또한, 민간부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프로그램 기획 및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방안이 부재하였음

■ DBM은 각 기관들의 공통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협력 증진을 위해 다부처 프로그램 예산제도 (Program Convergence Budgeting, 이하 PCB)를 2013년에 도입함

- PCB는 필요와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동일한 목표를 갖고 있는 여러 기관들의 주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국가 자원을 집중하는 접근법임
- 전체적인 관점에서 정책 분석을 가능케 하고, 정책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국가가 미리 계획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도움을 줌
- PCB에는 현재 총 11개 프로그램 - △ 위험 회복 프로그램(Risk Resiliency Program), △ 수자원 프로그램(Water Resources Program), △ 국가 인구 및 가족계획 프로그램(National Program on Population and Family Planning), △ 기아종식 프로그램(Zero Hunger Program), △ 불법 약물 방지 전략(Philippine Anti-Illegal Drugs Strategy), △ 사법부문 다부처 프로그램(Justice Sector Convergence Program), △ 수출개발 프로그램(Export De-

velopment Program), △ 관광개발 프로그램 (Tourism Development Program), △ 농업개발 프로그램(Agricultural Development Program), △ 파식강 페리 다부처 프로그램(Pasig River Ferry Convergence Program), △ 지속가능한발전목표 다부처 프로그램(PCB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이 포함되어 있으며, 2025년에는 공공재정관리 시스템과 고용 및 생계 프로그램이 추가될 예정임

- 위험 회복 프로그램의 경우 기후변화 적응, 재난 위험 감소 등을 목표로 하며, 주요 투자 분야로는 통합수자원관리, 해안 보존 강화, 기후정보서비스 등이 있음

- 2024년에는 해당 프로그램 관련하여 13개의 정부기관이 제출한 182개 예산 제안서를 검토하였고, 총 4억 2,450만페소 가량의 예산을 승인받았음

- 마스터 플랜이나 로드맵을 바탕으로 주요기관이 참여기관들과 함께 목표, 수혜자, 도입 타임라인, 자원 등이 전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지 확인하고, 참여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기회를 찾아 업무의 중복을 지양하는 과정도 진행함

Presentation 5

• Nguyen Duy Trung (Vietnam)

■ 베트남은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프로그램 기반 예산제도도 일부 활용하고 있음

- 프로그램 예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프레임워

크는 △ 법률, △ 개발계획, △ 개별 기관의 고유 활동에 대한 예산 권한 등으로 구성

- 베트남의 예산절차는 ① 재정정책 입안, ② 예산 계획, ③ 예산 허가, ④ 예산 시행, ⑤ 회계 및 보고, ⑥ 감사 및 감독의 6단계를 거치며, 재무부 예산국은 예산 계획과 예산 허가 단계를 담당함

■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점으로는 예산 기관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임

- 이를 통해 종합적·장기적 계획 과정을 지원할 수 있고,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과정은 국가예산 지출의 성과를 좀 더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함

■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특징으로는 결과물-목표-활동의 연결고리를 중장기 계획에 맞춰 설정하고, 예산을 알맞게 배정하는 것임

-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에 주요 부처 혹은 기관 뿐만 아닌 여러 기관 및 조직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주요 기관 간의 협력이 강화됨

■ 한편, 프로그램 예산제도 실행에서의 주요 어려움으로는 △ 구체적 가이드라인의 부재, △ 프로그램의 포괄성으로 인한 정책 간 영역 중복, △ 프로그램 계획, 발의, 집행 역량의 부족 등이 지목됨

-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수립과 더불어 부처 및 기관 간 명확한 책임이 확립되어야 함

-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책 목표 수립이 필요하며, 기획 및 예산 절차 간의 연결고리 강화가 필요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 수립 역시 필요함

Wrap-up Session

Closing Remarks 1

• Quyen Hoang Vu (The World Bank)

- PEMNA 예산분과 간사인 Quyen Hoang Vu는 본 회의가 회원국 사례 및 EU, PEMPAL 등 국제 사례를 공유하고 유익한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평가함
 - 발표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국에서도 토론에 적극 참여해 주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발표자로 참여하지 않더라도 사회자나 토론자로 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길 기대함
- 올해 가을에는 PEMNA 3기를 시작할 수 있길 바라며, PEMNA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피드백이 필요함을 강조함
- 본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해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EU,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 PEMNA 사무국 및 모든 DBM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명함
 - 마지막으로 예산분과 의장의 임기가 1년 연장될 예정임을 알리고, Rofyanto Kurniawan 의장의 PEMNA 예산분과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표함

Closing Remarks 2

•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허경선 아태재정협력센터장(PEMNA 사무국장)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발전시키는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주제로 모여 프로그램 분류 방안 및 실용적인 프로그램 예산제도 등 다양한 정책과 현황을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이 무척 의미미하다고 평가함
 - PEMNA 회원국 공무원들과 국제 전문가들을 포함한 여러 발표자와 참석자 간의 활발한 논의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교류가 가능하였음
 - 본 회의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게 해준 발표자, 국제 전문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EU, 예산분과 간사 및 분과 의장, PEMNA 운영위원회 공동의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으며, 특히 본 회의를 주최한 DBM과 회의 준비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주요국의 조세동향



미국

[IRA에 따라 시행한 신고지원서비스 성과 발표]

■ 미국 국세청은 2024년 4월 15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시행한 신고지원서비스의 성과를 발표함^{1), 2)}

- 미국 정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 기금을 통해 국세청에 대규모 예산을 지원하여 시스템 현대화를 통한 납세서비스 개선, 납세자 지원 서비스 등을 강화하고 있음³⁾

■ 2024년 세금신고 시즌에 개선된 신고지원서비스에는 Direct File 등 무료신고프로그램, 챗봇 등 상담서비스, TAC을 통한 대면서비스, 세금신고기한 자동연장서비스 등이 있음

- (무료신고프로그램) 자원봉사자사이트(Volunteer Sites), 다이렉트 신고(Direct File), 무료신고(Free File) 등 무료신고프로그램을 통해 45만건 이상의 신고서가 국세청으로 접수됨
- (상담서비스) 유선상담, 챗봇 상담의 이용건수가 증가함

- 2023년 5천명의 신규 상담원을 추가 배치한 결과, 2024년 유선상담서비스 수준은 전체 상담 중 15%에 불과했던 2022년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한 88% 이상으로 개선됨

- 유선상담을 위한 대기시간은 2022년 28분, 2023년 4분, 2024년 3분으로 점차 줄어들음

- 2024년 콜백(callback) 옵션 이용건수는 2023년 180만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400만건으로 전체 유선상담 이용 납세자의 대기시간을 약 140만시간 절약함

- 2024년 챗봇 이용건수는 2023년 33만건에서 150% 가까이 증가한 83만 2천건임

- (대면지원서비스) 평일 저녁 및 토요일에 대면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납세자지원센터(TAC)는 2023년 47만 4천명에서 37% 증가한 64만 8천명에게 대면서비스를 제공함

- 전국 242개의 TAC는 평일 저녁시간대에 1만 1천시간 이상의 연장근무를 통해 납세자에게 추가 대면서비스를 제공하고 70개 이상의 TAC는 토요일에도 대면서비스를 제공함

- (신고기한 자동연장서비스) 1천 9백만명의 납세자가 신고기한 자동연장을 신청할 것으로 추정함

1) IRS, "IRS delivers strong 2024 tax filing season; expands services for millions of people on phones, in-person and online with expanded funding," 2024. 4. 15., <https://www.irs.gov/newsroom/irs-delivers-strong-2024-tax-filing-season-expands-services-for-millions-of-people-on-phones-in-person-and-online-with-expanded-funding>, 검색일자: 2024. 4. 19.

2) Bloomberg, "Treasury Hits Goal of 100,000 Taxpayers Using E-File Pilot (1)," 2024. 4. 1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BF965B8000000?#jcite>, 검색일자: 2024. 4. 19.

3) IRS, "IRS announces sweeping effort to restore fairness to tax system with Inflation Reduction Act funding; new compliance efforts focused on increasing scrutiny on high-income, partnerships, corporations and promoters abusing tax rules on the books," 2023. 9. 8., <https://www.irs.gov/newsroom/irs-announces-sweeping-effort-to-restore-fairness-to-tax-system-with-inflation-reduction-act-funding-new-compliance-efforts>, 검색일자: 2024. 4. 19.

- 단, 납부의무는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세자는 세금고지서의 전액 또는 최소금액 이상을 기한 내 납부해야 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캐나다

[2024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 캐나다 재무부는 2024년 4월 16일,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Budget 2024: Fairness for every generation)을 발표함⁴⁾

-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세) 신축 임대주택의 자본비용공제율 인상, 청정에너지투자세액공제 시행안, 중소기업 대상 탄소리베이트, 자본소득세율 인상, 소비세 개정 등을 제안함^{5, 6, 7)}
- 임대 목적으로 건축하는 신축건물의 자본비용공제(Capital Cost Allowance, CCA)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⁸⁾
- 청정전기투자세액공제, 청정수소투자세액

공제, 청정기술제조업투자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투자세액공제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 세부사항을 명시함

- 적격 중소기업⁹⁾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리베이트(Carbon Rebate)를 제안함
- 자본소득(capital gain)이 연간 25만캐나다 달러 이상인 개인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을 현행 50%에서 66%로 인상하고자 함
- 교육기관의 학생기숙사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 소비세(GST) 경감을 제안함
- 담배의 소비세율 인상과 재고 담배에 대한 세금(the cigarette inventory tax) 부과를 제안함

- (AI산업 등 연구개발 지원) 투자비용즉시상각, SR&ED(Scientific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세제혜택 개선안¹⁰⁾을 제안함¹¹⁾
- 기업이 특히, 데이터 네트워크 인프라 장비, 컴퓨터 및 기타 데이터 처리 장비 등의 최첨단 기술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비용 즉시상각을 제안함
- (국제조세) 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제

4) Government of Canada, "Budget 2024: Fairness for every generation," 2024. 4. 16., <https://budget.canada.ca/2024/home-accueil-en.html>, 검색일자: 2024. 4. 19.

5) IBFD, "Canada's Budget 2024 Proposes Canada Carbon Rebate for Small Businesses, Other Green Tax Credit Measures," 2024. 4.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4-18_ca_2%23tns_2024-04-18_ca_2, 검색일자: 2024. 4. 19.

6) IBFD, "Canada's Budget 2024 Proposes Increase in Capital Gains Taxes, Modifications to AMT, Other Tax Measures," 2024. 4.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4-18_ca_3%23tns_2024-04-18_ca_3, 검색일자: 2024. 4. 19.

7) IBFD, "Canada's Budget 2024 Proposes Extending GST Relief to Student Residences, Repealing Sales Tax on Face Masks and Shields, Increasing Tobacco Excise Duty Rate," 2024. 4. 18.,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tns_2024-04-18_ca_4%23tns_2024-04-18_ca_4, 검색일자: 2024. 4. 19.

8) 예산안 발표일인 2024년 4월 16일 이후부터 2031년 1월 1일 이전까지 착공하고 2036년 1월 1일 이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인상된 감가상각비율을 적용함

9) 세금신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고 캐나다 전역에 499명 이하의 직원을 두고 있어야 함

10) 세제혜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개선안에 대한 기업과 업계의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함

11) Government of Canada, "Chapter 4: Economic Growth for Every Generation," 2024. 4. 16., <https://budget.canada.ca/2024/report-rapport/chap4-en.html#a4>, 검색일자: 2024. 4. 19.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채택,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¹²⁾ 면제¹³⁾를 제안함

<자료수집 및 조사: 권정교 세무사>

향 조정될 예정임

- 또한 이러한 비용은 적격 지출에 대한 80% 한도 내에서 인정됨

- 동 조치는 2025년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의견수렴 절차는 2024년 5월 22일 종료될 예정임



영국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시각효과비용에 대한 추가 세액감면에 대한 의견수렴 개시]

■ 영국은 2024년 3월 27일, 시각효과비용(visual effects costs)에 대한 추가적인 세액감면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함^{14), 15)}

- 금번 의견수렴은 2024년도 봄 예산안의 발표에 따른 것임
- 영국에서 영화 및 고급 프로그램¹⁶⁾(film and high-end programmes)을 위해 시각효과비용을 지출하는 산업에 대해 5%의 추가 세액감면 혜택을 제공하게 됨
 - 이에 따라 시청각 지출(audio-visual expenditure)에 대한 공제율은 34%에서 39%로 상



아일랜드

[아웃바운드 지급에 대한 방어적 조치에 관한 지침 발표]

■ 아일랜드는 2024년 3월 26일, 아웃바운드 지급(outbound payments)에 대한 방어적 조치(defensive measures)에 관한 국세청 전자브리프 제 096/24호(eBrief No. 096/24)를 발표함^{17), 18), 19)}

- 이자, 사용료 및 배당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아웃바운드 지급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방어적 조치에 대한 지침임
- 동 조치는 아일랜드 거주자 기업 또는 아일랜드 비거주자 기업의 아일랜드 지점이 특정 지

12) 현행 규정에 따르면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함

13) 비거주자의 거주국가와 캐나다 간의 조세조약으로 캐나다에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 등

14) GOV.UK., "Consultation on additional tax relief for visual effects costs," 2024. 3. 27., <https://www.gov.uk/government/consultations/consultation-on-additional-tax-relief-for-visual-effects-costs>, 검색일자: 2024. 4. 22.

15) Bloomberg Tax, "UK Treasury Seeks Input on Increasing Film, TV Tax Credits," 2024. 3. 28.,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122B780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bv21iZl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ZyY2gvcmVzdWx0cy9lZDg0MTMwYzQ1Y2Q3ZmJkZGQxYzY5NmRhYWVhOGZlOCJdXQ--20a87c1a7916deca638467096a72ef446e3576e6&criteria_id=ed84130c45cd7fbddd1c896daaca8fe8&search32=eru-Nbv21ruL4d8Xl5gH0A%3D%3Dyn-pqrfo78f9v4UX-lF2XPY745qZjagXApbUXWQZDn6C9q71lS9UluV4FaEiUs4vkdVB7nkCFteqWeSgmhzOr8oqjvumZqsgoi4ryQll8U%3D, 검색일자: 2024. 4. 22.

16) 고급 프로그램(high-end programmes)이란 에피소드당 1백만파운드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TV 프로그램을 의미함. (자료: GOV.UK., "Claiming High-end Television Tax Relief for Corporation Tax," 2024. 1. 19., <https://www.gov.uk/guidance/claiming-high-end-television-tax-relief-for-corporation-tax>, 검색일자: 2024. 5. 7.)

역(specified territory)의 거주자인 특수관계 기업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하는 특수관계 기업의 고정사업장에 지급하는 아웃바운드 지급금에 대해 적용됨

지급에 대해 적용됨

<자료수집 및 조사: 이희경 회계사>

- 특정 지역(specified territory)이란 EU 조세 목적 비협조 관할국 목록에 대한 의사회 결론의 부속서 I(Annex I of the Council conclusions on the revised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에 등재된 지역(listed territory)²⁰⁾ 및 소득과 이익에 대하여 영(0) 퍼센트의 세율을 부과하는 영세 지역(zero-tax territory)을 의미함

- 지침에 따라 이자 및 사용료 지급에는 20% 세율로, 배당에는 25% 세율로 원천징수세를 적용함
- 이자 및 사용료 지급에 대해서는 2023년 10월 19일 이후 체결된 약정에 대해, 배당 지급에 대해서는 2024년 4월 1일 이후 이루어진



벨기에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 개정]

■ 벨기에 과세관청은 2024년 4월 9일, EU 지침(2020/285)을 국내법으로 입법하여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개정하는 내용의 시행령을 발표함²¹⁾

- 소규모 기업의 적용 기준을 상세히 하고 소규모 기업이 벨기에 외의 EU 회원국에 설립되는 등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 규정함
- 소규모 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연 매출 2만 5천유로²²⁾ 이하의 기준은 유지됨

17) Bloomberg Tax, "Ireland Tax Agency Issues Guidance on Defensive Measures for Outbound Payments," 2024. 4. 15.,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CFMHUUG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vZdWx0cy80MDQ3YTUwM2NiNzE1MjNmYjA2ODA1YjU5MGZkNTkzYjYdXQ~db430d518a8e0862af0715a2ed6dd5daa944e444&criteria_id=4047a503ce71523fb06805b590fd593c&search32=fQvpy_Dkg18YGmdaslyioA%3D%3DXUVCF-G8iQdV1PeHhWPD0pTrUwMh_fle2t1GEKqUG0HoBFxJLrhriRhL2ulaWS892AoflNkGIFMr3s7N2B5SWgeHMOOAEJQDvZmKe4UJMa74EVxelavsybRWRsRaveULL1udmY0RlpQfjhFsyZ9STIG6W-Dqqgad7xK_-FKQp0hYZZYUyF11P1YI8USNKPY_SeuIJtyTiy1EsB2kCuUCoJXSK86pM60UWPtaNtS9tM%3D, 검색일자: 2024. 4. 22.

18) 아일랜드 국세청, "Outbound payments defensive measures," 2024. 3.,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tdm/income-tax-capital-gains-tax-corporation-tax/part-33/33-05-01.pdf>, 검색일자: 2024. 4. 22.

19) 아일랜드 국세청, "Revenue eBrief No. 096/24 - Outbound payments defensive measures guidance," 2024. 3. 25., <https://www.revenue.ie/en/tax-professionals/ebrief/2024/no-0962024.aspx>, 검색일자: 2024. 4. 22.

20) 2024년 2월 20일, EU는 총 12개 관할권을 조세목적 비협조 관할권으로 지정하였음: 미국령 사모아, 피지, 파나마, 트리니다드 토바고, 앵귤라, 괌, 러시아,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맨티가 바부다, 팔라우, 사모아, 바나우투. (자료: European Council, "EU list of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2024. 2. 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u-list-of-non-cooperative-jurisdictions/>, 검색일자: 2024. 4. 30.)

21) Bloomberg Tax, "Belgium Gazettes Law Amending Special VAT Regime for Small Businesses," 2024. 4. 12.,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bloombergtaxnews/daily-tax-report/XI4IVU0000000?bc=W1siU2VhcmNoICYgQnJvd3NlIiwiaHR0cHM6Ly93d3cuYmxvb21iZXJnbGF3LmNvbS9wcm9kdWN0L3RheC9zZWYyZgvcMvZdWx0cy81Y2E2Y2E4MwJjZjkwZTUzOTUz-ZjM1NTFmM2U5NDUzOCJdXQ~baf44b5e8a12195f9d56e264670eb87c5b3bef74&criteria_id=5ca6ca81bcf90e53953f3551f3e94538&search32=0N1gDnla_rilAQHwV4YZMg%3D%3Dklz_pHsOtLAphFPeuBkawwp07f4y7mMPBRJRGDX2SdTpEYIDaHXdtFRyx9a_2MmWMyxdN5Tv1eapf_z5rJSo0aNtwmNw2jkD4JzmUt2AfV6pTTNmTw8yNpM20y1PVF5yy2wcvFIKKi_oCXRQWPflvBf14Toiq8D5JtV_0Sx2AGUa2BH1GmKWgkK73PLpgs-290cRmQOx1oK_eSWpYnjEzygqn_i-iRs_c4oyU%3D, 검색일자: 2024. 4. 22.

22)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3,680만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EU 역외에 설립된 소규모 기업의 연 매출이 10만유로²³⁾ 이하인 경우에도 제도가 적용됨
- 특정 납세자가 벨기에 외의 EU 회원국에 설립되어 이 제도를 이용하거나 벨기에에 설립되어 다른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면제됨
- 신규 운송 수단을 활용한 배송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 특별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수집 및 조사: 김재경 변호사>



스웨덴

[담배 및 니코틴에 대한 세금 조정안 제안]

- 스웨덴 재무부는 2024년 4월 15일, 담배와 궤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고, 무연 담배(Snus)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것을 제안함²⁴⁾
 - 담배, 시가, 시가릴로, 파이프용 담배 및 기타 담배에 대한 세금을 9% 인상함
 - 무연 담배에 대한 세금을 20% 인하함
 - 담뱃세법에 무연 담배와 씹는 담배의 정의를 포함함

23)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억 4,730만원임

24) IBFD, "overnment Proposes to Adjust Tax on Tobacco and Nicotine," 2024. 4.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16_se_1.html, 검색일자: 2024. 4. 22.

25) 녹색전환은 에너지·산업·모빌리티 등의 탈탄소화를 지칭하는 덴마크의 환경정책을 의미함

26) IBFD, "Government Increases Excise on Diesel for 2025," 2024. 4.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17_dk_1.html, 검색일자: 2024. 4. 22.

27)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568억원임

-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에 따라 전자 액상 및 기타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세율을 재계산함
- 정부는 담뱃세와 특정 니코틴 함유 제품에 대한 세금을 물가 상승률에 따라 조정하기 위해 매년 8월 1일에 적용되는 세액에 일정한 계수를 곱하며, 이 수치는 당해연도 6월의 일반 물가 수준과 전년도 6월의 물가수준을 비교하여 계산됨
- 개정안은 2024년 1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임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덴마크

[2025년 경유세 인상안 발표]

- 덴마크 정부는 2024년 4월 15일, 녹색전환(green transition)²⁵⁾을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치적 합의의 일환으로 경유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할 것을 발표함²⁶⁾
 - 경유세 인상으로 인해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약 13억덴마크크로네²⁷⁾의 추가 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농업, 지역난방, 해양 자연기금, 기후 적응 등 친환경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임

- (경유에 대한 소비세) 2025년 1월 1일부터 경유세가 리터당 50덴마크크로네²⁸⁾씩 인상될 예정임
 - 소비세 인상은 건설 기계뿐 아니라 도로 운송에 사용되는 경유에도 적용될 예정임
 - 경유세 인상을 통해 2025년 1억 5천만덴마크크로네²⁹⁾를 추가로 확보하고, 2030년에는 2억 5천만덴마크크로네³⁰⁾의 추가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CO² 배출량 0.3백만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경유 차량 등록세) 경유 차량에 대한 추가 등록세를 2025년 및 2026년에 한시적으로 인하할 예정임
 - 이를 통해 개인 경유 차량 소유자의 경유세 인상에 대한 세부담을 줄여 휘발유 차량 소유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2025~2028년 재정정책에 대한 합의에 초점을 맞춘 이번 협상안은 직접세의 공제 축소 및 소비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음
- (직접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의 많은 부분을 축소하고, 과세표준 구간 미조정 등 기타 직접세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2025년 물가 상승률에 따른 소득 상위 2개 구간은 조정하지 않기로 합의함
 - 2027년 1월 1일부터 자발적 연금보험의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함
 - 특정 가사 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액을 1억유로³¹⁾ 축소함
 -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해 근로세액 공제(ansiotulovähennys)를 근로소득공제(työtulovähennys)로 대체함
 - 2026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문화, 스포츠 및 아동복지를 증진하는 특정 적격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핀란드

[2025~2028년 재정정책 합의 및 세금 인상안 발표]

- 핀란드 정부는 2024년 4월 16일, 30억유로³¹⁾의 재정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세금 인상안에 합의함³²⁾

- (간접세) 표준부가가치세율 및 일부 소비세 인상안 등에 대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함
 - 표준부가가치세율과 보험료 세율을 현행 24%에서 25.5%로 1.5% 인상함
 - 사탕, 초콜릿 등 과자류에는 14%의 감면된 부

28)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9,880원임

29)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296억원임

30)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95억원임

31) 2024년 4월 26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4조 4,229억원임

32) IBFD, "Government Agrees on Financial Policy for 2025-2028 and Announces Tax Increases," 2024. 4. 16.,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16_fi_1.html, 검색일자: 2024. 4. 22.

33) 2024년 4월 22일 기준 원화 환산 시 약 1,471억원임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가가치세를 대신 표준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됨
- 담배와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인상함
-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인상함

<자료수집 및 조사: 이미현 세무사>

- 이전 정부에서 이루어지던 단기 임대 활동 관련 규제를 폐지함
- 35세 이하의 개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해당 부동산이 구매자의 영구 거주지로 사용될 경우 양도세 및 인지세를 면제함
-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함



포르투갈

[소득세를 인하 및 신규 세금 감면 제도 도입 제안]

- 포르투갈 정부는 2024년 4월, 개인과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규 계획을 발표함³⁴⁾
- 2024년 3월 10일 실시된 총선에 의해 구성된 새 정부의 의중을 천명한 계획으로 볼 수 있음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인하 및 기타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제안함
- 향후 3년간 법인세 세율을 현행 21%에서 15%까지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세율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0.5~3% 수준으로 인하함
- 최대 1개월분 급여 수준의 성과보너스까지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 산정 시 공제함
-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 감면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함



일본

[2024년 세금 개혁 법률 및 규정 공포]

- 2024년 3월 28일 의회에서 2024년 세금 개혁 패키지 법안이 통과된 후, 일본 정부는 2024년 세금 개혁법과 관련된 정부 규정 및 장관 규칙을 2024년 3월 30일 관보에 공포함³⁵⁾
- 「법인세법」상 주요 개정 사항은 인재촉진세제의 조정,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이노베이션 박스세제 창설, 교제비의 손금불산입제도 제외

34) IBFD, "Portugal - New Government Proposes Reduction in CIT, PIT Rates; Introduction of New Tax Reliefs," 2024. 4. 17.,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4-17_pt_1, 검색일자: 2024. 4. 22.

35) IBFD, "Japan Promulgates 2024 Tax Reform Laws and Regulations,"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24-04-02_jp_1.html, 2024.4.2. 검색일자: 2024. 4. 22.

36) 墨田区錦糸町の会計事務所, "超速報! 令和6年度(2024年度)税制改正大綱を徹底解説!", <https://ampersand-tax.jp/%E8%B6%85%E9%80%9F%E5%A0%B1%E4%BB%A4%E5%92%8C%E5%BC%96%E5%B9%B4%E5%BA%A62024%E5%B9%B4%E5%BA%A6%E7%A8%8E%E5%88%B6%E6%94%B9%E6%AD%A3%E5%A4%A7%E7%B6%B1%E3%82%92%E5%BE%B9%E5%BA%95%E8%A7%A3%E8%AA%AC/>, 2023.12.15. 검색일자: 2024.04.29

조치 확대 등이 있음³⁶⁾

- 인재촉진세제와 관련하여 교육훈련 증가비와 여성 육아 지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함
-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이노베이션박스 세제를 도입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무형자산에 대해 국내 투자를 장려함
 - 전략 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전기 자동차 등, 친환경 철강, 친환경 화학,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SAF), 반도체(마이컴·아날로그 반도체) 등 5개 분야 관련 법인에 대해 판매 수량에 따라 세액 공제를 실시함
 - 이노베이션박스세제는 무형 자산에 대한 국내 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내국법인 등이 특정 특허(특허권, AI관련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의 양도·대출을 실시한 경우, 그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정의 과세 소득의 30%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제도임
 - 교제비손금불산입 제도와 관련하여 손금불산입 되는 교제비 등에서 제외되는 5천엔 이하 음식비 범위에 대해, 금액 기준을 1인당 5천엔 이하에서 1만엔 이하로 높임
- 「소비세법」상 플랫폼 과세를 도입하여 해외 판매자가 아닌 중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와 일본 소비자 사이의 국가 간 디지털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책임을 지게함
- 국외 사업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비자용 전기통신 이용 의무 중, 특정 플랫폼 사업자를 매개하여 의무를 제공한 경우,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의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소비세 납부 의무를 해당 플랫폼 사업자에

게 부담하도록 함

-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하여 2023년에 발표된 추가 OECD 지침을 일본의 「글로벌 최저한세법」에 반영함
 - 관련 개정사항으로는 소득산입규칙(IIR)을 재검토하며 외국 자회사 등이 소재지 국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국내 최저한추가세액(QDMTT)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소재지 국가에서의 소득산입규칙(IIR)의 적용이 면제되는 세이프하버의 도입 및 정보신고제도의 제공사항의 재검토 등이 해당됨

<자료수집 및 조사 : 권순오 세무사>



홍콩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세금 감면 제안]

- 홍콩 내 연구개발 활동 및 특허거래 장려를 위해 지적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거래 이익세율 5% 제안
 - 홍콩 정부는 현지 특허 시스템을 통한 더 많은 특허 출원을 장려하고 최초 부여 특허 시스템(OGP, Original grant patent)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2025년 예산 내 특허박스(Patent Box) 혜택인 지적재산권 거래 이익세율 감면 도입을 포함하여 입법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24년 4월 10일 입법 상정 예정임
 - 홍콩 내 일반적인 이윤에 부과되는 세율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16.5%에 비해 지적재산권(IP) 거래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은 비교적 낮은 5%로 설정될 예정

- 해당 특허박스(Patent Box) 혜택을 위해서는 홍콩 내 법적 보호를 위한 홍콩 내 특허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최초 부여 특허 시스템(OGP) 또는 단기 특허(STP, Short term patent)에 대한 신청 또는 허가가 있어야 함
 - 단기 특허의 경우 승인 후 추가 실질심사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자료수집 및 조사: 정효림 세무사>



뉴질랜드

[2024년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펀드

공시 면제 규정 발표

- 뉴질랜드 국세청은 2024년 4월 2일, 외국 기업 및 외국인 투자 펀드(Foreign Investment Fund, 이하 FIF) 공시 면제 관련 규정을 개정한 SL 2024/17을 발표함³⁷⁾
 - 소득 연도 중 언제라도 외국 기업에 대한 지배권 또는 이자 소득이나, FIF 귀속 이자를 보유한 사람은 해당 지분을 공시해야 함
 - 이때 국제조세규칙 관리상 공개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외국 회사에 대한 소득 지분 수준과 그 소득 지분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집단에 본 요건을 면제할 수 있음

- 2024년 FIF 공시 면제 내용은 2023년과 거의 유사하나, 비거주자 또는 전환 거주자와 관련 일부 공시 의무 요건이 삭제됨

- 거주자가 회사에 대해 10% 미만의 이자 소득을 보유하며, 그 금액이 5만뉴질랜드달러 이하거나 FIF 귀속 이자가 아닌 경우 공시 의무가 없음
- 25인 이상의 주주를 등록한 거주 법인이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시 의무가 면제됨
 - 그 외국 법인이 조약국 내에 법인화되어 있거나 조세 목적상 거주자로 편입되어 있으며, 직접소득 이자가 10% 미만인 FIF 귀속 이자에 대해 공정배당률 또는 비교가치 계산법을 사용함
- 25인 이상의 주주가 등록된 거주 법인일 경우 아래의 요건이 충족될 때 공시가 면제되나, FIF 귀속 이자가 보유 또는 상장된 관할권에 따라 분할된 모든 투자에 대해 연말 뉴질랜드 달러 시장 가치를 공개해야 함
 - 국외 포트폴리오 투자 기업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는 직접소득 이자가 10% 미만인 FIF 귀속 이자에 대해 공정배당률 또는 비교가치 계산법을 사용함
- 또한 2024년 공시 면제에서는 비거주자 또는 전환 거주자가 외국 기업 및 FIF에 보유한 지분을 공시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됨³⁸⁾

<자료수집 및 조사: 박하얀 연구원>

37) Inland Revenue, "Vol,36 No.3: TIB - April 2024,"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tib/volume-36---2024/tib-vol36-no3>, 검색일자: 2024. 4. 22.

38) IBFD, "New Zealand - Inland Revenue Announces International Tax Disclosure Exemptions for 2024," 2024. 4. 12., https://research.ibfd.org/#/doc?url=/document/tns_2024-04-12_nz_1, 검색일자: 2024. 4. 22.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의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재정준칙 개정안 승인(2024. 4. 23.)¹⁾

- (배경) 2023년 4월 EU 집행위원회는 재정준칙 개혁안을 제출하였고, 2024년 2월 EU 이사회 및 의회에서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도출했으며,²⁾ 후속 절차를 진행 중
 -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부터 안정성장협약의 EU 재정준칙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였고, 이후 재정준칙 재적용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재정준칙 개정을 추진
 - 높은 채무 수준과 금리 상황, 기존 체계의 한

- 계,³⁾ 공공 투자의 보호 필요성 등으로 개정
- (주요 내용) 각 회원국에 적합한 재정·개혁·투자 목표를 하나의 4년 중기 재정계획^{4), 5)}으로 통합하고, 적자 혹은 부채⁶⁾ 기준을 초과하는 국가는 안전장치 적용을 받음
 - 재정적자가 GDP 대비 3%를 초과하거나, 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하는 회원국에 대해 EU 집행위는 지출경로 지침으로 참조 궤적⁷⁾을 보내고 준수하도록 함
 - (부채 지속가능성 안전장치)⁸⁾ GDP 대비 부채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국가는 연평균 GDP 대비 1%, 60~90%인 국가는 GDP 대비 0.5%를 감축해야 함⁹⁾
 - (적자 회복탄력성 안전장치)¹⁰⁾ 이전 GDP 대비 0.5% 구조적 적자 중기재정목표¹¹⁾를 대체하여 GDP 대비 1.5%의 구조적 적자 목표

1) EU 의회, "New EU fiscal rules approved by MEPs," 2024. 4. 23.,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40419IPR20583/new-eu-fiscal-rules-approved-by-meps>, 검색일자: 2024. 4. 25.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3년 3월호, 2023. 4. 3, pp. 5-6,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899>, 검색일자: 2024. 2. 22.
 _____, 「KIPF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 2024. 1. 2, pp. 6~7,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75>, 검색일자: 2024. 2. 22.
 _____, 「KIPF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2024. 3. 6, pp. 2~3,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 4. 29.

3) 국가별 다른 경제 및 재정 상황 등 특수성 고려 미흡, 우선순위 분야 개혁 및 투자 감소, 재정준칙 준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의 예외적인 상황에 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 시정조치 불이행 시 강제기제 강화 필요 등

4) 재정조정 기간은 4년이나 회원국이 회복력과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재정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며,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에너지 안보, 국방 강화와 같은 EU의 공통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개혁 및 투자를 수행하는 경우 최대 7년으로 조정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음

5) National medium-term fiscal-structural plans

6) 마스트리히트 기준 일반정부 부채(D2), 중앙·지방정부와 비영리공공기관까지 포함하여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7) 참조 궤적(Reference trajectory)은 재정 조정 기간 후 회원국의 정부채무가 하향 경로에 있거나, 중기적으로 GDP 대비 60% 미만의 안정적인 수준에 유지되도록 보장하고,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함

8) Debt sustainability safeguard

9) 초과 부채 상태인 국가는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부채 비율을 60% 미만으로 줄여야 하는 의무가 없으며 합의된 기간까지 안정적 하향 궤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채 수준을 유지해야 함

10) Deficit resilience safeguard

11) 재정적자가 GDP 대비 3% 초과 또는 미만인지에 관계 없이 예산이 균형을 이루거나 흑자를 달성할 때까지 연간 최소 GDP 대비 0.5%까지 구조적 적자를 감소시키는 의무가 있었으며, GDP 대비 3% 적자를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초과 적자를 다음해에 다시 한도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규정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를 통해 재정여력을 구축하도록 함
- (GDP 대비 3% 초과 적자 회원국) 초과적자시정절차(EDP)¹²⁾ 시행 대상이 되며, 매년 GDP 대비 0.5%의 재정적자를 개선해야 함
- (재정적자 GDP 대비 3% 미만인 회원국) GDP 대비 1.5% 적자를 달성하기까지 연간 재정적자 감축 의무 부여(재정조정 기간이 4년인 국가는 연간 GDP 대비 0.4% 적자 감축, 7년인 국가는 GDP 대비 0.25% 적자 감축 의무)
- (투자 보호 규정 강화) 필수 투자가 진행 중인 경우 초과적자 시정절차 시행 여부 결정에 이를 고려, EU 자금 프로그램을 위해 조달되는 국가 지출은 정부 지출 산정에서 제외하여 투자 인센티브를 늘림
- (기간 연장 조건 완화) 4년의 재정조정 기간에서 개혁 및 투자 약속을 하는 경우 3년을 연장해 주는 조건에서 이사회가 적절한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추가 기간을 부여
- (대화 및 소유권 향상) 과도한 적자 혹은 부채가 있는 국가는 EU 집행위의 지출경로 지침을 받기 전에 집행위에 대화를 요청할 수 있음
 - 정권 교체와 같이 회원국에서 계획 이행이 어렵게 하는 객관적 상황이 있는 경우 국가 계획 수정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향후 단계) EU 이사회 의 공식적 승인이 이뤄지면 EU 공식 저널에 게재된 날부터 발효되며, 회원국들은 2024년 9월 20일까지 첫 번째 국가 계획을 제출해야 함

<표 1> EU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정 주요 일지

일자	내용	
2020년 2월	EU 집행위	경제 거버넌스 체계의 효과를 검토하고 미래에 대한 공개 토론을 시작
2023년 3월 14일	EU 이사회 ¹³⁾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방향 합의 ¹⁴⁾
2023년 4월 26일	EU 집행위	공개 토론 및 협의를 반영하여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 입법안' 발표
2023년 12월 21일	EU 이사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에 관한 합의 ¹⁵⁾
2024년 2월 10일	EU 이사회 및 의회	경제 거버넌스 체계 개혁안에 대한 정치적 합의 ¹⁶⁾
2024년 4월 23일	EU 의회	재정준칙 개정 수정안 발표
향후	이사회 상임 대표 위원회 승인 → EU 이사회 및 의회 공식 투표	

출처: EU 이사회, "Timeline - Economic governance framework,"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economic-governance-framework/timeline-economic-governance-framework/>, 검색일자: 2024. 2. 13.

EU 집행위, "Economic governance review,"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conomic-and-fiscal-governance/economic-governance-review_en, 검색일자: 2024. 2. 22.

12) Excessive deficit procedure

13) EU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는 비공식적으로 EU Council로 알려졌으며, 각 EU 회원국의 장관들로 구성된 협의체로 법률 채택 및 정책 조정 역할을 수행. 혼동되는 개념으로 The European Council은 각 EU 회원국의 수장(대통령 혹은 총리)들과 EU 집행위원장으로 구성되고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개최하며, EU의 주요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결정함

1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3년 3월호, 2023. 4. 3, pp. 5~6,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5899>, 검색일자: 2024. 2. 22.

1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3년 12월호, 2024. 1. 2, pp. 6~7,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75>, 검색일자: 2024. 2. 22.

1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IPF 재정동향」, 2024년 2월호, 2024. 3. 6, pp. 2~3,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4>, 검색일자: 2024. 4. 29.

■ EU 통계청, 2023년 4분기 재정통계 발표(2024. 4. 22.)¹⁷⁾

- (재정수지) 2023년 4분기 EU 계절조정 일반 정부 재정수지는 GDP 대비 -4%, 유로지역¹⁸⁾ -4.1%로 3분기에 비해 두 지역 모두 재정적자가 각각 0.5%p 증가(<표 2> 참고)

- (EU) 2023년 4분기 EU의 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46.2%로 전분기와 동일하고, 정부 총지출은 GDP 대비 50.2%로 전분기 49.7%에 비해 0.5%p 증가

- (유로지역) 2023년 4분기 GDP 대비 정부 총수입은 46.6%, 정부 총지출은 50.7%

- (정부 부채) 2023년 4분기 말 EU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81.7%로 전분기 82.4% 대비 0.7%p 하락하였고, 유로지역 GDP 대비 부채는 88.6%로 전분기 대비 1.1%p 감소

- 전년 동기와 비교 시 GDP 대비 부채 비율은 EU, 유로지역 모두 감소(EU 83.4→81.7%, 유로지역 90.8→88.6%)

- 유로지역의 2023년 4분기 부채 비율 변화(분기 GDP의 0.4%)는 적자 재원조달(GDP 대비 3.4%)로 인한 플러스 요인과 금융자산 순처분(GDP 대비 -1.9%)과 마스트리히

트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순처분(GDP 대비 -1.3%)의 마이너스 영향 등으로 상쇄됨

- 2024년 4분기 말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그리스(161.9%), 이탈리아(137.3%), 프랑스(110.6%), 스페인(107.7%), 벨기에(105.2%) 순으로 높았음([그림 1] 참고)

-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19.6%), 불가리아(23.1%), 룩셈부르크(25.7%), 덴마크(29.3%) 순으로 낮게 나타남

<표 2> 2023년 4분기 유로지역 20개국 및 EU 27개국 재정통계(계절조정)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Q4	2023Q3	2023Q4
유로지역 20개국			
재정수지	-5.3	-3.6	-4.1
정부수입	46.7	46.7	46.6
정부지출	52.0	50.2	50.7
정부채무	90.8	89.6	88.6
EU 27개국			
재정수지	-5.0	-3.5	-4.0
정부수입	46.1	46.2	46.2
정부지출	51.1	49.7	50.2
정부채무	83.4	82.4	81.7

주: 유로지역 및 EU 수치는 국가별 수치의 가중 평균임

출처: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1% of GDP in the euro area and 4.0% in the EU,” 2024.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4-cp>, 검색일자: 2024. 4. 23.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88.6% of GDP in euro area,” 2024.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4-bp>, 검색일자: 2024. 4. 23.

17) EU 통계청, “Seasonally adjusted government deficit at 4.1% of GDP in the euro area and 4.0% in the EU,” 2024.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4-cp>, 검색일자: 2024. 4.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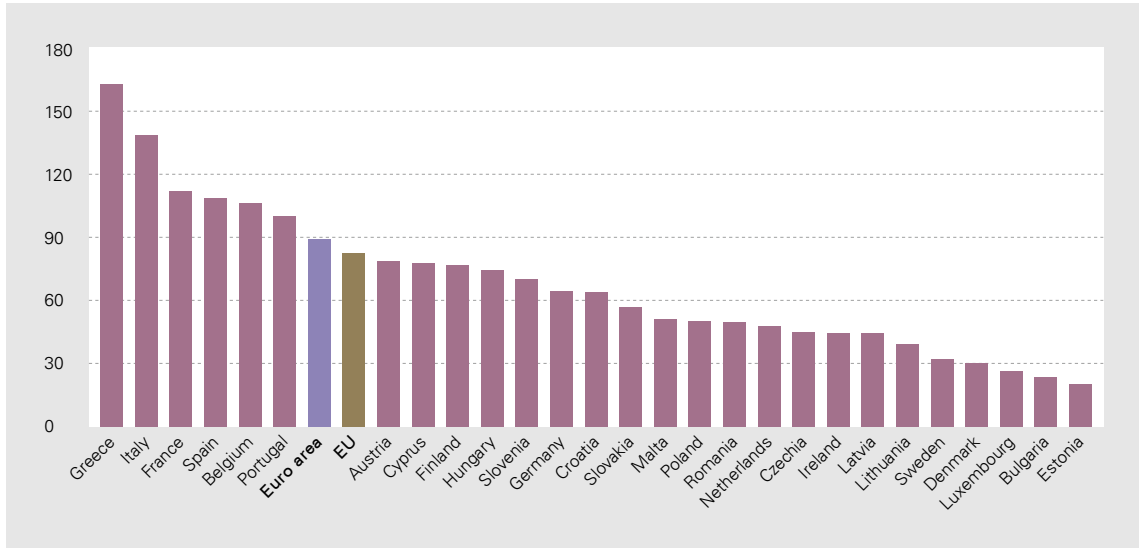
_____, “Government debt down to 88.6% of GDP in euro area,” 2024.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4-bp>, 검색일자: 2024. 4. 23.

_____,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 quarterly data,” 2024. 4. 22.,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Government_finance_statistics_-_quarterly_data#Quarterly_financial_accounts_for_general_government, 검색일자: 2024. 4. 23.

18) 경제통화연합(EMU)에 속하는 EU 모든 회원국 중 유로화를 자국 통화로 채택한 20개 회원국으로(2023년 기준), 해당 국가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포함됨. 비유로지역(Non-euro area) 국가들은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덴마크가 해당됨(EU 집행위, “What is the euro area?,” https://economy-finance.ec.europa.eu/euro/what-euro-area_en, 검색일자: 2024. 4. 29.)

[그림 1] 2023년 4분기 EU 회원국별 일반정부 부채 비율

(단위: GDP 대비 %)



출처: EU 통계청, "Government debt down to 88.6% of GDP in euro area," 2024. 4. 22., <https://ec.europa.eu/eurostat/en/web/products-euro-indicators/w/2-22042024-bp>, 검색일자: 2024. 4. 23.



IMF

■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2024. 4. 16.)¹⁹⁾

- (동향) 2022~2023년 기간 동안 글로벌 디스인플레이션²⁰⁾을 통해 회복력 있는(resilient) 경제 성장을 보임
 -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headline inflation)이 2022년 중반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하여 2023년 말에 팬데믹 이전 수준에 근접함
 - 고용과 소득은 예상보다 많은 정부 지출 및 가계 소비, 노동력 참여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히

준히 성장이 유지됨

- 중앙은행의 상당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력을 보인 것은 주요 선진국 가계가 팬데믹 기간 동안 축적한 저축에 기인
-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 완화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세금 인상과 정부 지출 감소 등 높은 채무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적 재정정책이 성장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
-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3년 및 2024년, 2025년에 동일하게 3.2%로 전망되며, 느리지만 꾸준한 경제 회복이 예상됨
 - 2024년 경제성장률은 2024년 1월 전망 대비

19) IMF, *World Economic Outlook—Steady but Slow: Resilience amid Divergence*, 2024. 4. 16.,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EO/Issues/2024/04/16/world-economic-outlook-april-2024?cid=em-COM-123-48220>

20)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은 물가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은 둔화되는 현상(출처: 한국은행 경제용어사전)

0.1%p, 2023년 10월 전망 대비 0.3%p 상향 조정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차입 비용과 재정 지원 철회 등의 요인으로 인해 경제 성장 속도는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느린 편

* 2000~20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8%

- 세계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023년 6.8%에서 2024년 5.9%, 2025년 4.5%로 하락할 전망이며, 선진국 경제가 신흥시장이나 개발도상국보다 빨리 물가상승률 목표에 도달할 것임

● (위험)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상하방 위험은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하방위험으로 ①지정학적 긴장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②물가상승 지속으로 인한 금융 부문의 불안(stress), ③중국의 저성장, ④지나친 재정 긴축, ⑤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개혁 추진력 약화, ⑥지정학적 분열 심화 등이 있음

- 상방위험으로 ①선거 기간 동안 단기적 재정 부양, ②조기 금리 인하, ③인공지능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④구조적 개혁 모델 등이 있음

● (정책권고) 세계 경제가 연착륙에 가까워짐에 따라 중앙은행의 단기 우선순위는 물가 안정이며, 국가별 맞춤형 정책 대응이 필요

- 통화정책을 조기에 완화하거나 지연시켜 목표에 미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채무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예산 조정(budgetary maneuver) 및 우선순위 투

자를 위한 여지를 둔 중기 재정건전화 이행에 초점을 두어야 함

- 공급 측면의 강화 개혁을 통해 물가 및 채무 안정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더 높은 소득 수준으로 수렴할 수 있음

- 지정학적 분열 및 기후 변화로 인한 비용과 위험을 제한하고, 녹색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며, 채무 재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다자간 협력이 필요

■ IMF, 『재정감시보고서(Fiscal Monitor)』 발표 (2024. 4. 17.)²¹⁾

● (동향) 세계 경제 및 금융 전망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높은 채무와 재정 적자 상황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재정정책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023년 세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5%로 전년 대비 1.6%p 증가했으며 공공채무는 GDP 대비 93.2%로 전년 대비 2%p 증가

- 금리상승으로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팬데믹과 에너지 가격 대응 조치로 사회보장 급여, 보조금, 이전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 적자와 공공채무가 팬데믹 이전에 전망했던 수준보다 높아짐

● (전망) 2024년에 '선거의 해'를 맞아 88개 국가가 선거를 실시했거나 실시할 예정으로 재정 지출이 증가되어 재정이 악화될 위험이 있으며,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채무가 계속 증

21) IMF, *Fiscal Monitor 2024 April: Fiscal policy in the Great Election Year*, 2024. 4. 17.,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4/04/17/fiscal-monitor-april-2024>, 검색일자: 2024. 4. 18.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가하여 세계 공공채무는 2029년까지 GDP의 9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2024년 세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소폭 (0.6%p) 개선된 GDP 대비 4.9%로 전망되

나, 재정정책 정상화를 재개하려면 여러 가지 재정적 위험에 맞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경험적으로 선거기간 동안 재정정책이 확

<표 3>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비중, %)

국가	실적치		전망치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재정수지							
세계경제	-5.5	-4.9	-4.7	-4.5	-4.4	-4.4	-4.3
선진국	-5.6	-4.4	-4.2	-3.9	-3.8	-3.8	-3.6
캐나다	-0.6	-1.1	-0.9	-0.7	-0.7	-0.6	-0.4
유로지역	-3.5	-2.9	-2.6	-2.5	-2.4	-2.3	-2.3
프랑스	-5.5	-4.9	-4.9	-4.4	-4.3	-4.1	-3.9
독일	-2.1	-1.5	-1.3	-0.9	-0.7	-0.5	-0.5
이탈리아	-7.2	-4.6	-3.2	-3.0	-2.9	-3.0	-3.0
스페인 ¹⁾	-3.6	-3.1	-3.0	-3.2	-3.3	-3.0	-3.0
일본	-5.8	-6.5	-3.2	-2.9	-3.1	-3.4	-3.8
영국	-6.0	-4.6	-3.7	-3.7	-3.6	-3.5	-3.4
미국 ²⁾	-8.8	-6.5	-7.1	-6.6	-6.2	-6.4	-6.0
기타선진국	-0.1	0.0	0.2	0.4	0.5	0.6	0.5
한국	-1.0	-0.6	0.1	0.2	0.2	0.2	0.2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5.4	-5.5	-5.3	-5.2	-5.1	-5.1	-5.0
국가채무							
세계경제 ³⁾	93.2	93.8	95.1	96.3	97.1	98.1	98.8
선진국	111.0	111.2	112.4	113.4	114.0	114.7	115.1
캐나다 ⁴⁾	107.1	104.7	102.1	100.2	98.6	97.1	95.4
유로지역	88.6	88.7	88.3	88.2	87.9	87.9	87.7
프랑스	110.6	111.6	112.8	113.4	114.1	114.6	115.2
독일	64.3	63.7	62.3	61.0	59.8	58.7	57.7
이탈리아	137.3	139.2	140.4	142.6	143.1	144.7	144.9
스페인	107.5	106.3	104.9	105.0	105.1	104.6	104.2
일본	252.4	254.6	252.6	251.3	251.0	251.0	251.7
영국	101.1	104.3	106.4	107.3	108.3	109.2	110.1
미국 ⁴⁾	122.1	123.3	126.6	128.9	130.7	132.6	133.9
한국	55.2	56.6	57.3	57.9	58.4	58.9	59.4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	68.0	69.4	71.3	73.3	75.0	76.7	78.1

주: 1) 금융지원 포함

2) 국가 간 비교를 위해 미국의 지출 및 재정수지는 미적립 연금 부채에 대한 귀속 이자 및 피고용자보수를 제외하도록 조정되며, 2008년 채택된 국민 계정 시스템(SNA)의 지출을 따르므로 미 상무부 경제분석국 데이터와 다를 수 있음

3) 부채 평균에는 EU에서 발생한 NGEU 패키지 보조금의 부채 불포함

4) 국가 간 비교를 위해 2008 국민 계정 시스템을 채택한 국가(호주, 캐나다, 홍콩 SAR, 미국)의 통계 기관에서 보고한 총 부채 수준에서 공무원의 미적립 연금 부채를 제외하도록 조정

1. 모든 국가의 평균은 미국달러로 환산된 명목 GDP 기준

출처: IMF, *Fiscal Monitor 2024 April*, 2024. 4. 17.

한국의 수치는 statistical appendix Table A1, A7에서 발췌

대되고, 재정적 차질(fiscal slippages)이 커지는 경향이 있음

- (위험) 물가상승률이 감소하고 있으나 물가 안정 시기(pace of the last mile)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자금조달 여건이 물가상승률 전망뿐만 아니라 주요국의 금리와 재정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함
 - 미국의 장기 국제수익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결정 및 물가 추이에 따른 변동성이 커 금리 과급효과를 통해 다른 국가 경제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중국의 성장 둔화와 금융 혼란이 글로벌 성장과 무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국과 무역 및 투자 연계성이 높은 국가에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새로운 공급 중단과 가격 충격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할 수 있으며, 대다수 국가에서 채무 재융자(refinancing) 위험이 높음
- (정책권고) 부채 지속가능성 및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
 - 중기 성장 전망이 둔화되고 실질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건전화 속도는 재정위험과 민간 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조정되어야 함
 - 지출 압력을 억제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기초 연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파급

효과가 큰 부문의 혁신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장기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음

-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은 조세 시스템 개선, 과세 기반 확대, 제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세수 증대로 녹색 및 디지털 기술 확산을 위한 투자를 지원할 수 있음
-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위해 더욱 강력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됨



OECD

■ OECD, 2023년 4분기 노동시장 통계 발표(2024. 4. 17.)²²⁾

- 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3년 4분기에 각각 70.1%, 73.8%로 대체로 안정적이었으며, 이는 각각 데이터를 집계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 OECD 38개 국가 중 한국을 포함한 10개국²³⁾에서 고용률 및 경제활동 참가율 두 지표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캐나다, 독일, 일본, 영국, 미국을 포함한 OECD 국가의 2/3에서 고용률이 70% 이상으로 집계됨
 - 2023년 고용자 수는 모든 성별 및 연령대에서 증가했으며, 여성의 고용률(63.2%, +1.0%p)이 남성의 고용률(76.9%, +0.3%p)보다 빠르게

22)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2024. 4. 17., <https://www.oecd.org/sdd/labour-stats/labour-market-situation-oecd-updated-april-2024.htm>, 검색일자: 2024. 4. 23.

23) 호주, 벨기에, 헝가리,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증가하면서 성별 격차가 좁혀짐

- 2023년 여성 및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각각 66.6%, 80.8%로 2008년 이후 최고 수준

- OECD 회원국의 2024년 2월 실업률은 4.9%

로 집계되었으며, 2022년 4월 이래 5% 이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유럽연합과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각각 6%, 6.5%로 2001년 이후 최저 수준임

<표 4>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19	2022			2023			
				Q4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67.7	69.3	70.0	68.9	69.4	69.6	69.9	70.0	70.1	70.1	
G7	71.1	72.5	73.0	72.3	72.5	72.6	72.9	73.0	73.0	73.1	
유럽연합	68.3	69.8	70.5	68.0	69.8	70.1	70.3	70.5	70.4	70.6	
유로지역	67.8	69.4	70.1	68.5	69.4	69.6	69.9	70.2	70.0	70.2	
호주	74.6	76.9	77.2	74.1	77.2	77.2	77.2	77.2	77.2	77.2	
캐나다	73.5	75.6	75.8	74.6	75.6	75.8	76.2	76.0	75.7	75.4	
프랑스	67.3	68.1	68.5	66.7	68.4	68.3	68.5	68.6	68.4	68.3	
독일	75.6	76.9	77.4	75.8	76.9	77.2	77.4	77.5	77.3	77.3	
이탈리아	58.3	60.2	61.5	59.0	60.1	60.7	61.0	61.4	61.5	62.1	
일본	77.9	78.5	78.9	78.1	78.6	78.6	78.6	78.9	79.0	79.3	
한국	66.5	68.5	69.2	67.0	68.7	68.7	68.8	69.2	69.4	69.5	
스페인	62.7	64.4	65.5	63.4	64.6	64.4	64.7	65.4	65.8	65.9	
영국	75.1	75.3	75.1	76.1	75.0	75.2	75.3	75.2	74.8	75.0	
미국	69.4	71.3	72.0	71.7	71.4	71.4	71.8	72.0	72.0	72.0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4rd Quarter 2023, Table 1 재구성, 2024. 4. 17.

<표 5> OECD 회원국의 경제활동 참가율(15~64세,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19	2022			2023			
				Q4	Q3	Q4	Q1	Q2	Q3	Q4	
OECD 전체	72.2	73.1	73.7	72.9	73.1	73.3	73.6	73.7	73.7	73.8	
G7	75.1	75.6	76.2	75.5	75.7	75.7	76.0	76.2	76.2	76.3	
유럽연합	73.6	74.5	75.0	73.0	74.5	74.7	74.9	75.0	75.0	75.2	
유로지역	73.6	74.5	75.1	74.1	74.5	74.6	74.9	75.1	75.1	75.2	
호주	78.7	80.0	80.2	78.3	80.1	80.1	80.1	80.1	80.2	80.4	
캐나다	79.5	79.8	80.2	79.1	79.7	79.9	80.3	80.3	80.2	80.0	
프랑스	73.0	73.6	73.9	72.7	73.7	73.6	73.7	74.1	73.9	74.0	
독일	78.5	79.4	79.8	78.2	79.5	79.6	79.8	79.9	79.8	79.9	
이탈리아	64.5	65.6	66.7	65.4	65.6	65.9	66.3	66.6	66.7	67.1	
일본	80.3	80.7	81.1	80.0	80.8	80.7	80.8	81.1	81.3	81.4	
한국	69.0	70.5	71.1	69.6	70.7	70.7	70.8	71.1	71.2	71.4	
스페인	73.7	74.0	74.6	73.8	74.1	74.0	74.2	74.4	74.8	74.7	
영국	78.7	78.3	78.3	79.2	78.0	78.3	78.5	78.6	78.1	78.1	
미국	73.4	74.0	74.7	74.4	74.1	74.1	74.5	74.6	74.8	74.8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4rd Quarter 2023, Table 2 재구성, 2024. 4. 17.

<표 6> OECD 회원국의 실업률(15세 이상, 계절조정)

(단위: %)

구분	2022	2023	2023				2023			
			Q1	Q2	Q3	Q4	9월	10월	11월	12월
OECD 전체	5.0	4.8	4.8	4.8	4.8	4.9	4.8	4.9	4.9	4.9
G7	4.1	4.1	4.0	4.0	4.1	4.1	4.1	4.2	4.1	4.1
유럽연합	6.2	6.0	6.0	6.0	6.0	6.1	6.1	6.1	6.1	6.0
유로지역	6.7	6.5	6.6	6.5	6.5	6.5	6.5	6.6	6.5	6.5
호주	3.7	3.7	3.6	3.6	3.7	3.9	3.6	3.8	3.9	3.9
캐나다	5.3	5.4	5.1	5.3	5.5	5.8	5.6	5.7	5.8	5.8
프랑스	7.3	7.3	7.1	7.4	7.4	7.5	7.4	7.5	7.5	7.6
독일	3.1	3.0	2.9	2.9	3.0	3.1	3.1	3.1	3.1	3.1
이탈리아	8.1	7.7	7.9	7.7	7.6	7.5	7.7	7.7	7.5	7.3
일본	2.6	2.6	2.6	2.6	2.6	2.5	2.6	2.5	2.5	2.5
한국	2.9	2.7	2.7	2.6	2.6	2.8	2.6	2.5	2.8	3.2
스페인	12.9	12.1	12.8	12.0	11.9	11.8	11.9	11.9	11.8	11.7
영국	3.8	4.0	4.0	4.2	4.1	3.8	4.0	3.9	3.8	3.9
미국	3.7	3.6	3.5	3.6	3.7	3.7	3.8	3.8	3.7	3.7

출처: OECD, Labour Market Situation, Statistics News Release: 4rd Quarter 2023, Table 3 재구성, 2024. 4. 17.



미국

[예산·결산 등]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4회계연도 상반기 (2023. 10. 1. ~ 2024. 3. 31.) 재정 결산 추정치 발표 (2024. 4. 8.)²⁴⁾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상반기의 재정적자는 1조 640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4%(370억달러) 감소
 - 2023년 상반기와 2024년 상반기의 시기상 지급이전²⁵⁾을 본래 귀속 시기로 조정할 결과, 2024회계연도 상반기 재정적자는 1조 1,360

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

- (세입) 세입은 전년 동기(2조 480억달러) 대비 7%(1,400억달러) 증가한 2조 1,880억달러
 - 재난지역에 대한 2023년도 귀속 세금 납부 연기 조치²⁶⁾가 2024년 세입의 증가에 일부 기여
- (세출) 세출은 전년 동기(3조 1,490억달러) 대비 3%(1,030억달러) 증가한 3조 2,520억달러
 - 지급 시점에 의한 지출이전이 없었다면 2024회계연도 상반기 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60억달러(6%) 증가
 - (주요 의무지출 프로그램) 전년 동기 대비 사회보장 지출이 9%, 메디케어 지출이 10% 증가하였으나, 메디케이드 지출은 2% 감소

24)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4," 2024. 4. 8.,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4/60115-MBR.pdf>, 검색일자: 2024. 4. 19.

25) 반기 개시일이 주말일 경우 해당일자 지급액을 주말 전에 선지급함을 의미. 2023회계연도 상반기의 경우 이전 기로 지급이전 및 하반기로부터 해당 기로 지급이전이 모두 있었으며, 2024년 회계연도 상반기의 경우 이전 기로 지급이전만 존재

26) 연방정부가 2023년에 재난지역으로 규정된 지역의 해당 지역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세금 납부기한을 2023년에서 2024년으로 연기

<표 7> 미국 2023회계연도 및 2024회계연도 상반기 결산 추이 비교

(단위: 십억달러, %)

구분	2023회계연도 상반기	2024회계연도 상반기	실질 추정치	기간이전 ¹⁾ 적용	
			증감	증감	증감률
수입	2,048	2,188	140	140	7
지출	3,149	3,252	103	186	6
재정적자	1,101	1,064	37	-46	-4

주: 1) 기간이전이란 기간 일정(예: 주말 전 지급 등)으로 인한 수입 지출 이동 내역(timing shift)을 의미

1. 재정적자 항목 중 음수인 수치는 적자의 증가가 아닌 적자의 감소를 의미

출처: CBO, "Monthly Budget Review: March 2024," 2024. 4. 8., Table 1

■ 미국 의회 상·하원, 국가 안보 관련 긴급 추경 세출예산안 패키지²⁷⁾ 가결(2024. 4. 23.)^{28), 29)}

- (배경) 공화당 소속 하원 의장의 발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지원 등을 담은 국가 안보 추경 예산 편성을 추진하여 4월 20일 하원 통과 및 4월 23일 상원 통과 후 4월 24일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³⁰⁾으로 발효
- (주요 내용)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기타 경제안건 등 4개의 개별 법안으로 입법 되었으며 형식상 2024년 2월 상원에서 통과되고 하원으로 이송되었던 국가 안보 법안(H.R.815)의 수정안으로 분류되어 상원 재이송 - 기타 경제안건에는 러시아 및 이란 등에 대한 경제 제재, 팬타닐 공급 방지, 미국이 동결한

- 러시아 자산의 우크라이나 제공³¹⁾ 등이 포함
- (규모)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태평양 지역 총지원규모는 953.4억달러로 추산³²⁾되며 기타 경제안건 법안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 우크라이나 608.4억달러, 이스라엘 263.8억달러, 인도·태평양지역 81.2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각기 개별 법안으로 편성
- (변동사항) 기존안과 수정안은 자금 배분 등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전반적인 지원 자금 규모 수준은 동일
 -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공군 자금 배분 조정, 핵 안보 관련 차후 예산권한 축소 가능성 언급 여부 등에서 일부 차이 존재³³⁾

27) 이스라엘 관련 긴급 추경 세출예산안(H.R.8034), 우크라이나 관련 추경 세출예산안(H.R.8035), 인도-태평양지역 관련 긴급 추경 세출예산안(H.R.8036), 러시아 및 이란 등에 대한 경제 제재 관련 법안(H.R. 8038) 등 4개의 법안이 해당

28) 미국 하원 세출 위원회, "House Passes Series of Security Supplemental Bills," 2024. 4. 20.,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eries-security-supplemental-bills>, 검색일자: 2024. 4. 23.

29) Reuters, "US Congress passes Ukraine aid after months of delay," <https://www.reuters.com/world/us/long-awaited-aid-ukraine-israel-taiwan-poised-pass-us-congress-2024-04-23/>, 검색일자: 2024. 4. 29.

30)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4/04/24/bill-signed-h-r-815/>, 검색일자: 2024. 4. 25.

31) 해당 법령은 우크라이나 보상기금(Ukraine Compensation Fund)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각국의 지원금뿐만 아닌 제재로 인해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도 포함하고 있음

32) 미국 상원 세출 위원회,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news/majority/senator-murray-urges-senate-to-pass-national-security-supplemental-show-the-world-that-american-leadership-is-still-alive-and-well>, 검색일자: 2024. 4. 26.

33) CRFB, "What's in the Latest House National Security Supplementals?," 2024. 4. 19., <https://www.crfb.org/blogs/whats-latest-house-national-security-supplementals>, 검색일자: 2024. 4. 24.

[기타]

■ 미국 의회예산처(CBO), 「2024~2054 장기재정 전망(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보고서 발표(2024. 3. 20.)^{34), 35), 36)}

- (재정수지) 2024회계연도 재정적자는 GDP 대비 5.6%로 추정되며, 향후 30년 동안 현저한 (significant) 증가세를 보이면서, 2054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8.5%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연방채무) 2024회계연도 말 연방채무는 GDP 대비 99%로 추정되며, 2029회계연도에는 역대 최고점인 GDP의 107%를 넘어 2054년에는 GDP 대비 166%에 달할 것으로 전망
- (재정지출) 2024회계연도 지출은 GDP 대비 23.1%로 추정되며, 2054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27.3% 증가 전망

<표 8> 미국 장기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FY2023 (실적)	FY2024	FY2034	FY2044	FY2054
수입	16.5	17.5	17.9	18.4	18.8
지출	22.7	23.1	24.1	25.7	27.3
재정수지	-6.2	-5.6	-6.1	-7.3	-8.5
기초재정수지	-3.8	-2.5	-2.2	-2.4	-2.2
연방채무	97	99	116	139	166

출처: 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2024. 3. 20. Table 1-1, p. 12

- (재정수입) 2024회계연도 수입은 GDP 대비 17.5%로 추정되며, 2054회계연도에는 GDP 대비 18.8% 전망



일본

[예산·결산 등]

■ 일본 재무성, 2024회계연도 예산안 성립 발표 (2024. 3. 28.)³⁷⁾

- 일본 재무성이 지난 1월 26일 국회에 제출한 112조 5,717억엔(일반회계, 전년 당초예산 대비 -1.6%)규모의 예산안³⁸⁾이 정부안대로 성립
 - (기본방침) 2024회계연도 예산은 고물가 대응,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임금 인상,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완전 탈피, 민간 수요 주도의 지속적인 성장 실현을 위해 노력
 - (세출)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전년 대비 1.6% 감소한 112조 5,717억엔, 일반회계 세출 중 국채비(채무상환비+이자지급비)를 제외한 기초재정수지 대상 경비는 전년 대비 4% 감소한 85조 9,390억엔으로 전망
 - (세입)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전

34) 미국 의회예산처(CBO), "The Long-Term Budget Outlook: 2024 to 2054," 2024. 3. 20.,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03/59711-Long-Term-Outlook-2024.pdf>, 검색일자: 2024. 4. 24.

35) 해당 보고서의 장기재정전망은 2024년 2월 CBO에서 발표한 예산-경제 기준선 전망(2024~2034년; as of 2023. 12. 5.)과 1월에 발표한 인구 추계 보고서(as of 2023. 11. 21.)를 기준으로 작성

36) 모든 연도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미국 연방정부 회계연도를 의미

37) 일본 재무성,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t_workflow/budget/fy2024/fy2024.html#seifuan, 검색일자: 2024. 4. 1.

38)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 예산안 [2024회계연도 예산안] - 일본」, 2024. 2.를 참고, <https://www.kipf.re.kr/cfa/Publication/Finance/kiPublish/CA2/Center/view.do?serialNo=527182>, 검색일자: 2024. 4. 2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년 대비 1.6% 감소한 112조 5,717억엔, 조세 및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2.1% 감소한 77조 1,227억엔으로 전망

- 기시다 총리는 지진 재해 대응 등 주요 시책을 빠르게 시행할 예정이며, 고물가 극복을 위한 소득 증가 정책 및 임금인상 정책을 통해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소득 증가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언급³⁹⁾

- 재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피해 상황을 바탕으로 재해 지역에 부흥 기금을 설치하여 2024년도 예산에 편성된 1조엔 규모의 예비비를 적절하게 사용

- 봄철 임금협상(춘투)에서의 임금 인상과 더불어 6월부터 인당 4만엔 규모의 소득세·주민세 감세⁴⁰⁾를 실시하여 가처분 소득을 지원

- 물가와 임금의 선순환을 위해 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종합적·다면적인 정책을 시행

- 노무비의 적절한 전가 등 적절한 가격 전가 정책, 임금 인상 촉진 세제 등 임금 인상 지원 정책, 중소기업 인력 부족 대응 강화 정책, 최저임금 인상, 육아 지원 등 근로자 지원 정책을 시행할 예정

-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정책 시행을 통해 올해에는 물가 상승을 상회하는 소득을 실현하겠다고 언급

- 일본 재무성, 노토반도 지진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⁴¹⁾ 관련 예비비 사용 예정 내역 발표(2024. 4. 23.)⁴²⁾

- 2024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된 일반 예비비 1조엔 중 노토반도 지진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와 관련하여 1,389억엔 규모의 예비비를 사용할 예정

- 긴급임시주택 제공 683억엔, 복지·개호(간병) 서비스 제공 체제 긴급 정비 사업 16억엔, 농업수산업 종사자 지원 44억엔, 공공 토목 시설 및 공공시설 복구 등 647억엔을 사용할 예정

[기타]

-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3회계연도⁴³⁾ 소비자물가지수 발표(2024. 4. 19.)⁴⁴⁾

- 2023회계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3% 상승한 106.3을 기록

39) 일본 총리실, https://www.kantei.go.jp/jp/101_kishida/statement/2024/0328kaiken.html, 검색일자: 2024. 4. 1.

40) 일본은 2024회계연도 세제 개정에서 2024년분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에 대해 납세자 및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 친족 1인당 소득세 3만엔·개인주민세 1만엔을 공제하기로 함(단, 납세자의 2024년 합계 소득금액이 1,805만엔 이하인 경우에 한함). 출처: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税制改正の大綱の概要」, 2023. 12. 22., https://www.mof.go.jp/tax_policy/tax_reform/outline/fy2024/06taikou_gaiyou.pdf, 검색일자: 2024. 2. 6.

41) 2024년 1월 25일 일본 내각부에서는 재해자들의 생활 및 생업의 재건, 복구·부흥을 위한 대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긴급하게 시행해야 할 정책을 정리한 「재해자의 생활과 생업 지원을 위한 패키지」를 발표, 2023회계연도 예비비 잔액(약 4,600억엔)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1조엔)을 재원으로 활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동향」 2024년 1월호, p.31을 참고, <https://www.kipf.re.kr/cfa/Trend/FiscalPolicies/kiTrend/Overseas/ALL/view.do?serialNo=6092>, 검색일자: 2024. 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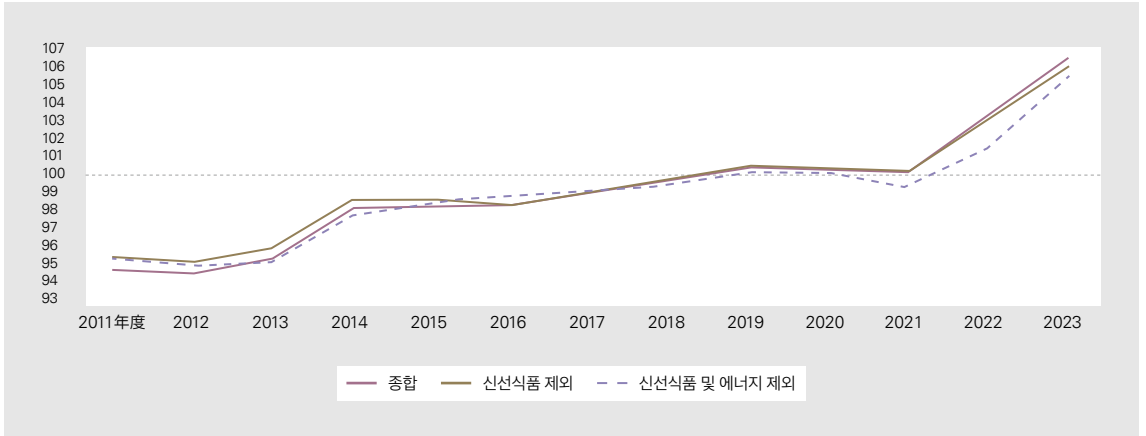
42) 일본 재무성, 「令和6年度能登半島地震に係る被災者の生活と生業支援のためのパッケージに基づく予備費使用について」, 2024. 4. 23., https://www.mof.go.jp/policy/budget/budger_workflow/budget/fy2024/nt240423.pdf, 검색일자: 2024. 4. 24.

43) 일본의 2023회계연도는 2023. 4. 1.~ 2024. 3. 31.

44)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年基準消費者物価指数 全国 2024年(令和6年)3月分及び2023年度(令和5年度)平均」, 2024. 4. 19., <https://www.stat.go.jp/data/cpi/sokuhou/nendo/pdf/zen-nd.pdf#page=4>, 검색일자: 2024. 4. 19.

[그림 2]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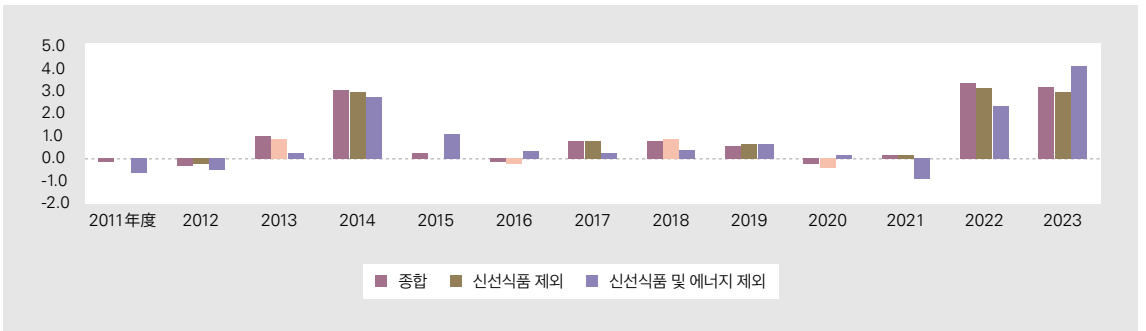
(단위: 2020년=100)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2024년(令和6년) 3월 분 및 2023년도(令和5年度) 평균」, p. 4, 그림 7, 2024. 4. 19.

[그림 3]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전년 대비)

(단위: %)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전국 2024년(令和6년) 3월 분 및 2023년도(令和5年度) 평균」, p. 4, 그림 7, 2024. 4. 19.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5.9로 전년 대비 2.8% 상승하였으며, 신선식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5.3으로 전년 대비 3.9% 상승

- (경제) 해외 경제의 완만한 성장, 완화적인 금융환경 등에 기인하여 소득에서 지출로의 순순환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잠재성장률⁴⁶⁾을 상회하는 성장이 계속될 전망
- (물가)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은 최근 원유가격 상승과 정부의 경제 대책 효과의 반작용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은행, 경제·물가 정세 전망 발표(2024. 4. 26.)⁴⁵⁾

45) 일본은행, 「經濟 物価情勢の展望」(2024年 4月), 2024. 4. 26., <https://www.boj.or.jp/mopo/outlook/gor2404a.pdf>, 검색일자: 2024. 4. 26.

46) 일본은행에서 추계한 2023년 4분기 전년 대비 잠재성장률은 0.68%. 출처: 일본은행, 「需給ギャップと潜在成長率」, 2024. 4. 3., https://www.boj.or.jp/research/research_data/gap/gap.pdf, 검색일자: 2024. 4. 3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하여 2024회계연도에는 2.8%를 나타낼 것이며, 2025~2026회계연도에는 상승폭이 축소되어 '물가안정 목표'인 2%에 근접한 1.9%를 나타낼 전망

- (위험) 해외 경제·물가, 원자재 가격, 기업의 가격·임금 설정 변화 등으로 인한 높은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과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주의할 필요

- (2024년 1월 전망과 비교) 2023~2024회계연도 경제성장률은 개인 소비 부진 등에 기인하여 소폭 하향 조정되었으며, 2024회계연도 물가상승률은 최근 원유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상향 조정

<표 9> 2023~2026회계연도 정책위원 경제·물가 전망

(단위: 전년 대비, %)

구분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 (신선식품 제외)
2023 회계연도	2024년 4월 전망	1.3~1.4 <1.3>	2.8 ¹⁾
	2024년 1월 전망	1.6~1.9 <1.8>	2.8~2.9 <2.8>
2024 회계연도	2024년 4월 전망	0.7~1.0 <0.8>	2.6~3.0 <2.8>
	2024년 1월 전망	1.0~1.2 <1.2>	2.2~2.5 <2.4>
2025 회계연도	2024년 4월 전망	0.8~1.1 <1.0>	1.7~2.1 <1.9>
	2024년 1월 전망	1.0~1.2 <1.0>	1.6~1.9 <1.8>
2026 회계연도	2024년 4월 전망	0.8~1.0 <1.0>	1.6~2.0 <1.9>

주: 1) 2023회계연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실적치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이며, 일본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4월~다음 연도 3월
2. 각 정책위원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전망의 수치에 대해 최대치와 최소치 1개를 제외하고 폭으로 나타낸 것이며, 예측 오차 등을 감안한 전망의 상한·하한을 의미하지 않음
3. 각 정책위원은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전제로 또는 장래 정책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호재와 악재를 반영하여 상기 전망을 작성하고 있음
4. <> 안은 정책위원 전망치의 중간값

출처: 일본은행, 『經濟 物価情勢の展望(2024년 4월)』, p. 9, 일부발췌, 2024. 4. 26.



독일

[예산·결산 등]

- 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2024년 봄 공동 경제전망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4) 발표 (2024. 3. 27.)⁴⁷⁾

*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ifo Institut, Kiel Institut für Weltwirtschaft (IfW Kiel), Leibniz-Institut für Wirtschaftsforschung Halle(IWH), RWI Essen)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 2회 공동 경제전망을 발표해 연방정부의 경제전망에 지침을 제공

- (경제성장률) 독일 주요 경제연구소 그룹의 2024년 봄 공동 경제전망은 독일의 GDP 성장률을 2024년 0.1%, 2025년 1.4%로 전망
 -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지난해 가을 전망 대비 1.2%p 하향 조정,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1%p 하향 조정됨
 - 민간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수요약화로 독일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며, 에너지 집약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

47) ifo INSTITUT, "Gemeinschaftsdiagnose Frühjahr 2024: Gegenwind aus In- und Ausland - Institute revidieren Prognose deutlich nach unten" 2024. 3. 27., <https://www.ifo.de/fakten/2024-03-27/gemeinschaftsdiagnose-fruehling-2024>, 검색일자: 2023. 4. 1. Gemeinschaftsdiagnose, "I Gegenwind aus In- und Ausland: Institute revidieren Prognose deutlich nach unten," 보도자료, 2024. 3. 27.,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4/03/iwh-press-release_2024-10_Gemeinschaftsdiagnose_1-24_de.pdf, 검색일자: 2024. 4. 1.

- 세계무역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2025년은 보다 강력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물가)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024년 2.3%에서 2025년 1.8%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의 둔화로 근원 물가상승률은 2024년 2.8%, 2025년 2.3%로 점차 하락할 전망
- (노동시장)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실질 단위 노동 비용이 다시 증가하고 있으나 노동시장은 여전히 고용친화적이며, 견고한 노동시장이 소비를 지원
 - 취업자 수는 2023년 약 4,590만명에서 2024년 4,61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
- (재정수지) GDP 대비 일반정부 예산 적자는 2023년 2.1%에서 2024년 1.6%, 2025년 1.2%로 계속해서 감소할 전망
 - 금융정책은 2024년 긴축적 기조를 유지하고 2025년부터 중립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통화정책은 물가상승률 둔화에 초점을 맞춘 조치를 지속할 예정
- (경상수지) 2022년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GDP 대비 경상수지는 점차 개선되어 2024년 6.4%, 2025년 6.5%로 상승할 전망
 - 글로벌 산업생산 증가와 이에 따른 자본재 및 중간재 수요 증가로 인해 수출입 가격은 하반기에 다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교역조건이 개선될 전망
- (위험요인) 지정학적 위험, 대외무역 갈등(보호주의 등), 구조적 변화와 생산 잠재력 약화, 코로나19 등 질병발생률 감소 여부의 불확실성, 정책의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 감소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적
- (정책 제언) 점진적 적자한도 설정, 지방자치단체 투자보호를 위한 금융시스템 재설계, 노동 생산성의 증가와 경제발전을 위한 이민자의 노동시장 통합 등이 매우 중요

<표 10> 2024년 봄 공동 경제전망(독일 경제연구소 그룹)

(단위: %, 천명, 십억유로)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¹⁾	2025년 ¹⁾
실질GDP성장률	3.2	1.8	-0.3	0.1	1.4
취업자 수	44,984	45,596	45,933	46,117	46,123
실업률	5.7	5.3	5.7	5.8	5.5
소비자물가상승률	3.1	6.9	5.9	2.3	1.8
일반정부 재정수지	-129.7	-96.9	-87.4	-67.2	-52.9
(GDP 대비 %)	-3.6	-2.5	-2.1	-1.6	-1.2
경상수지	263.5	164.6	243.1	270.2	283.1
(GDP 대비 %)	7.3	4.2	5.9	6.4	6.5

주: 1) 2024년, 2025년 전망치

출처: Gemeinschaftsdiagnose, "Gegenwind aus In- und Ausland: Institute revidieren Prognose deutlich nach unten," 보도자료, 2024. 3. 27., https://gemeinschaftsdiagnose.de/wp-content/uploads/2024/03/iwh-press-release_2024-10_Gemeinschaftsdiagnose_1-24_de.pdf, 검색일자: 2024. 4. 1.

■ 독일 연방통계청, 202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 통계(잠정치) 발표(2024. 4. 5.)⁴⁸⁾

- (재정수지) 독일의 2023년 일반정부 재정적자(순차입)는 전년 대비 354억유로 감소한 919억 유로(잠정치)이며, 2020년 이후 처음으로 1천억 유로 미만을 기록
 - 에너지 관련 지출이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지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지출보다 더 빠른 증가세를 띠
 - 연방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각각 876억유로, 68억유로를 기록하였고 주정부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 사회보장부문은 27억유로의 재정흑자를 기록
- (수입) 2023년 일반정부 수입은 2022년 1조 7,483억유로 대비 6.4% 증가한 1조 8,600억 유로를 기록
 - 2023년 조세수입은 1조 5,836억유로로 2022년 대비 3.8% 증가
- (지출) 2023년 일반정부 지출은 2022년 1조 8,754억유로 대비 4.1% 증가한 1조 9,519억유로를 기록
 - 연방정부에서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로의 보조금 및 부채상환 지원은 2022년 대비 13.9% 감소
 - 코로나19 관련 사업 지원과 의료 기금 등은 감소하였으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전기 및 가스 등의 에너지 지원 보조금은 증가

<표 11> 독일의 일반정부 재정수지(잠정치)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일반정부 순용자(+)/순차입(-)	-189.2	-133.2	-127.3	-91.9
일반정부 수입	1,489.4	1,629.3	1,748.3	1,860.0
일반정부 지출	1,678.6	1,762.4	1,875.4	1,951.9

주: 1.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의 지출 및 수입은 각 정부 수준의 거래액이 중복된 수치(예, 연방정부 → 주정부 지출,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분배)
 2. 재정통계 범위 내에서의 공공예산과 국민회계상의 금액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독일 연방통계청, "Eckwerte des Öffentlichen Gesamthaushalts im 1.-4. Quartal 2020 bis 2023 in Milliarden Euro," 2024. 4. 5.

■ 독일 연방 내각, 『2024년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채택(2024. 4. 24.)⁴⁹⁾

- (개요)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 보고서는 안정 성장협약⁵⁰⁾에 따라 재무부가 일반정부 재정전망과 독일 재정정책의 목표, 주요 재정정책 조치 등을 설명하는 문서로, 독일 연방 내각이 이를 채택한 후 EU 집행위원회와 EU 경제재무 장관 이사회에 제출됨
 - 이번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전망은 연방 정부의 2024년 2월 12일 기준 연방예산과 세수추계(2023.10.26. 기준) 업데이트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함
- (경제전망)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2024년 0.2%, 2025년 1%로 전망

48) 독일 연방통계청, "Öffentliches Finanzierungsdefizit 2023 bei 91,9 Milliarden Euro," press release, 2024. 4. 5.,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4/PD24_138_711.html, 검색일자: 2023. 4. 15.

49)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zeigt erste Erfolge der Konsolidierung - weitere Maßnahmen bleiben erforderlich" 보도자료, 2024.4.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24/04/2024-04-24-deutsches-stabilitaetsprogramm-2024.html>, 검색일자: 2024.4.25.

_____,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roschueren/_Bestellservice/stabilitaetsprogramm-2024.pdf?__blob=publicationFile&v=9, 검색일자: 2024. 4. 25.

<표 12>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제전망

(단위: %, 전년 대비 % 변화)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실질GDP 성장률	-0.3	0.2	1.0	0.7	0.7	0.7
실업률	2.8	2.9	2.7	3.0	3.2	3.3
취업자 수	0.7	0.2	0.2	-0.2	-0.2	-0.2
GDP디플레이터	6.6	3.2	1.8	2.0	2.0	2.0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p. 56, Table 9; p. 57, Table 10; p. 57, Table 11.

-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의 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0.7%로 가정

- 2024년 3월 물가상승률은 2.2%였으며 2025년 물가상승률은 목표치인 2%보다 낮게 나타날 전망

- (재정전망)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적자는 2024년 약 1.5%에서 2025년 1% 미만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GDP 대비 부채는 2023년 63.6%에서 2024년 약 64%로 소폭 상승한 후 점차 개선되어 2028년에는 62%까지 감소할 전망

- GDP 대비 구조적 재정적자는 2023년에 -2%에서 2025년에 -0.75%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2026년 이후의 증가는 사회보험 증가에 기인

- (재정정책 방향) 2024년 독일은 재정 정책의 정상화,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강화, 미래 대비를 위한 높은 투자 지출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공급측면의 정책이 필요

50) Stability and Growth Pact

51) 프랑스 예산국, "Publication des documents du 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3 (PLRG 2023)," 2024. 4. 13.

https://www.budget.gouv.fr/reperes/loi_de_finances/articles/publication-des-documents-du-projet-de-loi-relatif-aux-resultats, 검색일자: 2024. 4. 18.

52) 프랑스 하원, "Projet de loi n°2520," 2024. 4. 17., https://www.assemblee-nationale.fr/dyn/16/textes/l16b2520_projet-loi, 검색일자: 2024. 4. 18.

<표 13> 독일 안정화 프로그램의 재정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수입	46.1	47	47.5	48	48	48.5
총지출	48.6	48.75	48.75	49.25	49.5	49.5
일반정부 재정수지	-2.5	-1.75	-1	-1.25	-1.5	-1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2.0	-1.25	-0.75	-1	-1.25	-1
일반정부 부채	63.6	64	63.25	63.25	63	62

출처: 독일 연방 재무부, *Deutsches Stabilitätsprogramm 2024*, 2024, p. 41, Table 5; p. 44, Table 8; p. 58, Table 13.

- 인구통계학적 변화, 탈 탄소화, 낮은 생산성 등은 독일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민간 투자를 동원하고 노동력 공급과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 시행
- 연방정부는 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회 및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재정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노력



프랑스

[예산·결산 등]

- 프랑스 재무부, 「2023년 회계 결산 및 관리 결과에 관한 법안(Projet de loi relatif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3, PLRG 2023)」 발표(2024. 4. 17.)^{51), 52)}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프랑스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2022년 2.5%에서 2023년 0.9%로 감소
 - 인플레이션과 국제적 불안정, 특히 우크라이나 분쟁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됨
 - 하지만 프랑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경기 회복세를 이어감
 - 2023년 경제성장률 0.9%는 예산법에서 전망한 1.0%에 매우 근접한 수치
 - 2023년 물가상승률은 4.9%로 전년 대비 0.3%p 감소했으며, 에너지 가격과 식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은 2월 6.3%까지 상승했다가 12월 3.7%로 안정됨
 -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투자를 포함해 기업투자가 2.7%로 빠르게 증가했고, 수출이 1.5% 증가
 - 2023년 하반기에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서 가계소비가 다소 증가(0.6%)
 - 2023년 말 기준 실업률은 7.5%로 낮은 수준을 유지
- 2023년 중앙정부 총재정수지 적자는 1,730억 유로로 2022년 결산법 대비 215억유로, 2023년 예산법 대비 80억유로 증가
 - 경기 회복 부진으로 조세수입이 3,229억유로로 전년 대비 74억유로 감소
 - 기업 이익의 감소로 법인세 수입이 2023년 예산법 전망보다 44억유로 감소했고, 부가가치세 수입도 14억유로 감소함
 - 2023년 재정지출은 5,162억유로로 전년 대비 38억유로 증가했고, 2023년 예산법 전망 대비 44억유로 감소
 -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 발생에도 재정지출 통제를 위해 노력함
 -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지원 조치의 점진적 감소와 지출 통제를 위한 노력으로 2023년 국가지출범위(périmètre des dépenses de l'État, PDE)⁵³는 2023년 예산법 대비 70억유로 감소한 4,891억유로를 기록
 - 2023년 GDP 대비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당초 전망치인 4.9%보다 높은 5.5%를 기록
 -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3년 110.6%로 2022년 111.9%와 비교해 다소 감소

<표 14> 프랑스 2023년 GDP 대비 재정수지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일반정부(Ensemble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4.8	-5.5
중앙정부(État)	-5.6	-5.5
중앙행정기관(Organismes divers d'administration centrale)	0.6	-0.1
지방공공행정(Administrations publiques locales)	0.0	-0.4
사회보장행정(Administrations de sécurité sociale)	0.3	0.5

출처: 프랑스 재무부, *projet de loi de règlement 2022*, p. 13, 2023. 4. 13.

53) 특별할당회계 연금지출(Dépenses du CAS Pensions) 기여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의 모든 지출을 포함

[기타]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3년 회계 결산 및 관리 결과에 관한 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 (2024. 4. 17.)⁵⁴⁾

- 2023년 GDP 대비 재정적자는 5.5%로, 2023~2027년 중기재정법 목표치인 4.9%보다 0.6%p 높게 나타남
 - 코로나19 관련 재정조치의 종료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관련한 재정지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해 구조적 재정수지가 악화됨
- 채무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고 생태학적 전환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정지출 증가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조세수입을 줄이는 조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프랑스 재무부, 2024~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 (Programme de stabilité (PSTAB) 2024-2027) 발표(2024. 4. 17.)⁵⁵⁾

- (경제전망) 2024년 물가 안정으로 인한 가계 소비 증가가 경제 회복을 촉진할 전망
 -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2023년 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경기 회복력을 유지함
 - 2024년 물가 안정화로 인해 가계 소비가 증가하여 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전망
 - 가계 소비 증가, 기업 투자 반등, 글로벌 수요 회복으로 인해 2025년 경제성장률은 1.4%로 높아질 전망
 - 2026~2027년 경제성장률은 각각 1.7%, 1.8%로, 잠재성장률인 1.35%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됨
- 수출의 확대와 생태학적 전환 및 디지털 전환 관련 투자 증대가 성장에 기여

<표 15> 2023~2027년 프랑스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경제성장률	0.9	1.0	1.4	1.7	1.8
가계소비	0.6	1.6	1.6	2.0	2.2
일반정부소비	0.5	0.1	0.7	1.2	0.9
수입	-0.1	0.8	3.1	3.1	3.1
수출	1.5	2.1	3.9	3.5	3.5
총고정자본형성	1.1	-0.4	0.7	1.3	1.2
GDP디플레이터	5.5	2.6	1.7	1.6	1.6

출처: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4-2027,” 2024, Table 1, p. 12, 2024. 4. 17.

54)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 projet de loi relative aux résultats de la gestion et portant approbation des comptes de l’année 2023,” 2024. 4. 17.,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4-1-loi-relative-aux-resultats-de-la-gestion-et-portant-approbation-des>, 검색일자: 2024. 4. 23.

55) 프랑스 재무부, “Présentation du Programme de Stabilité 2024-2027,” 2024. 4. 17., <https://www.tresor.economie.gouv.fr/Articles/2024/04/17/article-presentation-du-programme-de-stabilite-2024-2027>, 검색일자: 2024. 4. 22.

<표 16> 2022~2027년 프랑스 재정 전망

(단위: GDP 대비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재정수지	-4.8	-5.5	-5.1	-4.1	-3.6	-2.9
GDP대비 재정지출 비율	58.1	56.7	56.3	55.6	55.2	54.5
재정지출 증가율	-1.3	-1.1	0.6	0.2	0.7	0.4
총조세부담률	45.2	43.5	43.6	43.9	44.1	44.1
GDP대비 공공채무	111.9	110.6	112.3	113.1	112.9	112.0

출처: 프랑스 정부, *programme de stabilité 2024-2027*, 2024, Table 2, p. 17, 2024. 4. 17.

- (재정전망)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3% 미만을 달성할 전망
 -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23년 5.5%에서 2027년 2.9%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GDP 대비 공공채무는 202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고, 2027년 112%를 기록할 전망
 - 2024~2027년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0.6% 수준으로 낮게 유지해 GDP 대비 재정지출 비율은 2023년 56.7%, 2027년 54.5%로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
 - (재정전략) 2024~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은 코로나19와 에너지 위기 이후 재정을 정상화 하려는 목표를 담고 있음
 -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모든 하위 부문에서 지출 통제 노력을 기울임
 - 지출 통제 노력과 함께 완전고용 달성을 위한 지원,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생태학적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한 투자 등 필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지원을 유지
 - 완전고용 달성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지원
 - 교육, 보건 및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경제 성장을 촉진
 - 생태학적 전환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며, 특히 에너지 효율 개선과 디지털 기술 활용 확대에 중점적으로 지원
 - (재정 지속가능성) 고령화에 따라 연금과 보건 관련 지출이 증가해 재정에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2023년에 시행된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출 증가를 억제하여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다소 개선됨
- 프랑스 최고재정자문위원회, 2024~2027년 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발표(2024. 4. 17.)⁵⁶⁾
- 프랑스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1%는 IMF(0.7%)나 OECD(0.6%)의 전망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달성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다소 낙관적인 전망이라 평가
 - 특히 금리를 고려했을 때 기업투자 증가율

56) 최고재정자문위원회, "avis relatif aux prévisions macroéconomiques associées au programme de stabilité pour les années 2024 à 2027," 2024. 4. 17., <https://www.hcfp.fr/liste-avis/avis-ndeg2024-2-programme-de-stabilite-2024-2027>, 검색일자: 2024. 4. 23.

- 이 높게 평가되었고, 서비스 부문 물가의 안정화도 전망보다 느리게 진행될 수 있음
- 2025~2027년 경제성장을 전망은 가계 소비가 코로나19 이전보다도 높은 수준으로 회복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
 - 2027년 GDP 대비 재정적자를 3% 이하로 줄이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 조정 노력은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낙관적 경제 전망과 일치하지 않음
 - 거시경제 전망 달성을 위해서 재정적자 감축 노력을 제한적으로 하거나, 재정수지 목표 달성을 위해선 성장 전망을 낮추고 재정 노력을 더 크게 기울여야 함
 -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GDP 대비 재정지출의 비중을 줄이기 위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략과 조세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됨
 - (개요) 정부는 공공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대중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5개 영역에 대한 효율화 방안을 발표
 - (조달 개선) 조달 전문기관을 운영하여 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절감을 달성하며, 공공부문 조달 프로세스 간소화 및 중소기업 지원을 계획
 -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 제정으로 공공부문 조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 업무를 단순하고 유연하며 효과적으로 구축
 -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여 정부가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및 효율성을 향상
 - (사기·오류·탈세 근절) 공공부문 부정 관리국(Public Sector Fraud Authority)의 활동을 통해 조세 격차⁵⁸⁾를 해소하고 복지부문 사기 및 오류에 대응해 연간 약 14억파운드를 절감
 - 기업의 부가가치세에 적용되었던 세금 디지털화 시스템⁵⁹⁾을 2026년 4월부터 소득세에 까지 확대 적용(과세소득 5만파운드 이상인 사업체 및 임대주 대상)
 - 정부는 은행 등 제3자로부터 노동·연금부로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제정
 - (주요 프로젝트 관리) 정부 주요 프로젝트 포트폴리오⁶⁰⁾는 2022-23회계연도 말 기준, 244개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고, 총생애주기 비용⁶¹⁾



영국

【예산·결산 등】

- 영국 재무부, 공공부문 효율화 방안 발표(2024. 4. 3.)⁵⁷⁾

57) HM Treasury, “Seizing the Opportunity: Delivering Efficiency for the Public,” Policy paper, 2024. 4. 3.,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eizing-the-opportunity-delivering-efficiency-for-the-public#full-publication-update-history>, 검색일자: 2024. 4. 5.

58) tax gap: 실제 내야하는 세금과 납부한 세금 간 차이로, 마땅히 납부해야 함에도 납세자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의미

59) Make Tax Digital: 기업이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세금 기록을 남기고, 세금 데이터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디지털 시스템

60) Government Major Projects Portfolio(GMPP): 정부는 각 부처에서 실시하는 프로젝트 중 범정부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관심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GMPP로 구분하여 관리

61) life-cycle cost: 초기 투자, 운영, 유지관리, 최종적인 처분에 이르기까지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합산한 것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은 8,050억파운드에 달함에 따라 해당 프로젝트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

- 인프라·프로젝트 관리국⁶²⁾은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부 부처를 위한 지침과 모범 사례를 공유

- 재무부와 인프라·프로젝트 관리국은 성과가 저조한 주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재설정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제공

- (국유재산 관리) 국유재산 전략, 정부청사 통합·관리, 학교·병원 건물 유지보수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국유재산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향상

- 2022년에 수립한 ‘국유재산 전략 2022-2030⁶³⁾’을 차질 없이 운영

- 국유재산청(Government Property Agency)은 정부청사 및 부동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14억~24억파운드 규모의 절감(효율화)을 달성

- 낙후된 학교와 병원 건물을 개보수하는 School Rebuilding Programme, New Hospitals Programme 등에 지속적으로 투자

-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 오래된 IT 시스템 업그레이드, 데이터 수집 및 공유 개선, 숙련된 IT

전문가 채용 등을 통해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에 힘써 공공부문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

- 현재 주로 종이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자수당 및 고용·지원수당 시스템을 디지털화하여 80만명 이상의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기 및 오류의 확률을 감소

- GOV.UK One Login 프로그램을 통해 190개의 계정 유형과 44개의 다양한 로그인 경로를 빠르고 간단하며 안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체

- IT 전문가들의 지식과 기술을 통해 공무원이나 공공부문에서 인공지능의 이점을 적절하게 활용

■ 영국 총리, 복지제도 개편안 발표(2024. 4. 19.)⁶⁴⁾

- (개요) 수석 총리는 비경제활동 증가에 대처하고 복지 시스템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5가지의 복지제도 개편안을 발표

● 근로역량 평가⁶⁵⁾를 강화하여 심각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잉 수혜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 최대한 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 2011년에 근로역량 평가를 받은 사람의 20%가 지원 그룹(근로 부적합)으로 평가되

62) Infrastructure and Project Authority(IPA):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전문 센터로, 인프라 및 주요 프로젝트(철도, 학교, 병원, 주택, 국방, IT, 주요 혁신 프로그램 등)의 성공적인 전달을 위한 지원과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조직

63) Government Property Strategy 2022-2030: 정부 부동산 매각과 건물 효율화를 통한 20억파운드 절감 계획

64)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Prime Minister's speech on welfare: 19 April 2024," Speech, 2024. 4. 19.,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rime-ministers-speech-on-welfare-19-april-2024>, 검색일자: 2024. 4. 22.

Prime Minister's Office, 10 Downing Street, "Disability benefits system to be reviewed as PM outlines "moral mission" to reform welfare," Press release, 2024. 4. 19., <https://www.gov.uk/government/news/disability-benefits-system-to-be-reviewed-as-pm-outlines-moral-mission-to-reform-welfare>, 검색일자: 2024. 4. 22.

65) Work Capability Assessment: 장애 또는 질병이 일할 수 있는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평가로, 고용·지원수당(Employment and Support Allowance; ESA) 신청자는 필요시 해당 평가를 통해 '근로 관련 활동 그룹'(work-related activity group: 지금은 근로할 수 없지만 이력서 작성 등을 통해 미래에 근로를 준비할 수 있음)과 '지원 그룹'(support group: 지금 일할 수 없고 미래에 근로를 준비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중 하나에 배치됨

- 었으나, 최근 수치는 65%를 기록
- 낮은 수준의 이동성 문제가 있는 경우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심각하지 않은 쇠약 상태에 있는 경우 필요한 치료와 함께 근로도 병행하도록 조정
 - 업무적합성 평가서⁶⁶⁾의 발급 체계를 재검토하여 병가의 남용을 억제
 - 2023년에 업무적합성 평가서는 1,100만건이 발급되었고, 그 중 94%가 업무 부적합 평가를 받아 병가가 승인됨
 - 현재 일반의(GP)를 통해 업무적합성 평가서를 발급받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변경하여 직업·의료 전문가를 통한 발급을 검토
 - 주당 정규 근무시간⁶⁷⁾의 절반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통합급여⁶⁸⁾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구직활동이 요구되도록 규정을 변경하여 일이 복지의 중심이 되도록 조치
 - 이에 따라 개인의 현재 수입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직활동이 정해지는 행정 소득 임계값⁶⁹⁾이 인상되어, 18만명 이상이 Intensive Work Search 그룹으로 이동
 - 개인자립수당⁷⁰⁾의 자격 기준, 평가 절차, 지원 유형 등을 검토하여 해당 시스템이 개인의 필요에

- 더 적합하고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개선
- 하나의 기준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one size fits all’ 접근방식이 아닌, 개인의 상황(person’s condition)에 따라 결정되는 방식을 적용
 - 이는 수급자 유형이 2013년 도입 당시보다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개인이 평가 절차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 사기, 오류 등에 따른 부정수급을 단속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납세자들의 자금을 절약
 - 정부는 법률을 통해 은행과 같은 제3자의 중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들의 자금 6억파운드를 절약
 - 인공지능을 포함한 현대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시스템의 남용을 단속하고, 민사 처벌을 강화하여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호주

[예산·결산 등]

■ 호주 통계청, 2022-23회계연도 정부재정통계 발

66) Fit Note: 2010년부터 시행된 영국의 업무적합성 평가로, 근로자는 7일 이상의 질환에 대한 업무 복귀 시 의료전문가에게 업무적합성 평가서를 받아 고용주에게 제출해야만 법정병가수당을 받을 수 있음

67) 영국은 1일 최대 8시간, 주 최대 48시간까지 일할 수 있으나, 24시 근무가 필요한 업종이나 경찰 등 일부 예외에 한해 48시간 이상 일할 수 있음

68) Universal Credit: 4개의 사회보장급여(소득기반 구직자수당, 고용·지원수당, 소득보조, 주거급여)와 2개의 조세급여(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공제)를 하나로 통합한 급여. 세분화된 사회보장급여체계를 간결하게 만들어 복지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도입되었고, 6개 급여의 단일화 작업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

69) Administrative Earnings Threshold(AET): 통합급여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 코치(work coach) 수준을 결정하는 수입의 임계값으로,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AET 미만인 청구인은 근로 코치를 받아야 하는 Intensive Work Search 그룹에 속하고, AET 이상인 청구인은 Light Touch 그룹에 속하게 됨.

AET는 월소득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현재 18시간)에 법정생활임금(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산정($AET = \frac{52\text{주}}{12\text{달}} \times 18\text{시간} \times \text{법정생활임금}$)

70) Personal Independence Payment(PIP): 일상생활이나 이동 제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는 수당으로, 2013년에 기존 장애수당에서 개인자립수당으로 전환 기준 장애수당과 달리 수급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재평가 절차가 필요함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표(2024. 4. 23.)⁷¹⁾

- 2022-23회계연도 일반정부 세입(taxation revenue)은 2021-22회계연도 대비 10.6% 증가한 7,558억 700만호주달러, 총수입(total revenue)은 2021-22회계연도 대비 11.1% 증가한 9,238억 800만호주달러를 기록
- 2022-23회계연도 총비용(total expenses)은 2021-22회계연도 대비 2.3% 증가한 8,854억 9,800만호주달러로 집계됨
- 2022-23회계연도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⁷²⁾는 383억 1천만호주달러 흑자, 순차입⁷³⁾은 211억 9,600만호주달러를 기록

- 호주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의 일환으로 임대 주택 건설 촉진을 위해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향후 10년 동안 신규 주택 투자에 250억호주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임을 발표 - 세제 혜택(안):⁷⁵⁾ 신축 임대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 비율을 2.5→4%로 상향, 관리투자신탁(managed investment trust) 자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30→15%로 인하
- 호주 정부는 더 많은 투자유치를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5년 동안 120만 채의 위치가 좋은 신규 주택 건설을 지원할 것이며, 부동산 업계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15만채의 임대 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추정

[기타]

- 호주 재무부,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세제 혜택 및 250억호주달러 투자 발표(2024. 4. 9.)⁷⁴⁾

- 호주 통계청, 2024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2024. 4. 24.)⁷⁶⁾
- 호주의 2024년 1분기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분

<표 17> 2022-23회계연도 정부재정통계(일반정부)

(단위: 백만호주달러)

구분	2019-20회계연도	2020-21회계연도	2021-22회계연도	2022-23회계연도	2021-22회계연도 대비 2022-23회계연도% 변화분
세입(Taxation revenue)	551,751	593,105	683,074	755,807	10.6
총수입(Total revenue)	681,658	728,022	831,291	923,808	11.1
총비용(Total expenses)	789,737	873,523	865,963	885,498	2.3
순운영수지(Net operation balance)	-108,079	-145,501	-34,672	38,310	-
순융자/차입(Net lending(+)/borrowing(-))	-151,736	-192,914	-87,346	-21,196	-

출처: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nual," 2024. 4. 23.

71) 호주 통계청,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Annual," 2024. 4. 23., <https://www.abs.gov.au/statistics/economy/government/government-finance-statistics-annual/2022-23>, 검색일자: 2024. 4. 24.

72) 순운영수지: 총수입-총비용

73) 순융자/차입: 총수입-총비용-비금융자산 순취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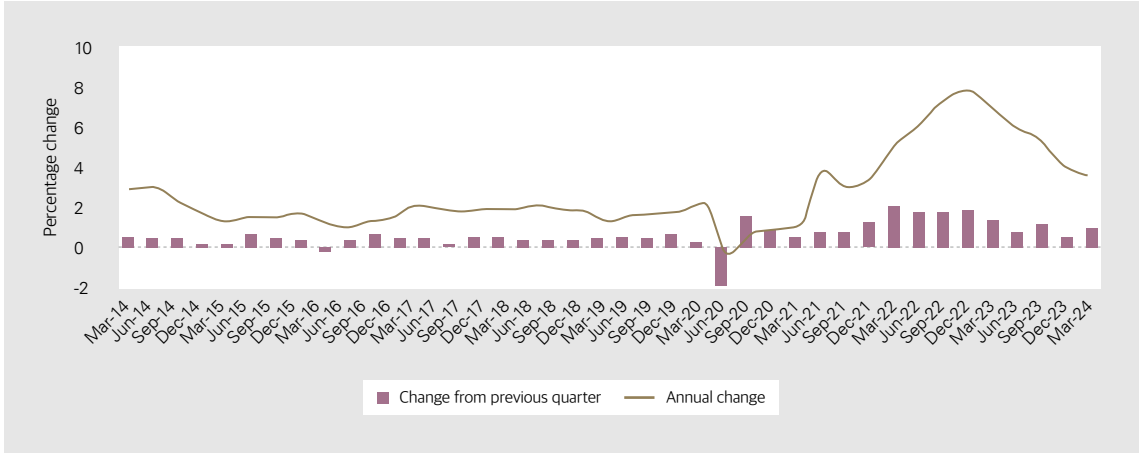
74) 호주 재무부, "Building more affordable rental homes," <https://ministers.treasury.gov.au/ministers/jim-chalmers-2022/media-releases/building-more-affordable-rental-homes>, 검색일자: 2024. 4. 17.

75) <https://treasury.gov.au/consultation/c2024-487657>

76) 호주 통계청, "CPI rose 1.0% in the March 2024 quarter," 2024. 4. 24., <https://www.abs.gov.au/media-centre/media-releases/cpi-rose-10-march-2024-quarter>, 검색일자: 2024. 4. 24.

[그림 4] 호주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단위: %)



출처: 호주 통계청, "CPI rose 1.0% in the March 2024 quarter," 2024. 4. 24.

기 대비 1%,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
 - 1분기 물가상승률은 임대료(2.1%), 중등교육(6.1%), 고등교육(6.5%), 병원 및 의료서비스(2.3%) 등의 부문이 주도

- 이후 임금 인상과 가계소비 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여 2025년 경제성장률을 1.6%로 추정하며 향후 2029년까지 완만한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
 - 인플레이션은 2024년 2.9%, 2025년 2.8%로 이후에도 2%대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

 네덜란드

[예산·결산 등]

■ 네덜란드 재무부, 봄 각서(Spring Memorandum)

발표(2024. 4. 15.)⁷⁷⁾

※ 네덜란드 재무부는 매년 4~5월경 의회에 예산안의 정부수입과 지출을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봄 각서(Spring Memorandum)를 1차 추경과 함께 제출

- (경제전망) 봄 각서에서는 세계 무역의 회복이 더디고 투자가 감소하여 2024년 경제성장률을 예산안의 1.5%에서 1.1%로 하향 조정

- (재정전망) 2024년 재정적자는 예산안 대비 0.4%p 개선된 GDP 대비 2.5%로 수정 전망하였으며, 이후 2026년에는 GDP 대비 4%로 악화되다가 2028~2029년 EMU 기준인 GDP 대비 3%에 이를 전망

- 2026년 재정적자가 악화된 것은 정부예산으로 운영되던 균인연금이 자본 자금조달(capital funding)에 의한 새로운 연금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85억유로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임
 - 2024년 정부채무는 예산안의 추정치(47.3%)

77) 네덜란드 재무부, "Voorjaarsnota 2024," 2024. 4. 15., <https://www.rijksfinancien.nl/voorjaarsnota/2024>, 검색일자: 2024. 4. 16.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를 하회하는 GDP 대비 47.2%가 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후 2025년부터 중장기적으로 예산안 추정치를 상회하여 2029년 GDP 대비 55%에 도달할 전망

- 2025년부터 정부채무가 예산안 추정치보다 더 높게 수정 전망된 것은 국영전력회사 테넷(TenneT)에 제공되는 250억달러의 브릿지론 때문임

<표 18> 주요 거시경제 전망

(단위: %)

구분	2024년 예산안	2024년 봄 보고서
국내총생산(GDP)	1.5	1.1
가계소비	2.4	2.7
수출	1.5	0.6
수입	2.1	1.1
인플레이션	3.9	2.9
임금상승률	5.6	6.0
실업률	4.0	3.7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Voorjaarsnota 2024," 2024. 4. 15.

<표 19> 주요 재정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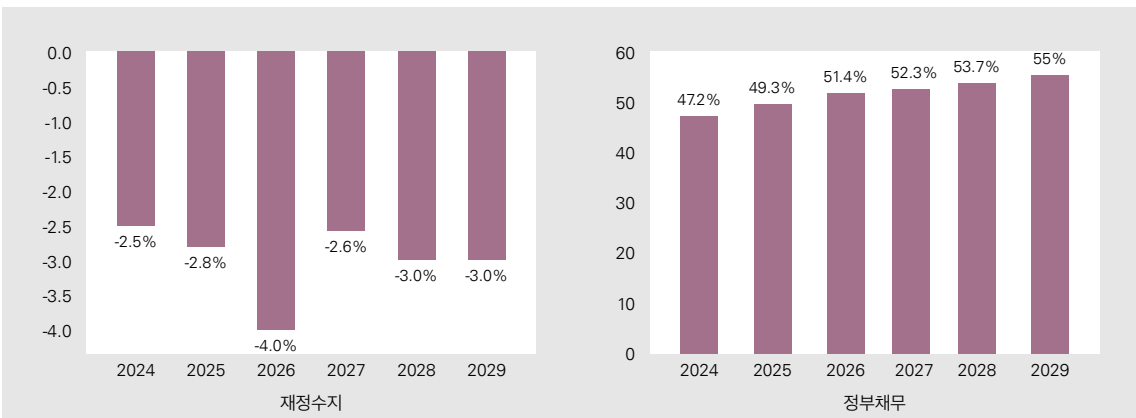
(단위: 십억유로, GDP 대비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일반정부 재정수입	401.6	421.9	438.6	456.3	473.6	492.5
일반정부 재정지출	428.0	453.0	485.0	487.4	510.4	531.7
일반정부 재정수지	-27.1	-31.8	-47.2	-31.8	-37.6	-39.9
(GDP 대비 %)	-2.5	-2.8	-4.0	-2.6	-3.0	-3.0
2024년 예산안	-2.9	-2.9	-3.6	-2.6	-3.2	-
정부채무	512.9	556.6	604.3	637.6	678.7	721.2
(GDP 대비 %)	47.2	49.3	51.4	52.3	53.7	55.0
2024년 예산안	47.3	48.6	50.4	51.3	52.9	-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Voorjaarsnota 2024," 2024. 4. 15., 표 6, 7, 8 재구성

[그림 5] 네덜란드 재정수지와 정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Voorjaarsnota 2024," 2024. 4. 15

- 중장기적으로 공공재정은 투자 지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인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주요 정책) 예산안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신청자를 위한 긴급 숙소 비용,⁷⁸⁾ 에너지세제⁷⁹⁾ 등 주요 정책의 미흡한 점으로 인해 지출증가와 세수손실이 예상되어 봄 각서에서 다른 정책으로 보완되었으며, 예산의 여유재원으로 우크라이나 지원 등에 추가 재원을 배분
- 예산안의 세수 손실분은 봄 각서에서 다음과 같은 세제 변경으로 충당
 - 석탄세 면제 폐지제도 2027년부터 신규 도입
 - 천연가스에 대한 에너지세 3~5등급 세율 2025년부터 22.4% 인상(3등급 31.6유로센트(m³ 당), 4등급 20.3유로센트(m³ 당), 5등급 5.3유로센트(m³ 당)→ 38.6유로센

- 트(m³ 당), 24.9유로센트(m³ 당), 6.6유로센트(m³ 당)로 변경)
- 최고 소득세율의 과세표준 구간 시작점 557유로만큼 인하(7만 3,031 → 7만 2,474유로)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12.7→ 12.03% 인하
- 예산의 여유재원은 국방,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 기후기금의 지출 연기, 고용부, 보건복지체육부, 문화과학부의 예산초과 등으로 발생
- 보다 현실적인 예산흐름을 실현하기 위해 2024년에 지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출은 내년 이후로 연기하였으며 2024~2025년 동안 총예산 이전 규모는 약 90억유로
- 예산의 여유재원으로 다음 분야에 대해 추가 재원을 배분

<표 20> 수입 변경사항 요약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산업 및 전력에 대한 기후대책법안 관련 세수손실 ¹⁾	0.0	-0.2	-0.2	-0.3	-0.3
산업 및 전력에 대한 기후대책법안 보완조치					
- 석탄세 면제 폐지	0.0	0.0	0.0	0.1	0.1
- 천연가스 에너지세 22.4% 인상	0.0	0.2	0.2	0.2	0.2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계거래제도 관련 세수손실 ²⁾	0.0	-0.2	-0.3	-0.3	-0.4
상계거래제도 관련 보완조치					
- 최고 소득세기준 557유로 인하	0.0	0.2	0.2	0.2	0.2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 12.7 → 12.03% 인하	0.0	0.1	0.1	0.1	0.1
자동차세 세율 인하 ³⁾	0.0	0.0	-0.3	0.0	0.1
구매력 측정	0.0	0.0	0.0	0.0	0.0
기타수입금액 합산	0.0	0.0	0.1	0.0	0.0
2023년 가을 총수입 대책 패키지	-0.8	1.4	1.3	1.3	1.3
2023년 가을 상공회의소 대책 패키지의 기본 수정	0.8	-1.4	-1.3	-1.3	-1.3
세금 및 보험료 수입	0.0	0.1	-0.1	0.0	0.0

주: 1) 산업 및 전력에 대한 기후대책법안이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2030년까지 구조적으로 2억 1백만유로, 부수적으로 13억유로의 세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2) 상원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계거래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거부했으며 세수손실은 2025년 2억 4,500만유로에서 2031년 7억 1,700만유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3) 지속가능한 기후정책 추진의 맥락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세율을 2026년 40%, 2027~2029년 30%, 2030년 25% 인하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Voorjaarsnota 2024," 2024. 4. 15.

78) 가장 최근의 일정 기간 동안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보다 더 많은 난민 신청자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남

79) 산업 및 전력에 대한 기후대책법안, 태양광 발전에 대한 상계거래제도와 관련되어 있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우크라이나 군사적 및 재정적 지원, 난민 수용 2024년 4억 7,300만유로
- 국방 대공방어 시스템, 탄약 지원 2024년 5억유로
- 아동수당 스캔들⁸⁰⁾ 피해자 보상 2024년 5억유로
- 반도체 산업 육성 2025년 1억유로
- 흐로닝언(Groning) 지역 광산의 지진 피해 복구 2025년 5억유로
-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GDP 기반 재원조달제도 조기 도입⁸¹⁾ 2026년 8억유로

<표 21> 지출 변경사항 요약

(단위: 십억유로)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부처 예산조정					
- 고용부	-1.0	-0.9	-0.9	-1.2	-1.3
- 보건복지체육부	-0.7	-0.2	-0.1	-0.1	-0.1
- 문화과학부	0.1	-0.6	-0.7	-0.7	-0.7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기후전환 촉진(SDE) 보조금 ⁸¹⁾			-1.7	-1.3	-0.9
예산 이전					
- 국방	-2.1	-0.9	1.4	0.6	0.5
-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	-1.3	-1.0	0.1	0.3	0.1
- 기후기금	-0.2	-0.9	1.1	-0.2	-0.5
- 기타	-1.7	-1.3	0.6	0.5	0.4
우크라이나	3.2	5.2	3.1	0.3	0.2
- 군사적 지원	2.0	1.7	2.0	0.0	0.1
- 재정적 지원	0.9	0.6	0.3	0.2	0.0
- 난민 수용소	0.5	2.7	0.7	0.0	0.0
- 군사 공급보안	-0.2	0.1	0.1	0.1	0.1
아동수당 스캔들 피해자 보상	0.4	0.9	0.6	0.4	0.0
흐로닝언 피해 복구	-0.1	0.5	0.3	0.0	0.1
반도체 산업 육성	-0.7	-0.3	0.0	0.1	0.1
- 투자	0.0	0.1	0.2	0.1	0.1
- 국가성장기금 출연	-0.7	-0.4	-0.2	0.0	0.0
지방정부					
- 지자체의 새로운 GDP 시스템 도입	-0.1	-0.9	0.8	0.8	0.8
- 인구통계		0.1	0.2	0.2	0.3
방공 강화, 탄약지원					0.5
망명자 긴급 대피소	0.9	0.5	0.6		
임금 및 물가 조정	0.2	-1.6	-4.1	-5.3	-5.5
한도에 대한 기타 변경사항	1.2	0.1	0.3	0.9	-1.3
한도에 따른 총지출 변경	-4.0	-5.7	-1.1	-4.7	-7.2
우크라이나 지출 한도 초과	2.1	4.5	2.7	0.0	0.1

주: 1) 에너지 가격이 몇 년 동안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2026~2029년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기후전환 촉진(SDE) 보조금 제도에 필요한 예산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재정소요액이 조정됨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Voorjaarsnota 2024," 2024. 4. 15.

80) 네덜란드 아동수당 스캔들은 네덜란드의 세무당국이 네덜란드 주민들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한편, 아동수당 배급을 부당 청구한 사건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적어도 네덜란드의 2만 6천여 명이 달하는 부모가 육아수당 청구에 대해 부정 행위가 일어나거나 의심되었으나 이후 이 명령이 오류에 기인했음이 드러남

81)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 하나는 지방 기금임. 정부는 연정합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새로운 자금 조달 시스템을 발표하였고 국내총생산(GDP) 추이를 기준으로 2027년부터 지방기금을 지수화하기로 결정함. 새로운 GDP 시스템이 지방기금에 미치는 영향은 2024년 예산안에 포함

- 네덜란드 재무부, 2024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발표(2024. 4. 15.)⁸²⁾
 - 2024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350억유로(9.4%) 증가한 4,087억유로로 편성

- 이번 추경예산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난민 수용,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 및 기후정책 촉진 등에 중점

<표 22> 2024년 제1차 추경

(단위: 억유로, %)

분야	2024년 예산안	제1차 추경	본예산 대비
사회·고용	580.2	619.8	6.8
교육, 문화, 과학	554.7	582.1	4.9
금융과 국가부채	573.1	709.2	23.7
지방자치단체 기금	428.7	433.4	1.1
보건, 복지 및 스포츠	352.7	372.8	5.7
정의와 안보	241.2	267.0	10.7
국방	147.9	224.3	51.7
인프라 및 수자원 관리	146.5	142.9	-2.5
외교	127.9	122.0	-4.6
경제 및 기후 정책	122.4	142.5	16.4
내무	112.0	119.3	6.5
국방 장비 예산 기금	107.2	98.1	-8.5
모빌리티 펀드	102.5	104.1	1.6
대외 무역 및 개발 협력	36.4	39.3	8.0
주정부 기금	33.4	36.1	8.1
농수산물, 자연, 식품 품질	28.6	44.6	55.7
델타 펀드 ¹⁾	18.2	15.8	-13.1
국가성장기금	15.7	5.1	-67.7
일반 주정부 ²⁾	2.4	2.9	21.2
왕국	2.2	1.6	-28.7
주립 고등학교	1.8	0.0	-99.9
총무	1.0	1.2	20.0
BES(Bonaire, Sint Eustatius en Saba) 공공기관 지원 펀드	0.7	0.8	18.2
왕실	-	0.6	-
동물보건기금	0.3	0.4	31.9
재정지출	3,737.8	4,087.8	9.4

주: 1) 수질, 홍수 위험 관리에 대한 투자를 포함

2) 상원과 하원의 입법과 통제, 국회의원 및 전직 의원에 대한 비용을 포함

출처: 네덜란드 재무부, "Begrotingsvisualisaties," <https://www.rijksfinancien.nl/visuals/2024/suppletoire1/uitgaven/incl-premies?graph=pie>, 검색일자: 2024. 4. 26. 재구성

82) 네덜란드 재무부, "Eerste suppletoire 2024," 2024. 4. 15., <https://www.rijksfinancien.nl/memorie-van-toelichting/2024/1SUPP>, 검색일자: 2024. 4. 16.

네덜란드 재무부, "Begrotingsvisualisaties," 2024. 4. 25., <https://www.rijksfinancien.nl/visuals/2024/suppletoire1/uitgaven/incl-premies?graph=pie>, 검색일자: 2024. 4. 26.



스웨덴

[예산·결산 등]

■ 스웨덴 재무부, 「2024년 춘계재정정책법안」 발표 (2024. 4. 15.)^{83), 84)}

※ 정부는 매년 4월 15일까지 「춘계재정정책법안」을 스웨덴 의회에 제출해야 함. 「춘계재정정책법안」에는 정부가 제시한 경제 및 재정 정책의 지침이 포함되어 있고, 가을에 진행되는 예산법안의 구체화를 위한 출발점으로 기능⁸⁵⁾

- (경제 전망) 스웨덴 경제는 2023년부터 경기 침체에 빠진 것으로 보이며 2025년까지 계속될 전망. GDP는 2024년에 0.7%, 2025년에 2.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물가 하락과 임금 상승으로 2024년에는 가계의 재정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특히 2022년 겨울 이후 전기 요금이 하락하였고, 연료 가격도 세금 감면과 온실가스 감축 의무 완화에 힘입어 하락
 - 상대적으로 약한 경제수요가 지속되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계속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이로 인하여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생기고, 2025년에는 가계 소비와 주택 투자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25년에는 세계 경제 전망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스웨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2024년에도 가계의 이자비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가계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소비 증가도 둔화될 것으로 보임
 - 가계수요 약화와 높은 비용이 주택 투자를 계속 저해할 것으로 전망
- 2024년에 노동시장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
 -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정리 해고와 파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임
 - 2025년에도 노동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
- 정부는 인플레이션 퇴치(Fighting inflation)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음
 - 긴축적인 재정 및 통화 정책, 책임 있는 임금 협상이 결합되어 인플레이션은 하락하였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올해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정부의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통제 노력이 필요
 - 최근 예상보다 높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중동 불안 고조와 같은 지정학적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다시 증가할 위험이 있음

83) 스웨덴 재무부, “Vårbudgeten 2024 på fem minuter,” 2024. 4.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4/varbudgeten-2024-pa-fem-minuter/>, 검색일자: 2024. 4. 16.

84) 스웨덴 재무부, “Regeringen överlämnar 2024 års ekonomiska vårproposition,” 2024. 4. 15.,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4/04/regeringen-overlamnar-2024-ars-ekonomiska-varproposition/>, 검색일자: 2024. 4. 16.

85) 스웨덴 정부 홈페이지, “Den ekonomiska vårpropositionen lämnas till riksdagen,” <https://www.regeringen.se/sveriges-regering/finansdepartementet/statens-budget/budgetprocessen/>, 검색일자: 2024. 4. 16.

<표 23> 주요 수치 전망(2024년 4월 15일)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GDP	-0.2	0.7	2.5	3.2	2.4
고용, 15~74세	1.4	-0.4	0.7	1.3	0.9
실업률, 15~74세 노동률 대비 %	7.7	8.3	8.4	7.8	7.6
CPI	8.5	3.1	0.8	1.6	2.1
CPIF	6.0	2.1	1.7	2.0	2.0
일반정부 재정수지, GDP 대비 %	-0.6	-1.2	-0.3	0.7	1.7
일반정부 총부채, GDP 대비 %	31.2	31.8	31.5	30.0	28.0

주: 1. 2023년은 결과, 2024~2027년은 전망

2.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인플레이션의 가장 일반적인 척도, CPI와 동일한 상품 및 서비스가 포함되는 고정금리 소비자물가지수(CPIF)는 스웨덴 중앙은행인 리クス뱅크(Riksbank)의 통화정책 목표변수로 사용. CPI와 CPIF의 차이점은 CPIF에서는 가계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점이고, 이로 인하여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변동의 영향이 CPIF가 아닌 CPI에만 반영(「재정동향, 2024년 1월호 참고)

출처: 스웨덴 재무부, "Vårbudgeten 2024 på fem minuter," 2024. 4. 15., <https://www.regeringen.se/artiklar/2024/04/varbudgeten-2024-pa-fem-minuter/>, 검색일자: 2024. 4. 16.

-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경기 침체의 영향이 점점 뚜렷해지는 가운데, 경제 회복의 기반을 마련하고 더 높은 성장 및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
- (재정 계획)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장기 재정 계획을 확정
 - 첫째, 인플레이션에 맞서고 가계와 복지를 지원
 - 정부는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동시에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재정정책을 추진
 - 최근의 상황은 인플레이션과의 투쟁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따라서 중요한 과제는 모든 사람의 구매력 회복을 위하여 가계의 구매력 회복을 지원하는 것
 - 둘째, 노동 우선 원칙⁸⁶⁾을 다시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
- 경기 침체 여파로 인하여 2024년 실업자는 4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
- 구직자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훈련 및 교육 계획을 통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함
- 동시에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어야 하며, 특히 일과 자립의 원동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셋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 개혁
 - 오랫동안 높은 성장과 우수한 생산성 향상은 스웨덴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그러나 최근 1인당 GDP 성장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제는 생산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향상시키는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발전에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함

86) 스웨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64세 장기 실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기간이 길어지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취업의 기회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또한 실업률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문 역량을 갖춘 노동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노동자들 사이의 부정적 인식은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한. 2025년 말에는 장기 실업자가 15만명 내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재취업 기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자 함(주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 "스웨덴 노동 시장 동향," 2023. 12. 19., https://overseas.mofa.go.kr/se-ko/brd/m_7989/view.do?seq=1346595&page=1, 검색일자: 2024. 5. 2.)

재정포럼

2024년 5월호 통권 제335호

-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인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편집위원장 원종학(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권성오(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강신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지현(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고창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환(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송경호(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최인혁(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편집간사 장정순(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행정원)
편집·제작 장은정(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전문원)

월간 재정포럼

2024년 5월 17일 발행 / 통권 제335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7 / **E-mail:** pub@kipf.re.kr

값 3,000원

- 월간 『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디자인·인쇄 부운디자인 TEL: 042-255-6225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7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출판팀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재정포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발간물 보호 저작물로 “공공누리 제4유형:
출저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로 만나는
내 손안의 재정포럼